

제 2기 생협아카데미

- 일시 : 2006. 11. 7(화) ~ 12.9(토)
- 장소 : 대전 KTX 역사

주최 : 한국생협연합회

주관 : 한국생협연구소

자 례

일정표	2
개강식 순서(여는 마당)	3
운영 방침	4
수료식 순서	5
노래 악보	6
우리들의 다짐	9
강사 연락처	10
수강생 연락처	11
강의 1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12
강의 2 ————— 나를 알고 사회를 알려면	15
강의 3 —————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	22
강의 4 ————— 한국농업의 현황과 대책	31
강의 5 ————— 지역사회와 생협운동	38
강의 6 ————— 생협의 경영과 사업 그리고 시장과의 경쟁	46
강의 7 —————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53
강의 8 ————— 진보의 시각으로 본 한국사회	70
강의 9 —————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의 형성	75
강의 10 ————— 일본생협운동사, 그리고 세계의 생협	79
참고 도서 목록	104

일 정 표

날짜		시 간	제 목	강 사	비 고
첫째주 (11/7)		10:30-11:00	개강식	인사말 ; 김주숙 소장, 진행 ; 연구소	
		11:00-13:00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김성오(IRC 대표-협동조합 기업)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의 역자	
		13:00-14:00	점심 식사		
		14:00-16:30	나를 알고 사회를 알려면	오현숙(한신대 교양학부 심리)	
		16:30-17:00	참가자 인사하기	오리엔테이션	
둘째주 (11/14)		10:30-12:30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과 한국 경제	정승일(국민대) 「패도난마 한국경제」 공동저자	
		12:30-14:00	점심 식사		
		14:00-16:00	한국농업의 현황과 대책	윤석원(중앙대)	
		16:00-17:00	수강생 자체 토론회	「세계경제의 그림자 미국」 토론	전체
셋째주 (11/28)		10:30-12:30	지역사회와 생협운동	김찬호(한양대 문화인류학)	
		12:30-14:00	점심 식사		
		14:00-16:00	생협의 경영과 사업 그리고 시장과의 경쟁	신성식(도매시장 대표)	
		16:00-17:00	수강생 자체 토론회	「레이들로 보고서」 토론	전체
넷째주 (12/5)		10:30-12:30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조희연(성공회대)	
		12:30-14:00	점심 식사		
		14:00-15:00	수강생 자체 토론회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토론	전체
		15:00-17:00	세상을 보는 관점과 철학적 사고	홍세화(한겨레신문)	
수 련 회	12 /8	16:00-18:00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과 리더십의 형성	박영숙(민우회생협) 중에서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00	다른 나라 생협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일본 생협을 중심으로)	김형미(한국생협연합회, 일본거주)	우 리 생협의 전망과 희 망 함께
		21:00-21:20	휴식		
		21:20-22:30	토론회(사회 ; 오항식 처장)	한국생협 무엇을 할 것인가?	
	9	09:00-10:00	수료식	참가자 전원	

여 는 마 당

때 : 2006. 11. 7 (화) 오전 10시 30분 - 11시

곳 : 대전 KTX 역사 5-A

사 회 : 사무처장 오형석

여는 노래 작 은 세 상 다 갈 이

인 사 말 교장 김주속
(한국생협연구소)

축 사 회장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우리들의 다짐 수강생 대표

운영방침 등 연구소 실무자

닫는 노래 내가 찾는 아이 다 갈 이

생협아카데미 운영방침

1. 자발적 참여 - 모든 수강생은 접수부터 수료까지 스스로 참여하고 움직입니다.
2. 자율적 진행 - 전체 진행과 점검은 연구소에서 하지만 매일 매일의 강의 진행과 사회는 수강생들이 조별로 스스로 진행합니다.
3. 모든 수강생은 100% 출석을 목표로 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교육비(교량비 포함)는 연합회에서 부담합니다.
4. 수강생은 80%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5. 수강생들을 1조에 6 - 7명씩 묶어서 조별로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

1. 수강 전에 해야 할 일
 - 1) 수강생들은 강의 전에 강사의 강의록을 반드시 읽어 옵니다.
 - 2) 강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참고도서를 1권 이상 꼭 읽어 옵니다. (자료집참조)
2. 교육 중에 해야 할 일
 - 1) 교육 자료집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 2) 수강생들은 조별로 1개 이상의 질문을 준비합니다.
 - 3) 개인용 렘을 가지고 다닙니다. 교육 기간 중에 일회용 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일정표를 잘 참조하시어 시간에 늦지 않게 하시고 강의 시작 3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강사님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5) 강의 시간에는 꼭 핸드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6) 교육 기간 중에 요청하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교육 기간 중에 이불표는 꼭 목에 걸고 다시시기 바랍니다.
3. 수강 후에 해야 할 일
 - 1) 강의 평가서는 연구소에서 나누어준 양식에 따라 당일 제출합니다.
 - 2) 수강생 모두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3일 안으로 연구소의 이메일로 A4 1매 (11포인트 기준) 이상의 필기 내용이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2기 생협아카데미 수료식

때 : 2006. 12. 9 (토) 오전 9시 30분 - 10시

곳 : 수련회 장소

사 회 : 사무처장 오항식

여는 노래 바 위 처 럼 다 갈 이

인 사 말 교장 김주속
(한국생협연구소)

축 사 회장 진경희
(한국생협연대)

수료증 전달 수강생 전체

알리는 말씀 사 회 자

닫는 노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다 갈 이

우리들의 다짐

한국생협연합회 회원 조합의 활동가로서 제1기 생협아카데미에 참여한 우리 수강생들은 오늘부터 교육과 훈련이 마치는 날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농업을 살리는 운동 그리고 지역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운동 등을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이렇게 함께 활동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몸방울이 모이고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로 만나서 바다를 이루듯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생협 조합원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태면 쓰러져 가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고 무너진 마을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고 소외 받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 지역에서 생협운동을 하면서 좀 더 폭 넓고 사려 깊은 활동을 하기 위해 생협아카데미에 찾아 왔습니다. 교육 기간에도 옆에 앉은 활동가를 통해서 따스한 인간애와 동료애를 느끼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다른 생협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삶,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생협아카데미에 참여한 우리 수강생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참여하고 움직인다.

하나, 생협아카데미에 참여한 우리 수강생들은 모두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모두 수료한다.

하나, 생협아카데미에 참여한 우리 수강생들은 생협아카데미의 운영방침에 성실히 따를 것을 다짐한다.

2006년 11월 7일

제2기 생협아카데미에 참여한 수강생 일동

2006년 제2기 생협아카데미 강사 연락처

날짜	제 목	강 사	비 고	
11/7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김성오 대표 (IRC 대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의 역자)	전화	011-270-2035
			이메일	ksofive@hanmail.net
	나를 알고 사회를 알 려면	오현숙 교수 (한신대 교양학부 심리)	전화	016-356-0776
			이메일	hyunsookoh@hs.ac.kr
11/14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 과 한국 경제	정승일 교수 (국민대 교수, 『괘도난마 한국경제』 공동 저자)	전화	018-333-2817
			이메일	siyeong11@step1.re.kr
	한국농업의 현황과 대 책	윤석원 교수 (중앙대)	전화	011-766-1728
			이메일	sukwon@cau.ac.kr
11/28	지역사회와 생협운동	김찬호 교수 (한양대 문화인류학)	전화	017-317-5037
			이메일	chan-ho7@hanmail.net
	생협의 경영과 사업 그리고 시장과의 경쟁	신성식 대표 (한국유기농산물도매시장 대 표)	전화	017-315-2295
			이메일	a0sungsik_sin@hanmail.net
12/5	한국사회에서 시민사 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조희연 교수 (성공회대)	전화	2610-4232
			이메일	chohy@paran.com
	세상을 보는 관점과 철학적 사고	홍세화 기획의원 (한겨레신문)	전화	710-0698, 010-9992-0641
			이메일	hongsh@hani.co.kr
12/8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의 형성	박영숙 이사장 (여성민우회생협)	전화	017-740-4645
			이메일	pys923@paran.com
	다른 나라 생협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본 생협을 중심으 로)	김형미 국제팀장 (한국생협연합회)	전화	81-3-3807-0326
			이메일	chleekim@yahoo.co.kr

문의 전화 ; 02-2060-1373, 1374 이향숙 ; 016-9727-8557

제2기 생협아카데미 교육 수강자 명단				
조	지역	지역조합	이 름	연락처
1)	경기지역	남동연수	박수영	0119764-7138
	충청지역	천안생협	김영숙	010-5553-9219
	호남지역	남원생협	김영란	011-9625-8035
	호남지역	남원생협	안상연	019-601-9313
	영남지역	진주생협	민경자	019-204-2688
	직원	생협연대	허미영	010-3959-3422
2)	서울지역	양천생협	남양우	019-298-2323
	충청지역	청주생협	하영옥	016-325-2500
	충청지역	천안생협	배숙선	016-354-3089
	호남지역	익산송리생협	양말희	010-8382-5570
	영남지역	부산동래생협	신명재	010-3066-4308
	영남지역	대구성서	이선희	010-3066-4308
	직원	생협연대	임명구	011-9258-0928
3)	서울지역	강서생협	채미영	010-6408-1165
	충청지역	공주생협	이은주	010-8253-0845
	호남지역	목포생협	손혜정	010-4641-2417
	영남지역	울산남부생협	길경민	010-3071-3937
	영남지역	부산푸른바다생협	윤현숙	011-9585-7730
	직원	생협연대	이동훈	016-668-3458
4)	경기지역	고양일산생협	김진석	016-604-4012
	호남지역	목포생협	김명자	011-9625-4281
	호남지역	전주생협	김신재	011-9629-0769
	영남지역	울산남부생협	이윤단	011-9314-2980
	영남지역	부산푸른바다생협	정은주	011-9934-1876
	직원	생협연합회	허선례	018-262-4561
5)	서울지역	금천한우물	유주희	016-688-8334
	충청지역	청주생협	이나양	011-9843-8643
	호남지역	빛고을서구생협	신선미	010-5081-4042
	호남지역	순천생협	최숙지	010-6767-8402
	영남지역	진주생협	권경희	019-313-0006
	영남지역	부산푸른바다생협	임선희	016-672-4413
	직원	생협연합회	류미래	019-624-2292
			총 32명	

제1강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김성오

(전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1. 협동조합의 시작과 역사

○ 협동조합 출발의 두가지 모티브

- 폭력적으로 진행된 산업혁명과 대안적 사고방식의 형성
- 시장에서의 약자와 시장소외자의 발생과 단결

○ 제1세대 협동조합

- 로버트 오웬(1771-1858), 윌리엄 킹(1786-1865)의 공동체적 실험들과 그 한계
- 자본주의에서의 섬, 생산공동체, 농업공동체, 소비공동체의 전개

○ 제2세대 협동조합

-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 이후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동조합들
- 시장에서 약자들의 단결과 단결을 통한 시장으로의 진입

○ 제3세대 협동조합

- 1980년 모스크바 총회 이후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흐름
- 공격적인 사회운동,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적 기업 내지 협동조합적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출현

2. 협동조합 원칙의 변천과정과 그 합의

○ 초기 협동조합원칙의 형성과정

- 자발적 결사의 내부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
- 초기의 주옥같은 원칙들의 형성
‘이용고 배당의 원칙’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 ‘현금거래의 원칙’

○ 1937년 ICA 15차 파리총회에서의 1차 결집(7대 원칙)

- 가입자유 원칙 (open membership)
- 민주적 관리의 원칙 (democratic control)
- 이용고 배당의 원칙 (dividend on purchase)
-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 (limited interest on capital)
-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 원칙 (political and religious neutrality)
- 현금거래의 원칙 (cash trading)
- 교육촉진의 원칙 (promotion of education)

○ 1966년 ICA 23차 비엔나총회에서의 수정(6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voluntary association and open membership)
- 민주적 관리의 원칙 (democratic control)
- 자본이자 제한의 원칙 (limited interest on capital)
- 잉여금 공정분배의 원칙 (equitable division of surplus)
- 협동조합 교육의 원칙 (cooperative education)
-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1995년 ICA 100주년 총회에서의 재수정(7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voluntary association and open membership)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의 원칙 (democratic control)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율과 독립의 원칙 (autonomy and independence)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의 원칙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concern for community)

3.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 한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의 뿌리

- 전통사회에서의 씨앗들 (두레, 품앗이, 계, 향약)
- 일제시대의 관제 협동조합과 민간협동조합운동
- 광복이후 농협과 농업은행의 진행

○ 516이후 농협의 새로운 전개

- 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
- 수협,축협의 등장

○ 민간협동조합운동으로서의 신용협동조합 운동

- 신용협동조합운동의 탄생과 성장
- 민간협동조합운동의 자양분 형성

○ 생협운동, 노협운동 및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전개

4. 한국협동조합운동의 과제

○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

- 한국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 ?

○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가치전환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

- 세계화 및 양극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
- 선진적인 교육,의료,복지시스템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
- 지속가능한 세계와 삶의 질향상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

제2장

기질 및 성격검사 TCI / JT CI의 활용

나를 알고 사회를 알려면

오현숙
한신대학교

내 용

- I. 도입
- II. TCI/JTCI의 특징
- III. TCI/JTCI의 기질과 성격척도
- IV. TCI/JTCI의 기능
 - 일반적 평가 기능 (기질과 성격의 측정 및 해석 기능)
 - 임상적 기능 (진단과 치료: 임상집단을 위한 기능)
 - 예방적 기능 (일반인을 위한 예방 기능)
- V. 검사의 신뢰도
- VI. 참고 문헌

I. 도입

우리는 이제 '성격'이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격이란 'Personality'에 대한 한국말 개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여기 C.R.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 (Cloninger et. al, 1993)에서 성격이란 'Character'를 의미한다. Personality를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 중의 하나이다. 그 나머지 하나는 Temperament 곧 기질이다.

기질은 체험하는 것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뇌신경세포의 발달 정도와 관계가 있다. 곧 생물학적 개념이다. 설명된 바와 같이 기질은 유전적인 속성이며 일생동안 안정적이다. 잘 변하지 않으며 체험 속에서 습관의 형태로 발달한다. 성격은 체험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관계하는 것으로 자기개념 발달과 관련이 있다.

기존의 성격 모델들은 기질과 성격의 두 개념을 심리측정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구분 측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개념 자체도 구분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성격에 관한 역사적 관점과도 관계가 있다. 성격연구의 오랜 역사 중에 가장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가 천성 대 양육이었다. 즉 성격이 보다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냐 이었다. 20세기 초기부터 중반인 지난 80년대까지 행동주의가 심리학을 지배했을 때는 후자가 절대적이었다. 곧 성격은 백지상태로 태어나 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엔 성격의 유전적인 요인, 곧 기질에 대해선 활발히 연구되지 못했다. 따라서 성격을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된 부분으로 구분 측정할 기본 토대가 없었다. 현재 미국의 성격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근대 이후로 기질을 가장 많이 연구한 H.J. Eysenck (1967, 1970)는 인성의 생물학적 측면을 연구하고 기질 연구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마저도 기질과 성격을 잘 구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아예 기질 개념을 사용해야 할 자리에 Personality 개념을 사용했다 (Kohnstamm, 1989). 즉, 기질이란 개념은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한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Personality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기질과 성격이 자주 혼용되어 왔고 우리는 Personality라는 영문 개념을 단순히 성격이라고 번역했다. Personality를 인성이라고 번역한 기존의 개념에도 기질과 성격이 구분되어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R. Cloninger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의한 Personality 개념은 최초로 기질과 성격을 심리측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성 특성 중에서 타고난 부분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부분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인성 특성 중 타고난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다스릴 것인지 안다는 것이다. 또한 타고난 부분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성격 발달의 기본 토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II. TCI/JTCI의 특징

TCI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성인용)와 JTCI (TCI의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 및 대학생용)는 R.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성격발달 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인성검사이다. Cloninger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심리생물학과 성격심리 연구를 주도하며 80년대에 정신질환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발표했다. 그의 인성모델은 발달심리, 성격심리, 생리학, 약리학에 기초를 둔 12년간의 종단 연구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한 검사가 성인용 TCI (Temperament Character Inventory,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이며 유아용 (3-6세), 아동용 (7-11세), 청소년 (12-18세) 및 대학생용의 총 3개의 형태는 JT CI이다.

TCI/JT CI의 특징은 기존 성격 검사들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Eysenck의 성격 모델 (1967, 1970)이나 Costa와 McCrae의 Big Five와 같은 기존의 성격 검사들이 제시하는 성격 유형은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성격 특질들을 신체물리적 또는 환경적 영향 요인과의 관계 없이 단순히 통계적 요인 분석에 의하여 최소한의 숫자로 나타내고 유형별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론적 성격 검사들은 성격의 생성과 발달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성격 유형으로 나뉜 현상적으로 나타난 성격 특질은 유전적으로 이질적인 요인들이 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격의 현상적인 표현형질(phenotype)과 유전형질(genotype)과의 혼용이 일어난다. 즉 요인 분석으로 나뉜 성격특질에는, 생물학적으로 규명되는 우리 뇌의 행동조절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행동 방식들이 서로 동시의 행동으로 표현됨으로써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Cloninger와 그의 동료들의 성격 모델은 성격으로부터 타고난 기질을 구분함으로써 극복했다.

저자는 기질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행동의 세가지 근본적 기능, 즉 '행동 활성화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행동유지 (Behavioral Maintenance System: BMS)' 그리고 '행동억제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를 조종하는 신경생물학적 시스템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분히 유전적이며 전 생애를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진다. 이 기질 차원이 바로 성격발달의 재료가 되며 성격은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발달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성격은 개인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개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가를 포함하는 자기 개념 (Self-concept)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다. 성격은 기질이라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으며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저자는 오랜 동물실험 연구를 통해서 행동조절시스템에 나타나는 개인차, 즉 기질을 행동조절에 우세한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물질시스템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또한 Gray (1982, 1987)의 이론을 수용하여 기질과 관련된 뇌영역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세가지 상위 기질 차원 중 '자극추구'는 위에서 언급된 BAS에 해당되며 이것은 보상신호에 대해 민감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자극 (self-stimulation)과 관련된 구조, 내측 전뇌 신경섬유 (Medial forebrain bundle) 및 외측 시상하부 (lateral hypothalamus)가 관계 되며 신경전달물질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AS와 관련해서 접근 (Approach) 또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신경구조도 또한 확인되었다. 변연계 (The limbic system)가 보상과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특수 순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기질 차원인 '위험회피'는 BIS에 해당되며 능동적 회피가 아닌, 수동적 회피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다. 또한 벌 및 무보상 신호에 대해 반응한다. 신경구조로는 ARAS (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 안와전두피질 (orbital frontal cortex), 내측중격 영역 (medial septal area) 및 시상하부 (Hypothalamus)와 관련되고 신경전달물질로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중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질 차원인 보상의존성은 BMS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보상된 행동은 계속되는 강화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행동 유지 시스템이다. 이 보상의존성은 신경전달물질인 노어아드레날린의 방출에 대한 전두엽 신경다발의 포스트-시냅스의 민감성과 관련된다. 즉, 높은 보상의존성은 낮은 노어아드레날린 활성력과 전두엽의 높은 신경밀집도와 관련이 있다. 일련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Cloninger는 이 세 번째 기질 차원인 보상의존성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존성 차원과 지속 능력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Cloninger 등, 1994), 이 지속능력을 기질의 네 번째 차원으로 인내심 (persistence)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Cloninger et al의 기질은 유전적으로 단일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바로 성격발달의 기본 토대인 생물학적인 바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Cloninger et al의 성격 모델은 첫째, 성격발달의 근간을 알 수 있게 하고 둘째, 형성된 성격에 대한 기질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해석할 수 있게 하며 셋째, 향후의 성격 발달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기존의 성격 검사들과 구별되는 TCI/JTCI의 특징이다.

기능적으로는 TCI/JTCI는 기질과 성격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일반적 평가기능과 이를 통해 성격과 인성장애를 진단하고 치료에 이용하는 임상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 기질 및 환경의 영향을 구분하고 더 나아가 향후의 성격발달을 예측함으로써 자라나는 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성격의 발달적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고 성숙하고 통합적인 성격 발달로 도와줄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다.

II. TCI/JTCI의 기질과 성격척도

TCI/JTCI가 구분하는 기질의 상위 차원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자극추구 (Novelty Seeking), 위험회피 (Harm Avoidance), 보상의존성 (Reward Dependence) 그리고 인내력 (Persistence)으로 나뉜다. 자극추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 신호 또는 벌을 회피하기 위해 활성화되는 행동시스템이다. 손해회피는 벌의 신호와 보상 부재를 통해 억제되는 행동 시스템이다. 보상의존성은 원래 보상된 행동은 계속되는 강화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행동 유지 시스템과 관련된다. 인내력은 보상의존성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존성 차원을 제외하고 지속 능력만으로 구성된 차원이다.

성격의 상위차원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자율적인 존재로서, 사회의 한 일부로서 그리고 우주의 한 일부로서 보느냐에 따라, 세 척도로 구성되었다. 즉 자기 조절력 (Self-Directedness), 연대감 (Cooperativeness), 자기 초월 (Self-Transcendence)로 나뉜다. 이 총 7개의 성격 및 기질 차원에는 한국표준화가 완성된 JTCI의 경우 전체 26개의 하위 성격 및 기질 차원이 포함된다.

다음의 표1은 JT CI의 각 척도 별 문항 수 및 그 구성 내용을 나타낸다.

표1: 기질과 성격 척도의 구성

	척도 이름	문항 수	하위 척도 이름	문항 수
기 질 척 도	자극 추구(NS)	14	NS1 : 탐색적 흥분/ 관습적 안정성	3
			NS2 : 충동성/ 심사숙고	4
			NS3 : 무절제/ 절제	3
			NS4 : 자유분방/ 질서정연	4
	위험 회피(HA)	13	HA1 : 예기불안/ 낙천성	3
			HA2 :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3
			HA3 :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5
			HA4 : 쉽게 지침/ 활기 넘침	2
	사회적 민감성(RD)	9	RD1 : 정서적 감수성	2
			RD2 : 친밀감/ 거리 두기	5
			RD3 : 의존/ 독립	2
	인내력(P)	8		
성 격 척 도	자율성(SD)	14	SD1 : 책임감/ 책임 전가	3
			SD2 : 목적 의식	3
			SD3 : 유능감/ 무능감	4
			SD4 : 자기 수용/ 자기 불만	4
	연대감(C)	14	C1 : 타인 수용	3
			C2 : 공감/ 둔감	2
			C3 : 이타성/ 이기성	3
			C4 : 관대함/ 복수심	3
			C5 : 공평/ 편파	3
	자기 초월(ST)	10	ST1 : 창조적 자기망각/ 자의식	2
			ST2 : 우주만물과의 일체감	4
			ST3 : 영성 수용/ 합리적 유물론	4

III. TCI/JTCI의 기능

-일반적 평가 기능 (기질과 성격의 측정 및 해석 기능)

TCI/JTCI는 다음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일반적인 평가기능을 나타낸다.

- 어떤 성격구조를 나타내는가? (성격 차원 분석)
- 어떤 기질 유형을 나타내는가? (기질 차원 분석)

-임상적 기능 (진단과 치료: 임상집단을 위한 기능)

다음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TCI/JTCI는 임상적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격장애를 나타내는가? 또는 정신질환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2. 성격장애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유형의 성격장애를 나타내는가?
3. 비성숙의 성격발달에 작용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가? 기질과 환경 중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가? (성격 차원과 기질 차원의 비교 분석)

-예방적 기능 (일반인을 위한 예방 기능)

TCI/JTCI는 다음의 질문에 관계함으로써 일반적 평가 및 임상적 기능 외에도 방적 기능을 나타낸다. 이 경우는 성격의 성숙도를 통하여 매우 또는 비교적 성숙한 성격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 성숙한 성격 발달이 보다 환경의 영향인가? 아니면 보다 기질의 영향인가?
2. 계속되는 성숙한 성격발달을 위해서 어떤 기질적 장점이 더욱 발달하고 또한 어떤 기질적 단점이 극복되어야 하는가?

IV. 검사의 신뢰도

검사의 신뢰도는 한국 JTCI (오현숙, 민병배, 2004)의 경우 Cronbach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보았을 때, 중학생의 경우 0.63-0.81, 고등학생의 경우 0.66-0.81, 대학생의 경우 0.64-0.84로 각각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검사 신뢰도는 38명의 고등학생에게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해보았을 때 0.81-0.95 범위의 계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문헌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주) 마음사랑.
- Cloninger, C.R., Przybeck, T.R., Svrakic, D.M., & Wetzel, R.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Eysenck, H.J.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Eysenck H.J. (197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3rd ed.). London: Methuen.
- Gray, J. A. (1982).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y, J. A. (1987). Perspectives on Anxiety and Impulsivity: A Commentary. *J Res*

Personality, 21: 493-509.

Konstamm, G. A. (1989).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Kohnstamm G.A., Bates J.E., Rothbart, M.K.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New York: Wiley, S. 484-508.

방비된 세계화

-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 -

정승일 (국민대 겸임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시장개혁'과 경제구조 재편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급진적인 경제구조 재편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즉 과거의 '박정희식 모델'이 외환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자유주의적(liberal) 입장이 정부와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유시장(free market)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주도형', '대외개방형' 경제구조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담론이 보수와 개혁진보를 막론하고 하나의 합의로써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시장개혁은 '4대개혁'의 형태를 띠었는데, 재벌개혁(기업지배구조개혁),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4대 개혁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선언된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 경제 규범의 도입이었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 양면에서 모두 관철되었는데,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공기업 민영화가 자본시장 유연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노동시장 역시 유연화 원칙에 따라 개혁되었다.

특히 자본시장 완전개방과 결합된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적대적 M&A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capital market) 중심의 기업지배 원칙(즉 주주자본주의) 확립, 은행을 대체하는 자본시장 주도의 기업금융 권장,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매각과 영업방식의 미국화, 그리고 공기업 주식 분산매각을 통한 민영화 등을 통해 달성되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한 전면적 규제완화(탈규제)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가 '관치금융' 비판 분위기의 와중에서 해체되었다.

경제구조의 시장화와 개방화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2005년 봄 자신을 시장주의자, 개방주의자로 자처하는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직후 첫 작품으로 '선진통상국가' 모델을 선보이면서, 금융·기업경쟁·노동 등 각 부문에서 전면적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 국내산업 해외이전 촉진과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 개방친화적 사회복지기반 및 농업기반 구축 등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현재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주도로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다.

2. 시장개혁의 결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성

이와 같은 시장개혁이 경제구조를 한층 선진화시키고 더욱 효율화시킬 것이라는 정부와 관련연구자들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실은 오늘날 한국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출증가율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부진과 내수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백조원의 부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등 투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많은 중소기업들과 많은 대기업, 증권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곤란에 빠져있다.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등 소수의 우량 대기업들이 사상최대의 흑자와 함께 급격하게 설비투자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대기업, 증권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부진과 함께 중국과의 국제경쟁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며 중국으로 공장과 설비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양극화가 일어나고 기업들은 장기투자를 꺼리는가?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견해는 대내외적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에서 찾는 의견이다. 즉 친분배, 친노동, 반기업적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및 사회분위기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차라리 중국 등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견해는 재벌개혁 등 '시장개혁'의 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수주주권 강화 등 재벌개혁과 노동시장개혁, 금융제도 선진화 등 지금까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더욱 강화하는 '철저한 시장개혁'만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셋째 견해는, 그리고 이 글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의견은, 위 두 가지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1998년 이후 도입된 새로운 앵글로-아메리칸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s)이 '구조적'으로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스템은 국제학계에서 영미형 자본시장 중심형 체제(capital-market based system)라 불리는 것으로 급진적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공식 경영목표로서 내거는 있는 '주주중시경영'에서 잘 나타난다. 투자자들 특히 주식투자자들이 기업 및 금융기관의 행동을 좌우하는 현상을 서구학자들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혹은 주주가치 자본주의(shareholder value capitalism)이라고 부른다.

주주자본주의 방향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그리고 은행 및 제2금융권 개혁의 결과 자본시장이 - 게다가 대외적으로 개방된 자본시장이 -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기업지배)과 자금조달방식(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강화와 적대적 M&A 활성화를 축으로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결과 투자자, 특히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투자의사결정(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그리하여 기업들의 장기투자가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사이에, 성장업종과 비성장업종 사이에,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부채 감축과 함께 추진된 금융개혁은 은행권의 산업여신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해외매각과 은행 주식에 있어 외국인 비중 증가는 은행들의 '주주증시 경영'과 단기수익성 지상주의를 낳았다. 이는 지나치게 혹독한 금융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규제와 결합되어 은행들로 하여금 위험한 산업여신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저리스크 영업에 몰두하게 하여 부동산시장 투기를 조장하였다.

오늘날 기업지배구조를 좌우하는 개방된 자본시장은 기업 경영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주주이익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리하여 기업들은 이제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 상황에 처해 있다. 무모한 투자를 유도한다고 비판받은 과거의 기업집단-은행-정부간 투자리스크 분담 체계, 즉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상황이 개혁의 결과 무너지고 각 기업들이 모든 투자리스크를 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투자에 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지 자체가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설령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가진 경우에도 계열사와 은행, 정부 등으로부터의 외부자금 유입이 매우 어려워졌다. 따라서 기업들은 외부자금 보다는 내부자금에 의존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자금 여력은 기업들의 수익성 격차에 따라 크게 양극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업간의 수익성 양극화 -> 투자양극화의 악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지 약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익성 및 내부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업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업종들 사이에 수익성 및 내부자금 양극화 -> 투자의지 양극화 -> 투자의 양극화 -> 기술능력 등 경쟁력 발전의 양극화 -> 수익성 양극화라는 악순환의 양극화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지난 30년간의 노력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과 브랜드를 획득하고 그리하여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높은 극소수 글로벌 대기업들에는 자본시장 투자자들 및 은행의 관심이 몰리고 그들 스스로도 높은 우량한 수익성과 누적현금을 기초로 한 기술혁신투자 및 설비투자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대기업들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에는 자본시장 및 은행의 지원도 없고, 그들 스스로도 장기투자를 향한 의지도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있어 투자둔화 현상이 심각하며, 그리하여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업종이 주도하는 미래투자 현상이 더욱 더 현저해지고 있고,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삼성공화국" 논란으로 집약되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해지고 동시에 전자/IT 등 소수의 수출업종에 대한 의존도 심화,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의존도 심화에 따라 미국 등 수출시장의 환경변화에 연동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앵글로-아메리칸형 금융구조의 정착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그에 따른 4백조원의 시중부동자금, 이것의 부동산 혹은 주식시장 유입 등 투기자금화 역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낳고 있다.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막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증시 유입과 이탈 현상 역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낳고 있는 요인인데,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은 기업들의 투자환경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투자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서민과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에 노출되고 현금흐름, 재무증시 등 미국식 경영관행 조직절차를 대거 도입한 된 대기업들은 단기수익성 확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 절약과 하청단가 절약 등에 나서고 있는데, 그 결과는 비정규직 및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증가와 삶의 위기로 나타난다. 내수업종 중소기업들은 증산충 및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로 인해 매출부진의 타격을 받고 있고, 매출이 원활한 수출업종 하청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역의 전면개방에 따른 산업과 농업의 공동화(空洞化) 위기도 심각하다. WTO 체제와 한미FTA로 인한 농업과 농민의 위기, 그리고 중국 및 북한으로의 저임금 기업/업종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상실의 위기도 현저하다.

대외적 개방만을 고려할 경우,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미국을 위주로 한 금융상의 도전으로 그것은 주주자본주의의 부상과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 강화, 금융과 산업간 분절(分節) 현상과, 금융/자본시장 및 자산시장 불안정성 심화 등의 문제이다. 둘째는 중국을 위주로 한 무역 및 산업상의 도전으로, 그것은 저임금 기업/업종에서 대한 임금압박 혹은 해외이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유럽 강소국의 경험과 교훈

대외적 개방화와 시장화가 초래하는 이 모든 심각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2005년 11월 APEC 회의를 주최하면서 한국이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물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문은 위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화의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물결에 우리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지, 차라리 세계화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세계화 물결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는 않은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면, 그리고 어떤 '대안적 세계화' 혹은 '관리된 세계화'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나는 무장해제식의 '무방비적 세계화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무대안적 반세계화론'도 우리 처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비된(무장된) 세계화' 혹은 '관리된 세계화'가 우리 경제사회가 가야할 '대안적 세계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 강소국의 경험은 '방비된 세계화'의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강소국의 성공비결을 논한 Peter Katzenstein의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1985)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필요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하지만 개방경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변동과 충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항상적인 대내적,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경제들은 국제협상력이 약해 충격의 비용을 외국에 전가하기 힘들다.[#] 넷째, 그에 따라 이들 작은 경제들은 대

물론 그렇다고 이들 작은 나라들이 모든 국제협상에서 미리 강대국에 설설 기는 '항복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모두 과거 NATO에 가입하지 않은 중립국으로서 미국과 소련에 당당하게 맞서 독자외교를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대해서도 결코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뜻대 있는 외교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외협상은 미국 등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미리부터 항복하는 정신적 사대

외적 개방을 일정 수준 불가피하게 수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내적 충격과 불안정성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할 대내적 기제(mechanism) 혹은 제도들(institutions)로 무장하여 세계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는 적절한 방비책을 확보하고 있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친 산업화시기에 작은 국내시장으로 인하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유럽의 강소국들은 엄격한 무역보호주의를 채택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인구가 많은 유럽의 강대국들(프랑스, 독일, 러시아)은 넓은 국내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 19세기에 자유무역 등 자유시장(free market)을 요구하던 영국에 맞서 - 무역 및 금융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주의를 채택할 수 있었다.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넓은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자국의 금융과 산업을 보호하는 강한 보호주의를 유지했는데, 그러다가 자국의 산업과 금융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점부터야 타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게 된다(장하준, 『사다리 건너가기』(2004) 참조).

오늘날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미국 모델에는 대외개방이 있을 뿐, 대내적 조절기제의 개념과 이론이 없다. 군사적, 금융적, 상업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전할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광활한 국내시장이 존재하여 수출의존도가 매우 낮고 더구나 금융적 패권국가(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인 미국 모델은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금융종속의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에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은 유럽의 강소국들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넓은 잠재적 국내시장을 가진 중국이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과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작은 경제인 우리나라가 모방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무역규모 5천억 달러와 전자, 조선, 철강 등 다양한 업종구조 등 경제와 산업의 절대 규모만 고려하여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강중국(強中國)을 모델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강의 경제·정치 대국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같은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유사하다.

유럽의 강소국들은 인근 강대국들(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로부터의 외교적, 군사적 침략의 경험과 함께 경제적, 금융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점령당했으며 핀란드는 과거의 식민모국인 러시아로부터의 재침공을 경험했다. 스위스와 스웨덴은 간신히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는데, 스웨덴의 자본-노동간 대타협이자 일종의 대내적 조절기제라고 할 수 있는 잘츠요바덴 “사회적 합의” 모델이 일어난 1930년대 말은 나치독일의 유럽침략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렇듯 유럽의 소국들의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군사적, 외교적 독립과 경제적, 금융적 독립과 번영을 누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수출주도형 무역국가로서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럽의 강소국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있다. 또한

주의의 전형인데, 이러한 저자세는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어 최근의 한미FTA 협상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宿命적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세계 최강 대국들로부터 잠재적, 현재적인 정치·외교적, 경제·금융적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럽의 강소국들과 동일한 숙명에 처해 있다.

4. 대내적 조절장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그렇다면 유럽의 강소국들은 어떤 대내적 조절장치들로 무장하여 세계화에 따른 위험과 불안정성에 대해 방비하여 왔는가를 보자.

먼저 노동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보육, 노후, 의료,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율과 함께 조세를 통한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높은 적극적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가 단지 '분배'만으로 끝나지 않고 높은 '성장'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실업부조와 함께 질높은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적극적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정책'을 통한 질높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적 서비스부문(보육, 양로, 의료, 교육)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연대임금(비정규직 차별 제한)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본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자국기업 기업지배권의 불안정화에 방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지배권 방어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스웨덴과 스위스, 핀란드 등 모든 유럽 강소국들이 1주10표에서 1주1000표에 이르는 차등의결권(multiple voting rights)을 허용하는 상법을 가지고 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 1주1표) 또한 한국의 재벌그룹과 동일한 피라밋형 기업집단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신탁회사 위탁형 주식과 등기부 주식 발행과 소유권 이전 규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권 희석화와 대외적 위협에 방비하고 있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기업-은행간 지분 교차 소유 역시 이들을 '알프스의 요새'로 만들고 있다. 그 밖에도 이들 유럽 강소국들은 유럽 연합(EU) 출범에 따른 경제·금융 통합과 정치적, 군사적 통합의 조류 속에서도 자국의 경제·금융적 독립과 정치·군사적 독자성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어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11월의 부산 APEC 회의에서 참여정부는 별다른 대내적 조절기계 혹은 방어장치들도 없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선언했다. 물론 유럽의 강소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FTA 추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처럼 무방비적으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재벌들과 일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은 그 수혜자가 되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수많은 업종(농업과 서비스업 포함)과 기업들(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은 그로 인해 대책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많은 기업과 업종의 도산과 실업자 발생, 산업 공동화 문제 발생, 농업과 농민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과 생활수준의 하향평준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와 같은 대외개방이 서비스업과 농업 등 경쟁력 취약업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질 좋은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그 말이 맞더라도, 그것은 저절로, 즉 개방된 자유시장(free marke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개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주의(interventionism)가 없다면, 이를 통해 마련되는 적극적인 조절장치 마련이 없다면,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방비된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이념의 대전환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방주의 혹은 시장주의(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 혹은 사회적 개입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내적 조절기제를 통해 한미FTA와 중국과의 FTA가 초래할 상시적 실업자 발생과 상시적 기업/산업(농업) 구조조정, 상시적인 업종(농업) 고도화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과제를 해결 할 것인가? 유럽 강소국의 경험은 (1)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즉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로)과 함께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실업보험 대폭 확대 및 기술/직업 훈련 체제의 전면화, 그리고 (3) 적극적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기초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육성을 통한 '지식기반 사회화'와 고임금/고속련 일자리 창출 및 산업/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기술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사회적, 과학적, 문화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서비스업(서비스업의 발전을 특히 재경부가 강조하는데)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또한 상시적 산업/기업(농업) 구조조정과 업종고도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고도화를 이끌어 나가는 금융시스템 창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과 같은 앵글로색슨식 금융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미국식 해법은 주주자본주의적 해법이고, 그것은 바로 론스타와 카알라일과 같은 구조조정 사모펀드에 의한 무자비한 단기수익추구와 이를 위한 자산해체·매각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있어 상시적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업종고도화/과학지식화를 금융시스템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생태환경 농업을 포함한) 미래성장 산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속적 산업금융과 투자를 담당할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전제로서 금융기관 해외매각 제한과 함께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비민영화 은행을 주축으로 이들을 장기적 투자자 및 여신제공자로 육성하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유럽의 지방공공은행 등을 모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기업집단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현재와 같이 소수주주권 강화 및 적대적 M&A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유럽강소국들에서와 같이 차등외결권의 도입과 함께 5%를 강화 등 다양한 적대적 M&A 방어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안정화시켜주고 그대신 이들 재벌그룹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장하준의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과 장하준/정승일의 『왜도난마 한국경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국가 모델은 ‘과거지향적’이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주의(가령 산업정책) 역시 WTO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WTO 체제에서도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적극적 과학기술정책은 가능하다. 이런 정책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일부 시행하였으며 북유럽의 강소국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시행하고 있다. 즉 한국경제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발전국가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개입주의 국가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주주가치’를 내세운 소버린의 적대적 M&A 공격에 직면하여 우호적인 국내여론과 종업원 여론, 그리고 우호적인 협력기업과 관련회사들의 지원으로 기업지배권(경영권)을 지킨 SK그룹은 최근 ‘주주가치’에 대항하는 ‘행복가치’를 경영목표로 내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사회공헌활동을 조직하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SK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그러한 모습이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게 하지 않고 제도화, 지속화되고 나아가 더욱 심화되도록 사회적,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KT&G에 대한 미국 칼 아이칸의 적대적 M&A의 공격은 그간 진행되어온 기업지배구조 개혁 및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시대, 월스트리트의 세계지배의 시대에 과연 민주세력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투자와 금융의 자유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할 것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무방비의 금융시장 개방 및 기업지배시장(적대적 M&A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무방비의 무장해제식 개방이 초래할 재벌해체와 적대적 기업사냥의 전면화 등 파멸적인 결과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그리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이미 글로벌 펀드자본(기관투자자들)들에 의한 국내 자본시장 장악과 주주가치 요구는 소수의 글로벌 우량기업/업종들과 대다수 비우량기업/업종로의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 현상과 장기투자의 양극화, 금융시장의 산업여신 축소와 가계/주택 여신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투기화, 기업들의 단기실적주의 상시화 등의 문제를 극복을 낳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와 금융의 세계화” 물결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대외적으로 폐쇄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도 대내적으로 단단한 조절장치 혹은 방어무기를 마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럽강소국들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차등의결권과 우리보다 훨씬 강한 5% 룰을 도입하며, 국제적 투자자들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형태의 기업집단(corporate group)을 용인하고 재벌들의 지주회사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보완입법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여전히 존재하는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5. ‘방비된 세계화’, ‘방비’가 중요한가 ‘세계화’가 중요한가?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들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동시에 한미FTA의 병행추진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방침은 언뜻 보기에는 ‘방비된 세계화’의 구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정책의 기초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확충하는

[#] 자본시장 대외 개방과 결합된 주주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금산분리)과 같이 얼핏 보기에 진보적으로 보이는 (과거 방식의) 재벌규제마저도 결국은 적대적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SK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2002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소버린의 적대적 M&A 공격을 받았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및 지분강제매각(금산분리법) 역시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 공격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문제는 과연 그러한 적대적 M&A 위협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여부일 뿐인데,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등은 그러한 위협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개입을 통해 '관리'할 수만 있다면 한미FTA와 같은 급격한 대외개방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방비 혹은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수긍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유럽강소국의 경험과 그리고 '관리된 세계화'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세계화와 동시에 방어책 마련의 병행추진이라는 (추상적 혹은 일반적)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데서 발생한다. 즉 '시간'과 '준비수준'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미FTA와 사회양극화 해소는 결코 병행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먼저 한국경제는 이미 개방될 대로 개방되어 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내걸은 '세계화' 정책,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내걸은 '글로벌 스탠다드' 구호에 따라 한국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 수준에서 자국의 경제력 및 사회적 능력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방비의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이 지금 기업/산업간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 거시경제적 및 금융적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방화, 시장화라기 보다는 기존의 개방화, 시장화가 초래한 위험과 도전에 맞설 대내적 조절장치들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만도 우리 사회는 오랜 논의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적극적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를 위한 조세개혁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는 향후 5년, 10년에 걸친 격렬한 사회적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적대적 M&A의 바람직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배권(경영권) 방어장치 문제 마련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는 벌써부터 보수와 진보로 가르기 힘든 매우 혼란스런 논쟁구도를 보이는 형국이며,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바젤2 등 새로운 은행건전성 규제와 이에 맞설 다양한 방안들, 지방공공은행 설립 등 새로운 금융제도의 마련에도 오랜 토론과 제도도입 및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대내적 조절장치와 제도들을 도입하는 데는 지난한 사회적, 정치적 논쟁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한미FTA 시행으로 인한 파괴적 위협은 즉각적이다. 그야말로 약을 준비하기에도 전에 병을 악화시키는 꼴이다.

한미FTA를 비롯한 새로운 세계화 조치는 그리 급하지 않다. 그보다 훨씬 급한 것은 지금 이미 기존의 세계화, 시장화 조치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서민과 민중의 삶을 치료하는 일이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양극화되는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에 대처하는 적극적 정부개입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 2년간 사회양극화 해소에 전력해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다. 아울러 한국의 개혁진보세력 전체가 향후 5년, 10년간 대내적 조절장치에 대한 상상력의 동원과 그에 대한 논쟁과 토론에 전력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이다. 발상과 정책의 전환,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쌀, 농업, 농촌,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우리 국민들은 온통 혼란스럽다. 1993년 우르과아(Uruguay)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10여년 동안 42조원의 자금을, 농특세로 15조원을 투입하였고 노무현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의 거액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왜 연일 생명을 버려가면서 까지 저항하는 것일까.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하여 충분히 소득을 보상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농민들은 쌀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을까.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웠다 하는데도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를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가 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또한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WTO체제하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적용시키려 하는데서 오는 갈등이다. 정부는 WTO체제가 강조하는 '개방'이니, '시장'이니, '경쟁'이니 하는 것들을 농정의 기조로 하려는데 반하여 농민들은 WTO체제하에서도 가능한 '소득보조'나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서 오는 괴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농업, 농촌·농민문제에 대한 전환기적 인식의 결여이다. 경제개발과정에서 농촌은 도시(독점)자본의 노동력 제공처이자 상품시장이었으며, 농민은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농업은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성장의 디딤돌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농촌은 해체되어 가고 있고, 농민은 경쟁력이 없는 집단으로 매도되어 하강분해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농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에 따라 열위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민주체의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농정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은 개방화, 세계화라는 강대국의 논리 앞에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도 선진국은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투자에 의해 농업, 농촌이 유지되는데 반해 그럴 재정적 능력과 의지가 없는 대부분 후진국의 농업, 농촌은 해체적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공동체의 위기로 연결되고, 식량안보는 물론 식

량주권의 확보마저도 어렵게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며 결국 국토와 환경의 황폐화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제 쌀 농업마저 무너지면 우리의 농민, 농촌, 농업이 무너진다는 절박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에 대한 실망이다.

농촌에 사람이 없어 장기적으로 공동화와 파폐화의 우려가 높음에도 문제의식이 미약하다. 농촌의 인구 과소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2천명 미만의 읍면 개수는 1985년에 9개, 1995년에 97개, 2005에 333개, 2010년에는 470개로 늘어날 것으로, 인구 1천명 미만의 읍면 개수는 1985년 2개, 1995년 10개, 2005년 46개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09개소로 늘어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성주인, 2002). 농촌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어 농가경영주 중 60세 이상이 약 60%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후계인력의 문제가 심각하다. 과연 앞으로 누가 농촌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할 심각한 전환기임에도 우리사회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이러한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본질과 전환기적 인식 없이 돈 몇 푼 집어넣으면 할 것 다 했다고 외쳐 되는 정부와 우리사회의 한심한 문제인식이다. 개방과 시장과 경쟁력 제고만을 강조하는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개방화의 과정에서 농업,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을 오도하는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과 가격경쟁력제고정책의 오류

우리는 흔히 UR이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하여 그 기간동안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쌀의 경우 수매가격을 떨어뜨려 쌀 가격을 낮추어야만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수매가격을 오히려 높여 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국회)이 농민들 눈치 보느라 수매가격을 낮추지 않아 경쟁력제고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잘했는데 온통 정치권이 잘못하여 이지경이 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 한다. 그런데 정치인은 당연히 선거권자인 농민을 의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정치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책임을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 즉,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쌀값을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일견 매우 타당한 정책목표로 보이나 위험한 발상이다. 국내쌀가격이 중국쌀 가격보다 500-600%가 높은 상황에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야 경쟁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DDA협상결과에 따라서는 400%이상의 고율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생산비와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 뻔한데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경쟁력제고는커녕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가격경쟁력제고라는 환상에 사로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실패와 부채의 압박

‘잃어버린 10년’은 수매가격을 낮추어 쌀값을 떨어 뜨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규모화, 전업농화를 통한 구조개선사업과 가격경쟁력제고라는 미명하에 투입된 자금이 대부분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농가경제를 파탄 일보 직전으로 빠뜨린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UF)협상이 타결된 1994년에 농가소득은 2,032만원, 부채는 789만원으로 부채비율이 38.8%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농가소득은 2,90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반하여 농가부채는 약 1,900만원이 늘어난 2,689만원으로 부채비율은 92.7%에 달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10년간 900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을 비교해 보면 1994년의 농가소득(2,032만원)은 도시근로자소득(2,042만원)과 거의 같은 99.5%에 달하였으나, 2004년에는 농가소득(2,900만원)이 도시근로자 소득(3,736만원)의 77.6%수준으로 떨어져 도시와 농촌 가구의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젊고 규모가 농가일수록 부채규모가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농가의 전체 부채액은 약 30조원정도로 이중 약 20조원은 정책자금이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고 약 10조원은 고리채인 상호신용자금에 의한 부채로 파악되고 있다. 정책자금에 의한 부채는 정부가 이자율을 3%에서 더 낮춘다든지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호신용자금에 의한 부채는 별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6조원의 악성부채는 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119조와 규모화 정책의 오류

정부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할 것이며, 우선 2008년까지 50조5140억원을 투융자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대규모화를 유도, 2013년엔 평균 6ha를 경작하는 쌀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의 50%를 맡도록 하고, 농가 1인당 소득이 도시민보다 5% 정도 많아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정부의 중장기 농정방향을 보면 정책의 기초가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제고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소득안전망장치를 통하여 보전하고,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하여 경쟁에서 뒤지는 중소규모의 농가나 농민은 퇴출을 유도한다는 패러다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투융자계획과 정책 방향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이 정도의 투융자액이 과연 획기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농림부의 예산만 하더라도 연간 약 8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연간 예산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하더라도 약 85조원이 되며 거기에다 각종기금만 하더라도 10년이면 약 70조원에 이르러 예산과 기금을 합치면 155조원에 이르는데 119조원이라는 액수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

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액수가 엄청난 것으로 인식하고, 농업부문에는 허구한 날 퍼붓기만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 10년간의 경험에서 실패한 정책인 규모화와 전업농 정책을 앞으로 10년간 또 시행한다는 것은 한국농업, 농촌을 머지않아 절반밖에 남지 않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쌀 정책의 핵심으로 6ha 이상 되는 대농 7만 호를 기간 안에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10여년 이내에 이 목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과 6ha 이상의 대농이 농사짓는 면적이 50만ha라면 앞으로 10년후에 논 면적이 80만ha 정도 된다면 약 30만ha의 논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100만 호에 이르는 농가중 대농을 제외한 90만여호의 농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소홀하다는 점이 쌀 농업을 포기하거나 절반만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결국 대농과 엘리트 농업인만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이들만 지원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서는 한국농업, 농촌은 머지않아 절반밖에 남지를 못하거나 해체될지도 모를 일이다.

양정 전환 시기의 오류에서 온 예상된 혼돈의 해, 2005년

2005년은 쌀 비준과 양정전환에 따른 혼돈의 시기였고 4명의 농민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저항했던 한해였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근본원인의 제공자가 바로 정부라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2004년은 쌀 재협상이 진행되었고 2005년은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의 비준 논란도 불을 보듯 자명했다. 사회전체가 혼란의 와중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삼척동자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수매제도를 용감하게도 2005년부터 중단했다. 모르면 용감해 질 수 있다고 했던가. 쌀 비준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기도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을 수매제도마저도 바꾸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실시하던 약정수매제도는 UR협상이후 수매자금이 연간 750억원씩 삭감되어 수매물량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어찌되었던 현 상황에서 마냥 지속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시기를 3-5년정도 늦추어 DDA협상등을 지켜보면서 바꾸어도 늦지 않을 것을 굳이 2005년부터 양정제도를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었다. 쌀 비준문제와 함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더욱 크게 조장하는 우를 범하고만 것이다.

물론 수매제도를 3-5년 늦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쌀비준문제부터 풀어나가고, 3-5년 동안 집중적으로 쌀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노력, 마케팅기법의 개발, 대국민 홍보, 학교급식문제의 해결등 수매제도가 없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서 동시에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정을 연착륙시켰어야 했다.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 국회의 고민등 이 모든 갈등구조의 원인은 쌀재

협상과 관련된 비준문제와 함께 양정의 용감한(?) 전환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쌀 비준문제와 동시에 추가대책 문제, 공공비축제시행에 따르는 매입물량, 매입방법, 매입가격, 지역별, 품종별 차이문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관련된 목표가격 설정 문제등 풀어야 할 과제가 북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정전환시기를 잘못 선정하여 갈등구조를 더욱 증폭시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정책의 입안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농민들의 불신과 저항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했다. 과거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미 지나간 일로 묻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솔직히 반성하고 인정할 때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올바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응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농정파라다임의 전환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WTO체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WTO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 이중성이나 부도덕성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농업,농촌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농업,농촌을 지키고 쌀을 살리기 위한 철학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정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농정철학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량자급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다. 그 중요성이 때로는 상대적으로 희석되기도 하나 다시 또 그 중요성이 중요해 지곤 하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 쌀 시장의 개방 여부와는 상관없이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의 국가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최대한 보존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6%정도이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2%도 안 되는 나라이다. 그나마 주식인 쌀만 자급을 하고도 조금 남을 뿐 매년 약 10조원(100억달러)어치의 농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쌀마저 수입해 먹고 살아야 할 경우 수십조 원의 주식을 쌀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의 후손들은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아직도 쌀에서 얻는 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곡창지대의 경우 거의 쌀에서 소득을 얻고 있어 농가의 소득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작물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쌀 농업은 국토의 정원사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여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쌀 농업이 존재함으로써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또는 다원적 기능이라 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이 그러하듯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하며, 이러한 인

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농정이 추진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우리의 쌀 농업과 농촌이 존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정부는 이를 누구 보다 깊이 인식해야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

선진국형 소득안정장치 도입

쌀 농업과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선진국형 농업.농촌 정책을 우리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 사실 WTO체제하에서는 농산물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유무역을 통한 개방은 어쩔 수 없으며, 시장기능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농민들의 경쟁력제고 노력은 필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농산물 수출 선진국인 미국, EU, 캐나다, 호주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엄청난 액수의 각종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WTO체제하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명목으로 하는 허용대상보조금(green box) 지급이 가능하며 품목별최소허용보조금(de minimis)도 가능하고 농가소득이 급격하게 낮아 졌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 예컨대 미국 쌀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이며 EU 농업예산의 약 80%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캐나다는 농가소득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사실상 선진국 농업의 경쟁력과 농촌의 유지는 각종 명목의 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3세계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재정이 없으니 농업.농촌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없을 뿐이다. 이부분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별 농가별 소득안정장치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도 곧 선진국이 되기 때문이다.

부채문제의 해결

마지막으로 긴급하게 파산지경에 이른 농가경제를 구해야 한다. 농가부채 문제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한번은 털고 가야 한다. IMF사태이후 16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되었고 이들 중 약 절반인 80조원은 회수되기 어려우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농업부문에는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한번도 투입된 적이 없다. 상호금융에 의한 고율 악성부채 6조원정도라도 털고 가야 한다. 파산하고 난 후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시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농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농민대표가 최종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농업.농촌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으며 농민들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농정은 그야말로 정부와 농민이 참여하는 참여농정이 되어 한다.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

윤석원(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려는 한미FTA를 보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지 알 수가 없다. 적어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려면 절차나 과정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피해는 어떤지, 대책은 무엇인지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산업분야별 또는 품목별로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본 결과 한미FTA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됨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한미FTA의 이득으로서 실질GDP가 몇% 올라 갈 것이고 서비스산업전반에도 고용이 증대될 것이며,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전부이다.

그런데 가장 이익이 될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만 하더라도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조선산업, 섬유산업, 철강산업등 한두가지 산업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영향 또한 다양할 것이다. 서비스산업도 마찬가지다. 의료, 의약, 문화, 보험, 유통, 교육, 통신, 법률, 환경, 노동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각각의 산업부문의 영향은 엄청날 것인데 이를 서비스산업전체로 묶어 이익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산업 분야별 현장의 소리는 전혀 들지도 않았으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쫓기듯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우리 사회를 왜 이렇게 저급하게 만드는가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막연하게 이제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이니 당당하게 한번 경쟁해 봅시다 라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해 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국민 누가 왜 반대하겠는가. 이익이 된다는 논거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중 농림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피해액이 무려 2조원에서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축산업, 그 중에서도 한우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R이후 모처럼 키워온 우리의 축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예다가 서비스산업분야 즉, 의료, 의약, 문화, 금융, 통신, 법률, 교육, 보험, 환경, 노동등의 분야에 미치는 효과는 과히 파괴적 이여서 경제, 사회적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아무런 사전 논의나 대책 없이 한미FTA를 서두르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최근(3.15)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마저도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기 동조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경우 우리경제도 FTA가 없었으면 받지 않아도 될 충격을 즉각 받게 된다는 의미이며 종속의 심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한일합방에 버금가는 패국의 행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쇠국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방화시대에 우리 모두 적절히 대응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지만 개방을 넘어 나라의 모든 것을 거대 미국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강행하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지도, 설득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 정부가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기는지는 사실 이정부의 문제이다. 문제는 한미FTA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입게 될 국가의 혼란과 국민들의 피로감과 사회적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죄송하지만 기왕에 하던 정책이나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은 제발 벌리지 말고 다음 정부에 넘기기 바란다. 그것은 그것을 추진할 능력도, 갈등을 해결할 전략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시론(2006.9.12)

누구를 위한 소고기 수입재개인가

정부는 지난 8일 2003년부터 중단됐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추석을 전후하여 국내에 반입될 모양이다.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 위싱턴주에서였고 2005년 6월 텍사스에서 두 번째 광우병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 금년 '3월'에는 알라바마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4월'에 즉각 정부조사단을 미국으로 급파하여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수입재개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년 '5월' 알라바마 광우병 소의 역학조사결과에서 나이, 출생지등의 규명에 실패하자 즉각 미국 현지 소고기작업장 위생점검단을 파견하여 작업장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면서 '6월'에 수입재개승인을 연기하였다가 '8월'에 다시 수출작업장현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드디어 '9월'8일 수입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미국에서 세 번째 광우병이 발생한지 6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수입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연간 약 1조원어치의 소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정부가 몸 달아야 할 일이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다녀할 사안을 왜 우리 정부가 수입을 못해 안달을 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지금 1,2년에 한번씩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급하게 수입재개를 선언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미FTA협상의 선결조건으로 금년 '2월'이전에 이미 소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여 안전성이 보장되고 수입재개를 해도 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최근 어느 토론회에서 외교통상부의 고위관료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사람들은 물론 우리의 유학생들도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고, 최근에는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다소 짜증스런 반응을 정부측 인사가 토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쇠고기등 축산물의 경우 광우병이나 구제역같은 질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금지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 축산물의 수출이 금지되어있다. 미국으로의 수출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나라 축산물을 지금 먹지 않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 쇠고기의 수입금지는 미국인이 먹고 안 먹고, 우리 유학생들이 먹고 안 먹고 아무 상관이 없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금지는 질병의 발생유무와 안전성의 담보가 관건일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소고기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광우병이 소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의 뼈를 갈아 먹인 사료였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1998년이후 뼈사료를 금지했으나 일본이나 EU와 달리 여전히 닭이나 돼지사료에는 뼈사료가 허용되고 있어 소사료와 혼합될 위험성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일본은 24개월 이상, EU는 30개월 이상 도축소의 광우병 검사를 전수 조사하는데 비하여 미국은 1%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광우병이 다섯 번이나 발생한 캐나다산 송아지와 동물성뼈사료를 먹고 있는 멕시코산 송아지를 수입해 90일간 키우면 미국소가 된다는 사실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수출도축장의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서둘러 허겁지겁 수입재개를 결정하고 말았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졸속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중대한 판단착오이며 그 후유증은 의외로 심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은 이미 벌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졸속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은 반듯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마을 만들기의 원리와 맥락

김찬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1.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저마다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를 위해 여러 가지 지역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그 결과 새로운 도로나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고용과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 자신의 고유한 특색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그를 통해 지자체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 상품 개발이나 다양한 문화 축제들을 창출했다. 그리고 특이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눈길을 끌거나 흥미로운 특산품이나 이벤트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역 성장을 위해 이뤄진 개발은 많은 경우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진행되어 자연환경과 생활세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권에 많은 도시들이 난개발로 경관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거주 환경의 질이 극도로 악화되는 예가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제나 문화의 거리는 거의 천편일률적인 모델로 획일화되어 지역의 브랜드 파워 향상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글로벌한 규모에서 거대화되는 문화 산업의 영향력이나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정보 미디어의 파급 효과는 지방 문화의 자생적인 역량을 더욱 감퇴시키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는 철저하게 국가주도로 이뤄져왔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는 힘을 배양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지역의 힘이란 한편으로 그 관할 행정의 힘이고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의 힘이다. 지방 자치제의 출범으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의 많은 부분이 지방 정부로 이양되었다. 말하자면 ‘분권’이 이뤄져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지방 ‘자치’가 내실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발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될수록 행정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밀어부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는 당위적인 주장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동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없다. 반사회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애당초 만들어질 때 관 주도로 틀을 짰고 의사소통이 상의하달 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관료 시스템의 말단 기구로 만들어진 주민 조직들도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 사회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쓰레기 처리에서 도로 계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들을 둘러싸고 이뤄내야 할 공론과 합의는 모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통은 의회와 같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회로를 통해서 이뤄져야할 차원이 있지만, 그 바탕에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해 가는 대화의 차원이 깔려 있어야 한다. 사실 지금 지방 의회가 성립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의회의 구조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객관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장(場)이 지역 안에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대안적인 개발양식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그것은 ‘지역’이 갖는 의미를 되묻는 작업에서 출발하면서, 그 공간을 풍요롭고 운택하게 가꿔가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주체 형성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나아간다. 거기에서는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발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시설을 정비하거나 매력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담기는 생활 그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일본에서 생겨나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서서히 확산되어온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지향을 함축하고 있다.

2.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맥락

마을만들기는 한 마디로 말해 커뮤니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위기나 비전을 공유하는 지방 정부, 주민, 상인 등이 나서서 공동의 영역을 형성하면서 도시를 재생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마을 만들기다. 그것은 지역 공간을 삶의 다양한 활동을 응축하는 공간으로 되살리면서 생산과 생활의 자립적인 장으로 조성해가는 작업이다.

한국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한지 10여년이 되었고, 그동안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것들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범주화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안전’, ‘생태’, ‘미관’, ‘교류’, ‘자활’이 그것인데, 이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마을만들기가 이뤄지는 지역을 크게 주택지와 상업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두 영역에서 위의 다섯 가지 목표들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이 나열될 수 있다.

주택지	통학로 개선, 방법, 방재	안전	차 없는 거리	상업지
	자전거 도로, 녹색아파트, 셋강살리기, 숲 지키기	생태	청계천 복원	

꽃길 가꾸기,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한옥마을 가꾸기	미관	전선지중화, 가로수, 간판, 노점 상 정비, 보도블럭, 조경, 상징 조 형물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미디어, 벼룩시장, 축제	교류	축제, 청소년 문화마당 백화점 문화센터
지역 화폐, 커뮤니티비즈니스 독거노인 봉사, 공동육아, 공부방	자활	공동 시스템 (판촉, 주차 등)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마을만들기는 ‘주민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출현한 것이면서도 그것과 내용적으로 구별된다. 일본에서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벌어진 주민 운동은 개발의 논리에 의해 침해되는 생활공간을 방어하고 복구하려는 시도였다. 그 운동의 결과 국가 및 지방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일방적인 선긋기 방식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지금까지 도시 계획 전문가나 행정가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영역은 비좁았고, 주민의 언어는 언제나 ‘애매함’으로 무시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도시 계획가의 자질로서 주민의 그 애매한 발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차츰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발언들 밑에 깔려 있는 다양한 입장, 욕구, 이해관계 등을 해독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주민, 행정과 주민 사이에 공유되는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에서 마을만들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갈래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공간의 급격한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공간은 끊임없이 변모되어 왔고, 그 템포는 지금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신도시 건설, 뉴타운 개발, 노후 주택지 개선 사업,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크게 바꿔놓는다. 따라서 그러한 사안을 둘러싼 주민들의 생각이나 입장,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인다. 따라서 그러한 차이와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필요하다.

(2) 비노동 시간의 확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동네는 전업주부와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공간이었다. 청소년과 성인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또는 학원)와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동네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동네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 연령이 점점 빨라지

면서 대안적인 활동 공간이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이분화되어 있던 삶의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제3의 사회적 영역을 창출해야 한다.

(3) 복지 사회의 도래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난과 가정의 해체 속에서 극심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매우 비좁다. 이렇듯 복지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재정은 넉넉지 않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상호 관심의 그물망을 재건하면서, 이웃들 사이의 협동 체계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4)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 요구

‘문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의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주거 공간이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터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에서 실현될 수 있다. 삶의 질과 격조를 드높이는 매력의 조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데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서비스업 확대 속에서 지역간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집객(集客)을 위한 문화 전략으로서 저마다 고유한 색깔과 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마을 만들기는 관계의 디자인이다

지역 사회는 물리적인 인프라, 그것을 관장하는 행정 시스템, 주민 생활, 경제 활동, 집합적 상징체계 등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삶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사이에 미적, 기능적 조화를 꾀하고 실현하는 작업이 바로 마을 만들기다. 그것은 한 마디로 ‘관계의 디자인’이다. 이를 크게 나누자면 사물 또는 과제들 사이의 관계, 삶과 인공 환경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사물 또는 과제들 사이의 관계의 디자인 : 전체적 목표상(vision)의 포착

앞서 언급했지만 공간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그 안에 들어서 있는 여러 인공 도구 및 시설물들이 그 기능적으로 상충하거나 미적인 측면에서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한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에 치중하기 보다는 커다란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한다. 곧 전체의 목표상(像)을 잡는 것이다. 건축 디자인의 경우 그 완성도(完成圖)는 계획 도면이나 모형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는 다르다. 그것은 대개 장기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해가는 만큼, 상황이 계속 바뀔에 따라 원래의 계획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다음 계획

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자인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형태가 아니라 커다란 방향, 곧 목표상이다. 그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가 디자인에 포함된다. 커뮤니티 디자인이란 상황에 대한 사후 처방이 아니고 지역의 장래상(像)을 예견하고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래상은 각 지역이 처한 고유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꼴을 이룬다. 그러나 그 다양함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방향이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사이의 균형이다.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의 제 영역이 생산의 논리로 재편성되면서 생활세계는 극도로 위축되고 왜곡되어왔다. 이제 그러한 모순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의 활성화가 생활의 윤택함을 보장하고 생활공간의 쾌적함이 산업의 경쟁력을 복돋는 지역 사회를 디자인해 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이 내세우는 상징과 이미지는 외적으로 발현되면서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발휘해 관광이나 지역 산업 진흥에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사회적 통합의 접착제가 되어야 한다.

(2) 생활과 인공물 사이의 관계 : 하드웨어에 덧붙이는 생활양식의 선택

그렇듯 인공물과 인공물 사이 그리고 지역의 과제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체의 목표상은 결국 인공물과 생활 양식과의 관계 속에서 결부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그 배경을 보자. 지역을 둘러싼 조건 그리고 그것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들의 생활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자아내는 공간적 결과 또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안정되게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되었다. 도시의 변화, 거기에는 시장 메커니즘, 인구구조 변화 및 이동, 소비 패턴 및 생활양식의 변형, 자동차의 보급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그 모든 변수들을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한다 해도 항상 문제는 남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사무 관료적인 판단만으로는 풀 수 없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정답이나 그것을 찾아내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어느 도시마다 불법 주차가 큰 골치거리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 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 둘째 기존 도로에 공간을 정해 주차를 허락하는 것, 세 째는 자동차 자체를 덜 타고 다니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행정 쪽에서 거의 알아서 해온 일이다. 두 번째 방법은 행정과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세 번째 방법은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양식의 전환을 기해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가장 어렵다. 그런데 도시 공간이 포화 상태이고 땅값이 너무 비싸 첫 번째 방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나머지 두 방법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조치로는 불가능한 해결 방안이다. 주민들의 협조 내지 자기 변혁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토론과 합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공간과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건물을 지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보다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노인 복지를 생각해보자. 그를 위해서 행정이 주체가 되는 도시 계획 사업으로서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것은 노인 센터나 노인 병원, 또는 간호 시설이 딸린 노인 전용 공영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자원 봉사

자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기존의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여 노인들을 보살피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담당 주체를 새롭게 확보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시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선택하여 그 선택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 사회 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곧 정치적인 장으로 옮겨간다. 사실 어떤 도시 계획이든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생활 주체들의 참여는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각자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상의 요구를 사회화하면서 타인의 그것과 토론하고 타협하여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에서 점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 서서 공간을 읽고 발언하는 것은 디자인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하는 계기가 된다.

(3)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디자인 : 주민 참여 시스템과 시민 문화의 구축

그러한 디자인은 또한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주민과 행정 사이의 파트너십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참여를 통한 디자인일 때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만들기는 디자인의 주체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부터 디자인해야 한다. 어떤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그 원칙과 절차는 어떻게 세우는가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그 자체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이 전문가와 함께 일방적으로 구상하고 시행할 때는 기존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각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 결합의 원칙과 방식을 새롭게 짜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고 유연하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참여 또는 담당 주체의 다양성이 보장된다.

그러한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인공 환경을 이용하면서 서로 지켜야 하는 룰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도구나 시설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를 합리적이면서 유의미하게 만들어가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설을 디자인해도 그 올바른 쓰임새가 사용자들에게 숙지되지 않는다면, 디자인의 가치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처음 단계부터 참여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발의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설이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참여’는 디자인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이용 방식을 유의미하게 이으면서 삶을 위한 디자인이 이뤄지도록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디자인과 참여의 관계는 쌍방향으로 성립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참여를 통한 디자인’(design through participation)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한 참여’(participation through design)도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역 사회 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 그리고 주민과 행정 사이에 의사소통을 복돋는데 디자인이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디자인 행위를 통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종합하는 것,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핵심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공동성(communality)을 구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마을만들기는 건실한 시민

문화의 토양 위에서 꽃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문화를 복돋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4. 점검의 항목들

마을만들기에는 국내외에 이미 풍부한 사례들이 나와 있고, 그 정보들은 널리 그리고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모델들을 간단하게 옮겨다가 적용하고 싶은 유혹이 쉽게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정보들은 완성된 결과를 피상적으로 편집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난관은 생략되기 일쑤다. 그리고 도중에 하차하거나 좌절한 사례는 분석되고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패에 관한 정보는 감춰진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마을만들기를 구상하고 착수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때에도 그러한 맥락과 조건의 차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자신의 마을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 프로그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점검의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의 성격

- 도시(권)내 위상 및 산업 구성은 어떤가?
(베드타운, 사무 빌딩, 상업 중심지, 유흥가, 공단 등)
- 지역의 크기 및 경계의 명료성
(인접 지역에 대도시를 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떨어져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주요 현안 무엇인가?
- 상징적 중심지 또는 랜드마크는 있는가?
- 지역 내 자원 : 자연, 사람, 기업체, 전통, 장소성 (ex : 촬영지)

(2) 주민

- 공신력을 지닌 리더십이 있는가?
- 지역사회 권력 구조와 주민들 사이의 파벌은 있는가?
- 주민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거주 연한, 나이, 직업 등)
- 거주 형태 형태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및 다세대 등의 비율)
-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은 어느 정도인가?
- 주민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공동 경험의 기억이 있는가?

(3) 행정

- 단체장 / 공무원 / 의원의 마인드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지와 이해도
- 수직 분할 구조를 넘어서는 소통 및 협력 체계는 원활한가?
- 상위 및 하위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와 동사무소와의 관계)

-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와 노하우가 있는가?
- 재정의 여력과 구조 : 마을만들기에 얼마만큼 투입할 수 있는가?

다른 한편 또 한 가지 점검해야 할 문제는 과제의 난이도와 지역의 역량이 적절하게 맞물려 있는가이다. 체력은 충분하게 다져지지 않았는데 너무 욕심만 부리다 보면 몇몇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크거나, 주민들 사이 또는 주민과 행정 사이에 오히려 갈등의 생길 수 있고 실패의 후유증이 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의 과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네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1) 대상지의 성격

디자인을 하는 대상 공간이 누구의 소유인가 문제다. 관공서가 소유하고 있는 유희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그 다음으로 상점가의 공유 공간이 쉽고, 개개인의 사유권이 연루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풀어야 할 이해관계의 고리가 복잡하다.

(2) 사업의 기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탄한 역량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축제나 베품시장 같은 일회성 이벤트는 비교적 부담없이 치를 수 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쌈지 공원 만들거나 숲 가꾸기 같은 프로젝트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자원 봉사나 공동 활동의 네트워크를 꾸리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속성을 요구한다.

(3) 상호 관여의 정도

마을만들기는 가정의 경계를 넘어 각자의 관심과 에너지를 마을로 모아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요구되느냐에 마을만들기의 난이도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쉬운 것부터 예를 들면 (가) 주민들 사이에 막혀 있던 말문을 트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작업 (소식지 등 미디어나 축제), (나) 기존 환경의 개선 (공동의 문제로 여겨지는 과제의 해결 - 통학로 개선 등), (다) 새로운 공간의 창출, (라) 경제적인 공동체 (생활 협동, 지역 화폐 등), (마) 자녀 교육 (공동 육아, 방과후 학교, 대안학교 등)

(4) 학습의 과제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공무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 가운데 학습을 통해서 체득해야 할 태도나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도 여러 수준이 있다. 마을만들기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그 일을 함께 풀어 가는 데 필요한 자질과 감수성의 획득, 그리고 도시계획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학습의 과제는 방대하다. 어느 만큼의 능력과 리더러시가 필요한 것 인지를 미리 가늠하면서 마을만들기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icoop생협 물품정책에 대하여

2006년 11월 28일

신성식(KOWM & 자연드림 대표이사)

1. 들어가면서

소비자 생협을 정의하라고 하면 ‘물품운동’이라 할 수 있다. 물품을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어가고자 하는 활동이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산업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본 시스템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대량생산은 과잉생산의 경향을 동반하면서 ‘공황’의 발생이 필연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타났다. 공황이란 한마디로 ‘대규모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자인 기업과 정부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나아가서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시장 만능주의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 경제적 국경 자체를 폐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상품을 둘러싼 문제를 여러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력이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인데 문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환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향 중의 하나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만 경쟁이 극단화면서 고용의 유연화를 불러오고 이는 소비자의 소득을 줄여들게 만든다. 이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정리해고의 일상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에서 생협은 문제의 핵심인 ‘상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생협에서는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하지 않고 ‘물품’ 혹은 ‘생활재’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2. 물품 정책

‘물품운동’이란 물품을 통한 운동인데 그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캠페인과 제도 개선활동이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과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로 하고 있다. 이 활동 또한 매우 효과적인데 불구하고 보통의 생협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생협활동의 대한 협소한 인식으로 인해서 그렇

고 구조적으로 현재의 '물품 혹은 생활재'를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하는 경향 때문이다. 생협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활동으로 '식품안전법 제정운동' '적색2호 사용금지운동'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많은 상품을 대체하는 '대안 물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대안 물품은 당장에는 조합원의 요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기업들의 상품개발 경향을 바꾸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드는 일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경쟁력 있는 대안 물품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 기술력, 자본, 경영능력 그리고 조합원들의 구매 규모 등을 고루 갖추면서 상품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많은 토론과 훈련을 통해 힘을 모아서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 생협의 물품 결정은 소비자의 요구와 지지로 시작되었지만 소수의 소비자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높은 책임성을 요구했던 초창기보다도 점차 책임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들의 행동은 일반 시장의 소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중의 물가가 내려가면 생협내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계약 생산한 물품 소비를 위해 고심해야 하고 시중의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가 집중되어 물품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담당 직원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심지어는 생협 내 자급자족적인 경제시스템을 흔드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결국 소비자의 책임성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 남는다.

일본생협의 예를 살펴보면 볼 경우 그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힘은 점차 높아지는데 반해 소비자의 책임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생협 스스로도 대량생산 - 대량 소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된다. 결국 이는 생협의 정체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생협에서 대량생산이란 현대 사회에서 그 규모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동일한 경향이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의 비율이 커지는 흐름을 의미한다. 이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통 자본들이 생협 물품과 비슷한 콘셉트의 상품을 유통시키면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최근 유기농 쌀의 예가 대표적이다. 결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생협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만하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다.

경쟁력 있는 물품을 만드는 일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품질, 가격, 기술의 종합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생협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생협은 기업과 달리 생산자 - 직원 - 소비자의 간격을 가장 좁게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생산과 최종 소비까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위험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물품이 만들어지면 이는 생협만이 고유하게 갖게 되어 새로운 소비자를 조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생협 구성원간의 일정한 책임분담 구조를 유지하는 속에서 나온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협 구성원에게 돌리는 일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전략적인 문제이기도 한다. 이러한 물품을 생협의 '브랜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물품이라고 할지라고 자본의 입장에서 추격하여 오는 일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역량을 기울여서 만든 물품일지라도 이를 널리 알리는 힘(홍보-마케팅)이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이다. 홍보-마케팅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엇이 진정하게 좋은 물품이고 소비자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품의 좋은 점만이 아니라 생협의 사회적 의미도 알리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조합원 조직 또는 예비 조합원층을 형성하게 해준다.

브랜드들이 하나씩 개발되어 조합원 가입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소비자의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입된 소비자들이 책임성을 갖고 조합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교육'과 '생협적 장점'이다. 생협의 의미와 선배 소비자들의 헌신을 알아야 공생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협동조합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교육은 그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주부들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육아와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맞벌이를 해야만 유지되는 생활패턴은 '생협의 교육'이 변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자연스럽게 **홍보와 마케팅이 교육의 역할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패턴은 교육만이 아니라 생협의 운영시스템에서도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iCOOP생협은 물품의 주문과 이용, 행사, 교육 등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전업 주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만 한정되어 있다. 주문한 물품이 하루 종일 밖에 놓여있는 것을 안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눈으로 보고 주문하는 경향이 일상화된 생활에서 결품, 품질하자 등은 어렵게 가입한 조합원이 탈퇴는 하거나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공급의 방식과 형태

결국 생협은 조합원 조직이다. 조합원의 생활패턴이 바뀌면(생협이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 안되므로) 그 패턴에 기초하여 생협적인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토요공급을 하는데 다른 요일에 비해 결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율이 높은 이유는 오전에 공급이 끝나서 물품을 확인하기 좋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매장에서조차 잘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장을 통한 구입을 선호하는 경향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매우 유력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장은 부족한 시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매장과 공급을 운영하는 다른 생협의 예로 볼 수 있듯이 매장에서 조합원 가입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매장은 생협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영상의 문제로 비(非)조합원에 대한 공급하는 문제로 항상 유혹받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소비의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며 수익성이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자에 빠지기 쉬운 운영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생협의 기본 정체성을 뒤흔들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많은 생협들이 매장을 선

호하는 것일까?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방식이라는 점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협의 운영방식에 대한 절대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시대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의 구성과 요구가 변화하기 때문이고 그 요구에 맞는 운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생협의 과제이다.

생협연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생협들은 대부분 매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생협연대를 설립하면서 지역조합들은 매장을 폐쇄하고 공급 - 조직활동 중심의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당시 매장이 효율적이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생협조직의 핵심과제인 지역생협을 활성화시키면서 전국 물류망 구축같은 인프라 구축이 전략적으로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97년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협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 그동안 사회는 웰빙 붐이 불면서 상업적인 유기농 판매장이 많이 설립되고 대형 유통업체도 친환경 유기농산물 취급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협의 운영방식을 다시 시대적, 지역적 상황, 조합원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운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매장을 다시 개설하는 수준이 아닌 조합원이 생활하는 지역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야 한다.

현재 공급 중심의 활동은 가정에서의 영역을 담당하였다고 볼 때 외식, 급식 등 가정 외부에서 주식(主食)문제와 베이커리를 비롯한 간식 부문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조합원과 결혼, 품질하자, 소량 구매등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판매장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안전생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부문의 사업을 생협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소요되는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분야는 경쟁이 치열하고 위험성이 많고 많은 노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데 생협이 직접 운영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새롭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과 제휴를 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휴의 원칙은 생협의 물품취급 기준에 적합한 원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이 기본이 될 것이다. 이 분야 사업자의 입장에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도 한편으로 생협의 조합원의 지지와 이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영에 도움이 되어야 제휴는 유지될 것이다.

이들 분야의 사업 대상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조합원만으로 한정해서는 경영이 유지가 되지 않으며(이는 이미 일산지역에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다만 조합원에게는 가격 할인 같은 특별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최종 목표는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생협을 통해 비교적 충분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조합원 가입이 확대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장에 생협에 가입하지는 않지만 생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층(외식과 베이커리 부분에서 조합원수의 4배수의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음)이 장기적으로 생협의 예비조합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협의 지지층으로 자리할 수 있으라는 점이다.

이 같은 임무를 목표로 설립된 곳이 (주)자연드림이다.

이상은 3기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4. 브랜드 전략

그런데 브랜드 전략은 이미 생협연대의 물품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동안 생협의 브랜드는 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그 간의 물품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정책안 중에서)

1. 물품정책

1) 물품취급 방법

생협의 지향하는 가치가 물품선택과 개발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

하나, 어머니의 눈으로 선택한다

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한다.

셋, 생협 브랜드를 만들어 사회적 기준을 높여 간다.

넷, 물품을 통해 조합원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하나, 어머니의 눈으로 선택한다

우선 조직과 사업이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경영효율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조합원 활동가의 활동보다 직원(전문가 포함)의 역할이 증대되게 된다. 결국 물품 선택이 조합원에서 직원의 영역으로 옮겨오면 그 조직은 활력을 잃게 되고 결국 유통조직의 하나로 전략할 위험이 높게 된다. 따라서 사업이 성장해도 물품선택은 조합원의 영역으로 남게 해야 하는 정책으로 물품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활동가를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뒷받침 한다.

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다.

조합원이 원하는 물품의 수준과 현실의 차이는 항상 일정한 간극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유기채배 농산물을 먹고 싶지만 사과가 저농약일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비슷하다. 생산 분야의 현실은 기술, 자본, 설비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을 정

도이고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이 매우 열악한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마음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최선의 것이란 단순히 품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품질과 가격이라는 상품 내적인 요인이외 생산자, 제조자의 신뢰라는 상품외적인 면도 고려하는 것이다.

생산자, 제조자의 신뢰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하는 것이고 공개된 정보에 따라 관리감독은 물론 다음 단계의 물품을 만들어 내는데 밀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셋. 생협연대 브랜드를 만들어 사회적 기준을 높여 간다.

생협연대의 물품취급 기준은 생협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의미이자 목표를 말한다.

“첨가물의 투입이 없는 물품을 만들어 간다”란 말은 당장에 가능한 물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물품도 첨가물 투입을 최소화해가는 계획을 가지고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취급 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더불어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품에 대한 관념적인 기준이 높아져 문제가 된다.

어머니의 눈으로 선택한 물품 중에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물품을 생협연대의 브랜드로 선정해야 한다. 생협연대의 브랜드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물품이 최고다”가 아닌 “생협의 힘으로도 이정도의 물품을 만드는데 소위 대기업들이 그 정도도 못하느냐”이다.

소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물품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역할이 생협의 역할이자 생협연대 물품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2) 가격정책

생협물품의 가격정책의 핵심은 직거래 가격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같은 생산자에게 물품을 받을 경우 똑같은 가격에 매입을 하더라도 최종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가장 저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저렴하다는 말이 일반 유통에서는 대부분 매입가를 낮춘다는 의미와 동일시하여 일정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생협연대의 매입가는 타 단체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4. 마무리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정책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생협연대의 물품정책이 힘을 갖지 못한 이유는 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안이 그러하듯이 정책 또한 그 추진 주체가 힘을 가져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객관적이 상황이 잘 맞아야 하는 이치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 소유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존중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토지 소유의 완전 자유를 부여했을 때 사회·경제토대를 뒤흔들 정도로 그 폐단이 심각

해진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개인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법과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 논리의 근거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사회적 공익을 우선한다는 논리이며 토지를 사회재로 보는 시각으로 발전하게 된다.

생협연대의 물품정책에서 브랜드는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97년 동일한 시기에 출범당시에 수도권 사업연합이 PB(Private Brand)상품을 만들기 시작하였을 때 당시의 규모에서 PB상품의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생산자에게 부담만을 주게 된다는 판단 하에 유보하였다. 2002년 이후에 일정한 사업규모를 갖추고 난 이후에도 생협의 브랜드는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이때의 이유는 사업의 성장률이 높고 지역조합도 조합비 제도가 정착되어 안전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성공은 새로운 실험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이 브랜드를 개발할 훈련과 조직 시스템이 갖추지 못한 점도 큰 이유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물품개발에 대한 시도는 계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1차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OEM 방식의 가공품 취급이었다. 이들 가공품의 제품 컨셉은 새로운 기술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기존 제품에서 원재료를 교체하고 일부 첨가물을 빼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물품취급과 관련한 현실적인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일부첨가물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제품의 품질과 맛에서 뚜렷한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안전성을 위해 맛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맛을 위해 안전성을 포기하느냐는 식의 의견대립이 나타났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생협의 물품취급 기준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는 배경이 되었다.

그동안 생협의 물품은 개발되는 속성에 따라 3가지 나뉜다.

- 하나. 빼기로 만들어지는 물품 - 대표 물품 : 라면**
- 둘. 안 넣기로 만들어지는 물품 - 대표 물품 : 제빵**
- 셋. 대체 물품으로 만드는 물품 - 대표물품 : 아이스 바**

현재까지는 빼거나 넣지 않거나 금지하는 일에 주력해왔는데 그 결과 상품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생협물품이 개발되는 종류는 1차 상품보다는 2차 상품이며 이는 소비자의 요구 자연스런 요구와 생산자 가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그 속도가 높아진다. 개발과정에서 맛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상호 대립하게 되는데 이에 검토해봐야 한다. 맛과 안전성은 대립하지 않고 원가와 대립한다고 봐야 한다. 값싼 첨가물보다 얇은 맛을 내고 천연재료를 사용하면 원재료의 깊은 맛을 내게 된다.

첨가물은 3가지 역할을 한다. 천연재료를 대체하는 역할, 제조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역할 그리고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 내는 기술적인 역할 등이다. 세 가지 기능 중에서 2가지는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숙성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는 맛, 먹기 좋은 색과 향기, 라면국물의 감칠맛 등은 첨가물 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이러한 맛들은 천연재료의 맛이랑기보다는 첨가물 자체의 맛이라고 봐야 한다. 즉 소비자들이 특정한 맛을 원할 경우 그 맛이 첨가물 자체의 맛인지 아니면 천연재료의 맛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과 관련한 논쟁 속에서 ‘맛’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주

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은 간식에 속한다. 간식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은 가격과 맛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조합원들의 이용패턴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이용패턴을 보면 알 수 있다. 채소의 경우는 유기농에 대한 선호가 많은 반면 과일의 경우 ‘유기농이나 저농약이나’에 따라 소비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이 얼마나 맛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쌀의 경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밥맛이 소비율을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결국 조합원의 물품취급 기준이 안전성, 투명성에서 맛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준정도가 아닌 이제는 안전성과 맛을 동일한 가치 수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맛이라는 요소가 워낙 추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정한 대중적인 기준치를 추출해낼 수 있다. 맛에 대한 새로운 가치기준을 부여하는 일은 생협 대중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운동의 세가지 새로운 과제

조희연(성공회대 NGO대학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chohy@skhu.ac.kr
<http://dnsm.skhu.ac.kr>

1. 87년 이후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개혁' 국면과 그 전환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시민운동이 발전해오는 과정은 87년 이후의 시대적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라는 화두 혹은 담론을 중심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때 민주주의라는 담론의 내용은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먼저 87년 이전 민주주의라는 담론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그런데 87년 6월 민주항쟁은 바로 그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 87년 이후 한국사회는 회복된 민주주의라는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통 속에 존재해왔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하여 형식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의 체제를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한다면, 이 체제는 군부정권의 퇴진과 형식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조건 위에서 민주개혁을 둘러싼 투쟁이 전개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87년 체제 속에서 중심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바로 시민운동이었던 것이다.

87년을 계기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사회는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은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권력관계, 관행 및 행위양식이 모두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과거 권위주의체제에 기득권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이 저항력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복된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은 복잡한 진통을 겪으면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과거의 독재체제가 붕괴된 이후, 구 체제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저항국면이 바로 87년 이후의 민주개혁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민주주의라는 화두 혹은 담론의 내용은 구 권위주의 혹은 독재의 민주적 개혁(democratic reform)이었다. 시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민주개혁국면에서의 사회운동의 '국민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7년 이전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국민적 투쟁의 선두에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제 87년 이후의 민주개혁국면에서 시민운동이 선두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민주개혁국면에서 중요한 동력의 하나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기본구성요소로서의 민중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기본동력의 희생에 힘입어 민주개혁을 향한 국민적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주도적 형태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사회적 권위주의세력과 이에 대항하여 민주개혁을 강제하고자 하는 세력 간에서 후자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운동이 바로 시민운동이었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대상 및 영역에는 모든 사회적 영역이 포괄된다. 그러나 각 시기에 따라서 중심적인 민주개혁 대상 및 영역으로 부상되는 것들이 있었다. 예컨대 정당 및 정치개혁, 재벌개혁, 족벌 사학 개혁, 반민주적 언론개혁 등 시기에 따라서 민주개혁의

초점이 이동하기도 하였다.

시민운동이 특별히 민주개혁국면의 국민적 운동으로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정치·의 ‘지체’현상에 크게 힘입었다. 정당과 정치는 국민들의 삶에 폭넓은 힘을 발휘하고 모든 개혁의 결절점적 영역이었고, 또한 정당에 속하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국민들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주개혁 영역 중 이 영역이 특별히 부각되었고 바로 이러한 정치개혁 혹은 정당개혁을 주도하는 역할을 시민운동이 맡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시민운동의 국민적 선도성의 근거가 되었다. 나는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의 지체현상을 ‘정치지체’로 표현하는데 이 정치지체에 대항하여 시민운동이 대체정당 혹은 준(準)정당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의의 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87년 이후의 국면의 특수성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이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서 그 전성시대를 구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돌이켜 보면 87년 이후 민주개혁국면에서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캠페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적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실 이러한 제도정치영역의 개혁, 즉 정치개혁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런 정치지체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정파적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기존의 지체된 정치 나아가 기존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문제제기형’ 운동만으로도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운동, 그 일부로서의 시민운동의 민주개혁투쟁에 힘입어 정치개혁을 포함한 국가개혁과 시장개혁이 진전되었다. 이를 통해서 지체된 국가, 정치와 정당, 시장은 일정하게 개혁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운동이 국민적 운동으로 부각되었던 민주개혁투쟁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민주개혁이 진전되었고 개혁의 대상들이 일정하게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규정될 수 있다.

#조희연, 2000,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치·민중정치·시민정치”, {경제와 사회} 여름호; 조희연,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2장 참조.

이러한 시민운동 상에 있어 이른바 ‘종합적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의 한 구성부분이 특별히 부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종합적 시민운동’적 담론과 실천에 있어 1989년 경실련의 출범과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은 시민운동 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실련의 출범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적 구성으로서의 민중운동으로부터 시민운동의 분리정립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참여연대의 출범은 시민운동의 다원화 혹은 다양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조희연, 2004, 앞의 책, 1장. 그런데 나는 우리 사회의 전영역이 ‘정상화’되고 민주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주화 혹은 정상화의 과제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언론영역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행정수도 이전 등 기존의 중앙집중주의 혹은 서울중심주의의 극복은 여전히 정상화의 과제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주정부라고 하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 있어 과거의 개발주의가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주정부의 ‘정상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논점—민주성을 정상성이라고 볼 것인가하는 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개혁의 최대쟁점이 된 정치개혁이라는 점에서 보면, ‘정상국가’에 근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서구적 정상성에 못미치는 ‘특수한 국가’로 규정하는 사고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나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독점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모든 사회영역에서 독점이 고착화되는 경우 이를 해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이미 서울이 정치경제문화금융 등 전 영역에서 독점화되었고 이를 해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독점의 해체를 단행하기 위하여, 모든 도(道)의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구분하는, 즉 정치중심과 경제중심을 분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상화의 진행, 그 극적 표현의 하나가 2004년 4.15총선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성립한 1987년 체제에 비해 극적이지는 않지만 2004년 4.15총선 이후에 성립한 '2004년 체제'는 87년 이후 체제의 대전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전환의 유의미한 시점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국가권력, 그 일부로서의 행정부 권력에 있어 주류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 국민정부의 성립시기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 주류 집단이 연합집권에서 단독집권으로 전환된 참여정부의 성립시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주류 집단이 행정부 권력에 이어 의회권력의 다수파로 전환된 2004년 4.15총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시기로 잡건간에 반독재민주세력이 정치적 주류로 전환되어왔으며 이는 민주개혁이 일정한 '완결'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주류화는 민주개혁을 둘러싼 더욱 고양된 갈등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 흐름에서 보면 권위주의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화의 과정이 일정하게 완료되어감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4.15총선이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보수세력의 의회독점'이 깨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세력이 진입하는 등 제도정치의 '완고한 폐쇄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정상적이고 천민적인 한국 시장체제의 민주적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왜곡된 한국경제의 상징으로 평가되어온 비정상적인 재벌체제의 합리화와 민주화가 지난 17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물론 시장과 자본영역에서의 정상성의 실현은 여전히 가야할 먼 길을 남겨놓고 있지만, 80년대와 비교할 때 시장의 민주화와 정상화 역시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대자본의 작동양식과 한국의 대자본의 작동양식--부패 관련 등--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변화는 이 말은 한국사회가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시대가 종결된 87년 이후 17여 년간의 변화를 통하여 '정상'국가 혹은 '정상적'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정상화 과정은 시민운동 및 사회운동에게 도전으로 역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시민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만들었던 구조적 조건, 동시에 종합적 시민운동을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부상시켰던 구조적 조건에 변화가 나타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은 국회-정당-정치의 민주화, 권력기관의 감시, 반(反)부패, 시민권 및 인권 보장 등 다양한 민주주의이슈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동하여 왔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러한 시민사회운동의 개혁노력으로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사회운동은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모든 사회운동의 '운명'이기도 하다. 모든 사회운동은 자신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운동목표가 성취되게 되면, 자신들은 새로운 운동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진보'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2. 시민운동적 실천의 '심화'를 위한 정책역량의 '내부화'

87년 이후 2004년 체제의 성립까지의 국면에서 중요한 담론은 민주주의담론이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을 의미하는 민주개혁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민주주의라는 담론의 내용이 '민주주의 회복'에서 '민주개혁'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전환의 지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의 도전'에 직면하여 시민운동은 어떻게 '응전'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응전의 과제를 시민운동적 실천의 '심화'와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여기서 나

는 87년 이후 현재 시민운동의 중요한 담론이 바로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담론 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담론의 심화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87년 체제와 2004년 체제의 사이에서 민주주의라는 화두 혹은 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적 개혁이었다. 여기서 특별히 정치체제와 재벌 등 경제체제의 민주적 개혁이 중심이었다. 국가와 체제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와 민주화가 진행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화두로 한 시민운동적 실천을 심화하고 확장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나는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민운동적 실천의 전문적 심화이며 둘째는 시민운동적 실천을 문화적·생활세계적 영역으로,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으로의 '확장'하는 것이다.

첫째 시민운동적 실천의 심화는 단순히 문제제기형 운동으로부터 보다 고도한 전문적 감시운동으로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운동의 저항대상이 합리화되고 민주화되어 가면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정책화하는 정부나 정당의 능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감시역량이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지하다시피 87년 체제 이후의 특수국면 속에서, 시민운동은 탈(脫)정파적이고 국민적인 관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전문적 운동조직들은 높은 수준의 정책대안을 통해서 문제제기형 운동 뿐만이 아니라 대안제시형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민운동의 부상은 정파적인 정당들과 차별화되는 탈정파적이고 '중립적인' 문제제기형 운동으로 급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 '서부개척시대의 특수(特需)'와 같은 것을 누리던 상태에서, 제도정당들의 합리화와 정책역량 제고, 내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운동은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2004년 체제의 성립 이후 시민사회의 많은 정책적 요구들이 민주노동당과 같은 제도정당에 의해 일정하게 대의(代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자신의 감시자적 운동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87년 이전의 운동에서 '투쟁적 소통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 그것만이 아닌 '설득적 소통능력'도 중요하게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헤게모니 창출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사회진보를 대변하는 가치지향, 정책역량, 설득적 소통능력, 문화적 표현역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별히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정식화하고 국민적 동의기반을 확장하는 한 형태로서의 정책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정책능력은 추상적인 가치지향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하는 능력이자, 요구와 투쟁목표의 명확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정책역량의 강화이자 개혁적·진보적 싱크탱크의 강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저항적 시민사회를 배후지로 하는 개혁적·진보적 싱크탱크는 국가 관료집단과 시장부문에서 독립하여 지속적인 대안적인 정책지식을 생산하는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따라 개혁적 싱크탱크가 생산한 정책의 일부는 부단히 정부정책으로 포섭되어 갈 것이다. 그러한 일종의 분여(分與)적 역할을 하면서도 시민적·민중적 요구를 새롭게 정책으로 정식화해하여 개혁을 선도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희연·홍일표, 2004, "개혁적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운동의 정책역량 강화", {창작과 비평} 봄호 조희연, 2004, 앞의 책, 15장을 참조.

그동안 시민운동의 정책역량은 시민운동 외부에 존재하는 정책적 자원을 네트워킹화하고, 개혁적 정책지향을 갖는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확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제기형 운동과 외부에 존재하는 정책역량의 네트워킹화가 한계에 이르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여기서 정책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시민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한편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적 정책역량을 폭넓게 네트워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적 정책역량의 내부화'하는 것이다. 물론 각 단체들의 여건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경우는 외부적 정책역량의 내부화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민운동의 정책지식생산과 관련하여 정책전문가와 상근실무자의 이원화 구도가 극복되어야 한다. 즉 시민운동 내부에 정책생산기제가 내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제도권 및 비제도권의 정책지식생산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결합하고 직업적 활동가는 실무자가 되는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와, 국책연구소와 자본연구소의 정책역량의 강화를 고려할 때 상근적인 실천적인 정책지식생산단위가 내부에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석박사 급 실천적 연구자들이 시민운동단체 및 관련연구소에서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 상근실무자들에서 정책전문가로 성장하는 일종의 '전문활동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언론사에 전문기자가 존재하듯이 석박사 급 전문활동가가 다수 배출되고 이들이 연구하면서 활동하고 동시에 외부의 정책지식생산단위들을 실천적 관점에서 네트워킹하고 동원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의 정상화와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시민운동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역량의 내부화는 상근간사들의 전문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야 하겠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근변호사 혹은 석박사 급 전문가의 상근활동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87년 이후 국민적 정책전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여 왔던 시민운동의 경우, 먼저 이제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에 따라 문제제기형 운동을 뛰어넘는 보다 전문적인 정책역량으로 자기무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새로운 정책전문가 풀을 더욱 폭넓게 네트워킹화하고 정책자원화하여야 하는 것과 함께 내부에 상설적인 정책생산단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시민운동적 실천의 확장과 생활세계적 민주주의 실현

둘째는, 시민운동적 실천을 '확장'하는 과제이다. 현재까지 시민사회운동의 실천에서 민주주의는 주로 정치사회의 민주화, 정치개혁, 재벌개혁 등으로 상징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넘어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평등성'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

또 하나 정책능력과 관련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중요한 도전은 시민운동의 의제와 정책전문가들이 국가의 합리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대거 포섭됨으로써, 의제와 인물의 '고갈'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선 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이 참여정부의 중요직위로 이동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민주화·정상화에 대응하여 시민운동의 자기급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역량의 강화는 단순히 정책내용 개발 뿐만이 아니라 정책프레임과 정책의 산출지평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이라는 정책의 프레임을 가지고 초기에 활동하였고 이것만으로도 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national minimum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급진성'을 담지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national minimum을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정책프레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하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생활세계의 민주주의로의 급진적 확장이며 다른 하나는 글로벌 민주주의로의 급진적 확장이다. 사실 근대사회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원리로서의 '1인 1표'주의와 자본주의의 원리로서의 '1원 1표'주의에서 전자의 평등성을 급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후자를 공적(公的)으로 규율(規律)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평등성을 생활세계 영역에서의 권력관계, 국제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억압관계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와 사회적 관계영역, 남녀 관계 및 각종 섹슈얼리티 구성과정에서의 억압성과 권력관계, 소수자를 둘러싼 각종 지적·지식적 억압체계의 극복을 포함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내적·국제적 양극화의 문제, 제국주의적 지구화의 문제, 글로벌 가버넌스의 급진민주주의적 재구축의 과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여 본다면, 전자는 민주주의를 정치경제적 민주주의에서 생활세계적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민주주의를 일국적 민주주의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민주주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먼저 시민운동적 실천의 첫 번째 확장과제로서 문화적·생활세계적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서술하여 보기로 하자.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과정에서 중점적인 영역 혹은 시민운동이 국민적 운동일 수 있었던 영역은 바로 정치와 경제영역이었다. 이를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개념을 원용하면#, 그동안은 주로 체계에 대항하는 운동영역에서 시민운동이 선도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제 시민운동이 생활세계적 운동영역에서 선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나는 표현하고 싶다.

87년 이후 중점적인 주목을 받았던 시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이미 생활세계적 운동은 자기발전과 확장을 하고 있었다. 87년 이전에도 다양한 생활세계적 운동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운동의 중심적인 영역이 될 수 있지는 않았고 또한 주목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 속에서 이제 시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생활세계적 이슈와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놓이고 있다. 어떤 점에서 권위주의적인 '외재적' 권력과의 대항 속에서 시민운동이 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생활세계적 권위주의와의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은 곧 지식이라는 푸코의 말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시민운동이 대항하여 왔던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와 보수주의는 단순히 외재화된 억압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내면화되어 있는 보수적인 지식 및 생활세계적 관행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생활세계적 선도성을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발주의, 성장주의, 가족주의 등 문화적·생활세계적 차원의 혁신이 없는 한 우리 사회의 체계 상의 민주개혁도 일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자본축적을 위하여 동원화된 여러 부정적 요소들은 왜곡된 보수적 시민사회를 재생산기제의 일부로 재편되었고 구조적으로 의식, 생활, 사회적 관계 등의 일부로 내재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개혁운동의 진전은 바로 왜곡된

Habermas, J., 1984,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2 Vols,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사회운동의 전선과 이슈를 민주주의전선, 계급전선, 생활세계전선으로 나눈다고 하면, 생활세계적 이슈들은 민주주의와 계급적 이슈가 주목받던 반독재민주화운동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개혁이 진행되면서 생활세계 전선 이슈들의 '중심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조희연, 2003, "발전 국가의 변화와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한국에서의 발전주의의 성격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대환·조희연 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한울아카데미).

보수적 시민사회의 혁신을 포함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가부장제, 유교적 엘리트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왜곡된 사유의식## 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은 이제 자본축적의 불가분한 일부로, 제도정치적 재생산, 보수적 시민사회 유지의 중요한 변수로 구조화되어 있다. 보수적 시민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하기 위하여, 폐쇄적 가족주의, 연고주의, 유교적 엘리트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등으로 왜곡화된 보수적 시민사회에 대한 성찰과 대안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중요한 몫이 될 것이다.

국가, 시장, 체제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가 진전되면 될 수록 시민운동은 권력 대항적 운동에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문화와 생활세계의 성찰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여 가야 한다. 예컨대 환경운동에서도 정부의 환경정책만이 환경친화적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문화와 생활세계의 의식과 관행들,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가 더 큰 장애물일 수 있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 및 기존 권력 대항적 측면과 동시에 문화 및 생활세계 대항적 성격을 시민운동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는 제도 혹은 구조개혁에서 이제 문화개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조개혁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그 문화적·생활세계적 '전제'들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문화와 생활세계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성장주의, 권위주의, 폐쇄적 가족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등의 측면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구조개혁운동 자체도 진일보 할 수 없는 지점에 있다. 최근 성대 인사청탁 사건을 보게 되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문화적 관행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국민적 시선을 흥미하게 되는 대목이 있다. 외재적인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만으로 시민운동이 사회개혁을 주도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외재적인 권력과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적·생활세계적 전제들을 성찰적으로 극복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정치경제적 권위주의, 반민주성이나 계급적 이슈들이 쟁점화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활세계적 이슈들이 쟁점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87년 이후의 민주개혁 투쟁, 혹은 그 이전의 반독재투쟁은 현실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별과 억압, 반민주성 중에서 '빙산의 일각' 만이 쟁점화되어 오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독재정권과 싸우는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로—지금도 법적으로 쟁점화라도 된다—구타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한산성에는 여전히 그 원혼이 떠돌고 있다. 우리가 독재와 싸우는 시기에, 각종 동물들은 정말이지 '개처럼' 취급받으면서 존재했다. 동성애자는 정신질환자처럼 취급되었고, 장애인 보행권은 의제화되지도 않았고,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남성 활동가도 집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족주의에 대한 급진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가족주의는 재벌들이 어떠한 사회적 존재양식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도 작용하고 있다. 가족주의는 각종 공적(public) 기구들을 사유화함으로써 정치경제적 구조 자체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근거이다. 교회가 세습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문화적·생활세계적 차원에서의 급진적 성찰과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사유의식은 재벌의 왜곡된 구조에도 표현되지만 족벌사학이나 각종 복지기관의 사유화 같은 형태로 생활세계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공립 혹은 국립학교들의 도서관 운동장 시설을 '국민 소유'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서울대의 도서관이 서울대 학생이나 교수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이다. 국민학교나 국립대학의 운동장은 소유주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모습은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무수한 반인간성과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회운동의 주체적 관점이 업그레이드되어야 그 반인간성과 ‘비정상성’이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문화적·생활세계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상화된 질서의 비정상성을 새롭게 쟁점화하는 실천을 시민운동이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어떤 점에서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만으로 사회운동의 선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혁의 선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적·생활세계적 전환을 위한 선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정상화된 체제의 쟁점화되지 않은 비(非)정상성을 쟁점화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지향적 정책이나 그것을 담지하는 세력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투쟁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발전주의 혹은 성장주의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생활세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지배담론으로서 발전주의나 성장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민주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와 같은 담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신근대화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시민사회 내에 발전주의 혹은 성장주의가 뿌리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치적을 경제성장률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어떤 점에서 과거 개발독재 하에서 ‘중상주의적 발전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정부나 참여정부 등 ‘민주정부’ 하에서는 세계화에 패배되면서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지배담론의 변형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뿌리깊은 발전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에 의해서, 이제 80년대 이후의 개방주의적·시장자유적 발전주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로 강화되어 시민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영어를 자르기 위해 아이의 혀를 자르는’ 영어광풍, 영어공용화론이 미치는 광범한 영향력도 이러한 토양 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주의는 반공주의와 그 이면으로서의 친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보호막 속에서 도전받지 않은 채로 존재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주의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 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도전할 수 없으며 공공성 담론도 옹호해 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 그 일부로서의 시민운동이 ‘외재’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서 시민사회 자체의 성찰적 변화 및 생활세계적 차원의 급진적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은 정치혁명이었지만 문화혁명이지는 않았다. 68년 5

#예컨대 나는 부패와 권위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권력과 싸우는 운동과 함께 시민운동가들이 먼저 부패와 권위주의와 연관된 문화적 관행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권위주의적 권력은 단순히 강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문화로 관행으로 우리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탈권위와 생활세계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실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위해서 예컨대 존칭 없애기, 장유유서 문화 없애기, 선후배를 짝듯이 우대하기 없기, 청탁 앓하기, 술먹을 때 한손으로 따르기, 더치페이 하기, 박사 호칭 등 직책 앓쓰기 등 대안적인 행위규칙들을 시범하고 담지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존 문화적 관행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 대안적인 생활세계, 그와 관련된 새로운 행위양식들—예컨대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실플라이프(simple life) 문화, 공동체 문화 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민운동가들도 시민단체 활동 중에는 기존의 관행과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기존의 관계—예컨대 고등학교 동창 교우관계—속에서는 기존의 관행에 적응하여 살아가게 된다. 어딘가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혹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겨울철에 ‘내복 없기운동’을 매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도 기존의 행위양식에 건설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일 것이다.

월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이른바 신사회운동은 그 자체가 기존의 문화적·생활세계적 관행을 혁명적으로 혁파하고자 하는 문화혁명적 성격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화혁명적 특성은 기존의 문화적·생활세계적 관행을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 시민운동이 정치개혁운동의 선두에 서 있지만, 시민운동은 많은 부분 이전의 문화적 관행들을 전제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는 가끔 시민운동가들이 문화적으로 진보적인가하는 물음을 가져 본다. 분명히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문화적·생활세계적 차원에서 결코 급진적이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의 문화와 생활세계는 특별한 보수성을 전제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문화적 급진성이 복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구사회운동적 성격 뿐만 아니라 '신(新)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점에서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권력감시적'이면서 동시에 '권력지향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사회운동은 바로 이를 뛰어넘어 생활세계적 이슈, 가치적·문화적 이슈들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급진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제 후자의 측면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 원래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탈제도정치적인 급진성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사회운동적 문제의식은 특별히 생활세계전선의 다양한 이슈들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나는 정치경제적 개혁운동과 관련하여 시민운동의 이니셔티브가 당장 소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민운동의 이니셔티브를 정치경제적 이니셔티브에서만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시민운동 부문이 존재한다면, 일정 부분 생활세계적 운동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여기서 기존에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응하는 이슈 중심의 운동단체들이 갑자기 이슈를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권력(변화) 지향적 운동에 가치(변화) 지향적 운동을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낙선운동 같은 운동을 보게 되면 여성단체, 환경단체, 지역단체, 풀뿌리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그런 것처럼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연합운동의 이슈들이 정치경제적 개혁이슈들에서만 발견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활세계적 차원의 이슈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기존의 정치경제적 이슈를 주도했던 단체들 보다도 생활세계적 이슈들에 집중해온 단체들의 선도성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생활세계적 이슈들의 경우는 '권력 지향적' 운동단체들 보다는 '가치 지향적' 운동단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시민운동적 실천의 글로벌한 차원으로의 확장--글로벌 민주주의라는 화두

다음 시민운동의 확장영역으로서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실천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을 위한 노력을 새롭게 경주(傾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구화(globalization)은 이전의 국민국

#최근 데리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종교적·이성애적 가치에 기초한 일부일체제적 결혼을 뛰어넘어 계약적 시민결합(civil union)을 제안한 바 있다(경향신문, 2004년 8월 19일). 결혼이라는 종교법에 기초한 제도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생활세계적 차원에서의 급진성의 차원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저항적 운동의 문화적·생활세계적 전제를 급진적으로 재정의하고 재성찰할 필요가 있다.

가적 실재(實在)를 초국민국가적 실재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민국가적 이슈로 환원될 수 없는, 영토적 경계를 뛰어넘는(trans-border) 지구적 이슈를 형성시켜 내고 있다. 우리는 지구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쟁점, 국내적·국제적 쟁점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이미 지구화에 맞닥뜨리고 있다. 나는 지구화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확장으로서의 글로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더구나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새롭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87년 이후 시민운동이 전개해온 민주개혁운동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보조운동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앞서 서술한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에 시민운동은 혁혁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는 분명 진보적인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화과정은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요구한 재편과 일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권위주의세력에게 강요했던 민주주의와, 재벌에게 강요했던 투명성은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에서 칭송받는 가치이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투명성(이것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일부를 구성한다)을 권장하면서, 그러한 방향의 '정상화'를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지배질서가 구축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60·70년대 반공을 지향하는 우익권위주의정권을 파트너로 하여 강대국과 제국주의 자본 주도의 세계적 지배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투명성과 민주주의로 특성화될 수 있는 정권과 체제를 파트너로 하여 새로운 지배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완화, 자유, 유연화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신질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일견 대단히 '정상적'인 기제로 작동되고 그러한 상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이상화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지구화 추진세력은 투명성과 민주성을 일정하게 갖는 체제가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작동에 있어 더 합리적인 체제라는 인식 아래 8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민주화를 오히려 지원·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는 민주주의나 투명성이라는 가치 자체에 대한 추구는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한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일국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와 투명성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지배논리로 포섭하고자 하는 글로벌 질서 자체를--급진적인 글로벌 민주주의 관점과 가치에 따라서--재편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운동의 적극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민주화된 체제가 새로운 지구화의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새로운 가치로 무장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조응하는 신지배질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 자체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재구축하려는 확장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외파'운동으로 전락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그동안 민주주의와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했던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새롭게 국내적·국제적 양극화와 자본논리, 군사

#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전 시기의 시민적·민중적 투쟁과 그 희생을 통해서 쟁취되고 풍부화되어온 어떤 제도라고 생각한다(조희연 편, 2002,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근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중들은 수천년 간의 피의 투쟁을 해야 했다. 물론 근대 자본주의가 성립한 이후에 자본진영은 맑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파로만들어갔지만 동시에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정치적 규제를 만들어갔다. 예컨대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상기해보자. 특정한 민주주의적 요구사항이 쟁취된 이후에는 '개량'이라고 규정되어 더높은 개량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개량'이라고 표현되는 것들도 무수한 민중투쟁과 희생의 '성과물'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 패권으로 점철된 글로벌 질서 자체를 민주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실천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투명성이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운동이라고 환원론적 비판의 합리적 핵심을 오히려 운동적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관점을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보면, 국내적 민주개혁운동에 집중해온 시민운동은 자신의 운동적 정당성 그 자체를 위해서도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존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공적·사회적·정치적 규제를 바로 민주주의담론의 확장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20세기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산업화, 근대화 및 자본운동에 대한 공적·사회적 규제장치가 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민주주의의 확장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인 인식에 따르면--자본주의가 자유경쟁적 시장질서이기 때문에--자본주의의 역사는 자유경쟁적 시장을 만들기 위한 역사이다. 그러나 민중적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시장의 가혹성과 자본의 비인간적인 무차별적인 수탈에 대한 공적 규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자본측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만들기 위한 역사였겠지만, 노동측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무한 이윤추구를 유일목적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19세기 자본주의에서는 무한착취의 경향을 갖는 자본주의 운동법칙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및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새로운 규제장치 혹은 새로운 재생산양식을 갖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장치를 갖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양식이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은 노동, 민중, 시민사회의 힘이 강화된 조건 속에서 적나라한 자본운동에 계급타협적인 공익적 규제장치가 제도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후 '사회적'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역량 발전을 배경으로 한, 정치사회적으로는 노자 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계급타협체제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붕괴를 비롯한 범지구적 자본운동을 제약하였던 체제적 장벽의 붕괴,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범지구적 자본운동을 가능케하는 기술적 조건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일국적 경계를 넘는 범지구적 자본운동이 가능한 기술적·체제적 조건이 출현하자 이러한 균형은 무너진다. 어떤 점에서 구(舊)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저항이 강화되면서 여러 규제장치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또한 이러한 규제장치들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진영간 대립, 자본운동의 일국적인 한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본은 바로 그러한 규제장치를 실효성 있게 하는 조건들 자체를 뛰어넘어 범지구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결 속에서 자본운동에 대한 범지구적인 민주주의적 규제장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지구촌 사회운동의 '현안'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민주적 규칙(rule) 없는 세계화'에서 어떻게 민주적 규제 규칙##이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 with

#조희연, 2002, "세계화·신자유주의·대안행동", 조희연 편, {NGO가이드}, 한겨레출판사; 조희연, 2004, 앞의 책 6장 참조.

전지구적인 민주주의의 물은 특별히 두 방향에서 작용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먼저 현 단계 세계경제질서의 '투기성(speculativeness)' 자체에 대한 국제적 규제이다. 다음 둘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결과적 측면, 즉 범지구화로 인한 국제적 양극화에 대해 민주주의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규제가 없는 세계경제의 결과는 세계적·일국적 빈부격차의 증대, 빈곤의 세계적 확산, 금융산업을 통한 불로소득의 증대, 선진국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지배의 확대, 고용의 불완전·불안정성의 증대, 그로 인한 '노동유목만화' 등 국내적·국제적 양극화의 증대이다. 국내적·국제적으로 이

democratic regulatory rule)로 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항은 바로 세계화된 민주적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운동의 관점에서도 지구화의 문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80년대 이후 전개해온 '민주주의를 화두로 한 운동'이 자기확장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화두의 내용을 단순히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으로 급진적으로 확장하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질서를 인간화시키는 실천이야말로 한국의 시민운동의 새로운 '확장'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지구화에 대항하는 반세계화운동의 성장으로 인하여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공적·사회적 규율을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한 정치적 공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세계화운동 속에서--혁명적 운동이 발언하는 영역 뿐만 아니라--'개량적' 운동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화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의 성장, 또한 가혹한 자본주의화에 대한 저항운동의 성장이 경제적 근대화과정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공적 규제장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어 결국 산업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주의의 영역이 생성되었던 것처럼, 지구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글로벌 경제민주주의 혹은 글로벌 민주주의의 영역이 반세계화운동의 성장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사회주의 붕괴의 충격으로 시작한 90년대는, 거칠 것 없는 자본의 시대 또는 지구적 자유시장의 시대를 향한 질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복지, 노동권, 시민권, 인권 등의 이름으로 시장과 자본운동에 가해졌던 각종 제약들은 국제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해체되고 지구적 단일시장으로 향하는 무한경쟁만이 앞다투어 전개되었다. 참담한 사회주의 붕괴의 체험 속에서 이제 '더이상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티나(TINA. There is no alternative)적 세계관이 압도하였다. 그러나 90년대가 끝나가는 무렵, 그리고 새천년이 시작하는 즈음, 바로 90년대적 흐름에 대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반역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WTO 각료회의에 대응하는 99년 11월 시애틀 투쟁과 2000년 9·11사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바로 90년대적 세계화에 대한 상징적인 반격의 성격을 띄고 있다. 시애틀투쟁을 시발로 하여, 세계화를 시장의 입장에서 주도하는 각종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에서는 세계화의 파괴적인 경제적 측면에 대항하여 대대적인 저항이 표출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9·11사건과 그에 뒤이은 반테러전쟁 및 이라크전은 세계화의 모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운동에 '반전평화'의 화두를 던졌다. 광주항쟁 이후 권력의 폭력적 성격이 적나라하게 노정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한단계 발전하였던 것처럼, 정작 반테러전쟁과 이라크전은 시장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군사주의'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노정함으로써 반세계화운동이 반전평화운동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한단계 비약하도록 만든다. 바로 이러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제 '대안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타타(TATA. 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적 세계관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안적 세계는 가능하다'고 하는 자신감 어린 목소리들도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현존 지구화가 그동안 자본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지구촌 사회운동의 저항 운동에 의하여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본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지구화를 보

른바 '20:80사회'(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강수돌 옮김, 1997, {세계화의 뒷: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 영림카디널)가 출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빈곤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overty)가 증대된다(Chossudovsky, M., 1998,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 당대).

완하지 않으면 압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고, 저항운동의 입장에서--비록 현존 지구화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현존 지구화를 위기적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저항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해서 일정한 적극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나는 글로벌 민주주의 공간이라고 보고 한국의 시민운동이 새롭게 주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공간 속에서, 저항운동은 지구적 질서의 급진적인 민주적 재구축--글로벌 민주주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의 문제를 추동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재의 국제적 분쟁이나 갈등을 관리하는 체제로서의 UN의 제도적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현재와 같은 국내적·국제적 양극화를 촉진하면서 민중들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초국적 금융질서와 WTO질서는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가, 기존의 국민국가적 질서와--형성과정에 있는--글로벌 가버넌스 질서의 경계와 관계는 어떻게 재구조화되어야 하는가, 국민국가적 질서에서 민주주의가 보편가치였던 것처럼 글로벌 민주주의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당성체계, 어떠한 분배체계, 어떠한 윤리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는가, 반세계화운동으로 표현되는 지구촌 시민사회의 요구가 표현되고 수렴되는 글로벌 가버넌스체제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등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지구촌의 운동들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가고 있고, 한국의 사회운동들도 이전에 비해 더욱더 폭넓게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 2004년 1월 16일에서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4회 세계사회포럼에는 한국에서 400명이 참가할 정도로 적극적인 되어가고 있으며, 반전평화운동 같은 경우 한국이 지구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적극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의 작은 예이지만, 1999년 한국의 금융노련이 IMF차관 공여국 중 최초로 서울 지방법원에 IMF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IMF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관철해 고금리로 인한 '정상기업의 부도, 신용경색, 수입개방 강요, 노동시장을 자본의 이해대로 개편, 알짜 공기업과 은행 헐값 매각' 등 한국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논지에서 이루어진 제소는, 1999년 대구라운드에서 주목을 끌은 바 있다. 지구화에 대항하는 운동의 과정에서 일국적 일국적 운동들은 개별국민국가 의제의 지구화, 지구적 의제의 국내화와 함께, 지구적 의제 자체의 설정과정에 개입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피억압민족으로서의 오랜 경험, 동질적인 민족으로서 생활해온 오랜 경험은 한국의 저항운동에 있어 일국적 시각을 뛰어넘는 지구적 시각이 대단히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인식의 한계 속에서, 실천적 차원에서 지구적 연대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미약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운동 역시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약자에게 불이익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운동으로서 전개되고 있고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는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외국인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시민권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일국적 투쟁을 통해서 쟁취될 수 없는 것이고 지구적 저항연대를 통하여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고 할 때, 한국저항운동은 외국인노동자문제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지구적 투쟁의 중요성과 지구적 투쟁에서의 급진주의의 가능성을 체득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존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 투쟁은 일국적 저항으로 완결될 수 없는 초국민국가적 투쟁의 차원을 부단히 일국적 저항에 인입(引入)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IMF나 WTO체제 문제 등 글로벌 가버넌스 체제의 쟁점화를 포함

하여 '실재'화되어가는 지구적 차원을 전제로 한 지구적 행위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의 급진주의적 세력들은, 일찍부터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노력들을 행해왔고 그 결과 이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개량적' 성격을 갖는 시민운동 역시 이러한 글로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어떤 의미에서는 비(非)혁명적이기는 하지만--자기 나름대로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넷째, 이제 한국의 사회운동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의제들을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싸울 단계에 서 있다. 사실 한국은 세계 12대 무역대국이며 UN분담금이 세계8위에 이르는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이기주의적이고 '민족이기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그동안 피억압민족으로 존재하여 왔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그 자체가 억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아니어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다국적 자본은 세계경영--곧 세계적 규모의 축적--을 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준(準)제국주의적 국가로 변화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사회운동이 민족주의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비판하고 성찰해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러한 축적과 착취 자체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지만--이를 긍정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의미에서도--한국사회 운동은 적극적인 '글로벌 참여'와 기여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사회운동은 지구화가 부여하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재성찰 가능성을 현실화함으로써 그동안 일국적 운동 속에서 억압되고 주변화되고 있었던 대중들의 초국민국가적 역동성을 발현시켜야 한다. 또한 글로벌 민주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87년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4년 4.15총선에서 드러나듯이 한국민주주의의 일단계 진전을 이룩하였다. 국내적 시각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비교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여러나라들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역으로 대단히 편협한 이기주의적 자세로 규정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100보(步)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도 50보 정도 진전시키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5보, 글로벌 민주주의를 1보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60-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나라의 지원을 상기해보자. 이제 우리가 후발민주화 및 글로벌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평등성을 글로벌한 차원으로까지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지구적 급진민주주의(global radical democracy)' 관점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근대 민족국가에서 복지국가를 포함한 진보적 정치 혹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장 혹은 경제사회의 정치적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해체되어가고 있다.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치 자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민족국가적 정치의 한계성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 동력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해방적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글로벌 정치 자체의 진보를 문제 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급진민주주의적 인식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제를 시민운동이 짊어져야 한다. 이는 제도정치적 부르주아적 합리화를 뛰어넘는 급진성, 제도정치 자체의 근대적 한계성을 뛰어넘는 급진성, 민족국가적 정치를 뛰어넘는 글로벌 급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한, 일국적 차원에서는 제도정치적 확장 속에서 시민사회의 동력이 상당부분 제도화되거나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를 초국민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국가적 시민권의 영역을 넘어서서 시민권이나 노동권의 문제를—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등—확장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분 진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은 국민국가적 시민권, 불구화된 제도정치적 근대화라는 문제의식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민중운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에 비해서 이러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민중운동 역시 국민국가적 저항을 넘는 국제주의적 전망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계사회포럼이나 아시아 사회포럼의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민중운동은 국민국가적 전망에 '유폐'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사회운동의 접근은 사실 '민족주의'적 접근법이 중심적이다. 노동운동에서도 국민국가적 인식지평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대기업 노동조합과 조직화된 노동조합운동을 일종의 '기득권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물론 우리의 경우 조직노동운동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지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하에서 진행되는 민주정부의 경제적 자유화 정책은 조직적 저항력이 있는 중심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타협적으로 인정하고 조직적 저항력이 없는 부문이나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부문,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시민권의 국민국가적 한계에 의해 노동권의 보장이 거부되는 부문들을 중심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핵심적인 노동자계급은 비정규직 노동자, 주변적 노동자, 불안정·불안정 노동자, 특수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계급의 확대연대전략은 결국 국민국가적 차원을 넘는 반세계화 투쟁,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이미 자본운동의 세계화라고 하는 조건 위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적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노동권과 시민권의 초국민국가적 확장의 관점을 더욱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시아적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연대를 위한 투쟁(예컨대 아시아 사회권 및 평등노동권 실현을 위한 투쟁 등)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이 힘 있게 나설 수 있는 글로벌 연대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의 과잉 민족주의, '과잉'국가주의적 성격을 성찰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지구화를 친민중적인 것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부시낙선운동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한국낙선운동의 세계화'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는데,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실재적(real)'인 것으로 설정하고 그 일부로서 '지구촌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부시를 낙선시키기 위한 초국경적 캠페인으로서의 문제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의 서술에 대해서는 조희연 편, 2004,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동학}, 함께읽는책, 참조

##참여연대의 예를 든다면, 예컨대 아시아 민주주의센터 혹은 글로벌 민주주의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1)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 2)아시아의 권력감시를 위한 지원활동, 3)글로벌 민주주의 관련 활동, 4)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관련된 국제경제체제의 민주적 개혁과 관련된 이슈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UN의 개혁문제,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토빈세, 국민국가적 경계를 넘는 다양한 지구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 그 일부로서의 시민운동에도 국제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초국민국가적 연대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내부에서 국제주의적 담론은 주변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자본운동의 범지구화는 국가적으로 '분절화'된 투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점으로 사회운동을 위치시켜가고 있다. 현재 "자본은 지구적이고 노동은 지방적이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주의의 부활과 국제주의적 연대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구화는 시민행동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포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측면들을 지구촌 사회의 새로운 공론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국가의 틀에 갇혀있는 시민운동의 공론공간을 범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5. 한국 사회운동의 보편주의적 사고를 향하여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사회운동 의제들을 '특수적' "민족특수적" "유일무이"한 이슈로 보는 사고를 넘어서서,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를 '보편적 독해(讀解)'라고 표현하고 싶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많은 학살사건들은 '국가폭력과 학살'이라고 하는 보다 보편적인 주제의 특수한 사례이다. 광주항쟁도 전투환이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야만집단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인류역사의 전과정에서 표현된 국가폭력에 의한 보편적 희생사례의 하나이다. 우리가 투쟁하는 사례들을 보다 보편적인 이슈로 파악해낼 때, 광주학살에 못지 않은 관심으로 65년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는 수하르토에 의한 100만명 학살사건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고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구적 의제들을 또한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슈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적 의제들을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보다 발전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각 부서들의 활동을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국내사업부서와 국제사업부서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제개혁센터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감시를 한 부서로 만들어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가 글로벌한 차원으로 운동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국제연대 담당으로 아시아 출신 활동가의 총원, 아시안 활동가 인턴십의 확대,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활동가 초청 훈련지원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율리히 벡, 홍운기 옮김, 1999,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비전: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64쪽.

##반세계화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조희연 권영중, 2001, "반세계화 행동주의의 논리", {동향과 전망}, 여름호; 조희연, 2004, 앞의 책, 7장 참조

###예컨대 정신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접근법이 존재하고 있다. 곧이 유형화해 본다면, 민족주의적 접근, 여성주의적 접근, 반군사주의·평화주의적 접근, 인권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접근이 '지배적'이나고 하면 아마도 민족주의적 접근과 여성주의적 접근이 지배적일 것이다. 여성주의는 그 자체가 보편주의적 성격을 내장하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참여연대의 활동도 '보편적으로 독해' 해 본다면, '권위주의권력의 민주주의권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운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후발 아시아 민주화국가 모두에 필요하다. 참여연대의 10년을 돌아보게 되면, 참여연대의 핵심적인 활동정체성은 '반부패운동과 결합된 권력감시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를 아시아의 전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연대 활동의 '아시아적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보다 적극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PSPD(참여연대), Indonesia, PSPD, Nepal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한국 참여연대가 PSPD 국제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의 '패권'을 지향하지 않고 글로벌 기여를 지향한다는 전제 위에서 말이다.

<진보의 시각으로 본 한국사회>

-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

홍세화

(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

- 머리말

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자로 만족한다. 만약에 내가 프랑스 사회구성원이라면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프랑스사회의 나는 한국사회의 나에게 개량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소수가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수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더 혁명적'이라는 그람시의 주장에 21세기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볼셰비키 혁명은 20세기 초에나 가능했다. 실제로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러시아 지배계급이 무능하여 지배자로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체제는 1세기를 사이에 두고 급격히 발달한 정보통신과 대중문화를 장악하여 노동을 분열시키고 비판세력을 자본에 포섭시킴으로써 자본의 노동 통제 능력을 강화시켰다.

나는 물론 자본주의에 미래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미래가 없는 것은 인간의 반란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반란 때문일 것이다. 자본을 매개로 인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반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기어이 올 것이고 그 때에도 자본주의는 탐욕의 아집을 계속 부리겠지만 끝내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다.

인간은 지배하기 위해 같은 인간을 죽인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같은 인간을 집단적으로 죽일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전쟁 수행자들인데, 인간 문명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연의 반란은 지배, 피지배를 뛰어넘어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공멸을 가져온다. 즉, 인간이 자연의 반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의 반란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불허하기 때문이다. 원시공동체사회가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와 함께 잉여 생산물이 없었던 것에서 가능했다면, 자본주의 이후가 가능한 것은 지배계급이 자연의 반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인간이지만,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자연 앞에서 마침내 투항할 수밖에 없다.

원시공동체사회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타율적 외경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앞으로의 생태공동체사회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율적 외경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오만하다. 자연의 경고와 신음소리를 경청하여, 자연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인간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로 나아가기엔 인간은 아직 지극히 오만하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생태공동체는 부락 단위에선 가능할지

모르나 더 큰 단위에선 아직 그 진정한 씨앗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생태주의를 고민하는 사민주의자로 만족한다. 내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나아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은 것은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지형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정치사회 의식과 직접 관련된다. 즉, 한국사회구성원들은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든 사민주의든 그것들이 ‘사회악’이거나, 적어도 ‘한국사회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즉,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은 절대 다수의 동의나 참여 없이 사회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나 의미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그 가능성은 없다. 둘째 이유는 이상사회를 미리 그려 놓고 그것을 위해 운동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오늘 이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과 고통을 덜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평등하고 고통 없는 사회를 미리 그리기보다는 -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것은 자칫 ‘주의’에 빠져 인간성조차 배반할 위험이 있다 - 지금 이 사회의 불평등과 고통을 끊임없이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세기 동안의 진보 운동의 역사를 바라본 내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나는 내 살아생전에 한국사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본디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사민주의 요구의 반영이라기보다 사회공공성 확충을 요구한 공화주의 이념의 반영이다. 내가 사민주의자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살아생전에 사민주의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만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도 비롯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할 수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수 없는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을 배반하는 것이다. ‘Republic’이 ‘공적인 일(res publica)’을 어원으로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공공성’ ‘공익성’ 확보에 있다. 자유와 평등 의식과 함께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전제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의식이 부재한 탓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은 본디 사민주의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경제력은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고 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교육은 과잉상태에 있고, 의료 또한 의료의 공공성은 채워지지 않은 채 일탈된 형태의 과잉을 보여주고 있다. 물적 토대가 충분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요구하면 수구기득권 세력은 바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좌파적 발상’이니 하는 논리를 펼친다. 그것은 바로 수구기득권세력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인 사회공공성, 공익성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바로 그들이 분단이후 반세기를 넘는 동안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배반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제부역세력

누구나 잘 알듯이 남한에서 친일파로 불리는 일제부역세력은 청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말로는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실은 일제부역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보다 바로 그들이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모든 공적 부분을 장악한 헤게모니 집단이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한번 짚어보자. 정치, 경제, 법조, 경찰, 군사, 언론, 교육, 종교의 모든 부분에서 일제 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들은 청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지배세력 그 자체가 되었다. 당연히 민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 비어있는 일부를 채웠고, 좌우 분단구도를 타고 ‘보수’와 ‘민족’을 참칭함으로써 또 다른 부분을 채웠다. 일신을 위해 민족을 배반했던 그들이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공익은 물론 민족이익이 염두에 있을 리 없었고 오직 사익추구에 열심이었다. 가령 조선일보를 보자. 공기(公器), 즉 사회구성원들이 공정성에 입각하여 공익을 추구하리라고 믿는 신문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마찬가지로 공당(公黨)도 없었다. 공익을 추구해 마땅한 나라의 공적 부분이 온통 사익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공교육의 장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그러면 일제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사익추구 집단이 반 세기동안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였을까. ‘민주’가 독재에 의하여 유린되고 민주공화국이 철저히 배반되었는데도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냉전외식에 바탕을 둔 색깔론과 지역패권주의가 강력하게 관철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장악한 지배집단은 이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식을 형성시키고 주입시켰을까. 바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다. 민족적 정통성도 없는 지배계급에게 피지배계급이 스스로 복속하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겠는가. 바로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는 의식이다.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화작업이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16세기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선언한 이래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스피노자나 칸트가 이미 지적했듯이 인간은 의식하는 존재이긴 하나 자유롭게 의식하는 존재는 아니다. 즉 의식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 환경에 있는가에 의해 인간의 의식은 규정된다. 19세기에 칼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 다’고 함으로서 의식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존재 자체임을 명료하게 밝혀주었다. 칼 마르크스 자신이 이미 교육이 존재를 벗어나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바 있지만, 현대에는 더욱 교육과정과 대중매체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급기야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거나 부정하는 의식형성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지배집단은 그들이 장악한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속하도록 획책했던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일제침탈, 분단, 전쟁과 독재로 이어진 사회에서 의식 주입과 세뇌는 전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

부하고 부정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칼 마르크스의 명제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칼 마르크스의 이 명제의 뜻은 본디 아주 간단하다. 자본가는 자본가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가의 의식을 갖고, 노동자, 농민은 노동자, 농민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 농민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계급결정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 존재가 계급의식의 당연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곱씹다면 한국에 1500만 노동자가 있고, 35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1500만 노동자 의식, 350만 농민의식, 400만 도시빈민의식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회변화를 원하는 주체형성이 그것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1500만 노동자라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그들 중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의식, 빈민의식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의 명제는 한국에서 철저히 배반되고 있는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때문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단체제 속에서 전일적으로 관철된 냉전 의식화, 안보 의식화, 질서 의식화, 친미사대의식화, 물신숭배 의식화, 지역감정 의식화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사회에는 분명 집안에 병자가 생겼을 때 병 걱정애 앞서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존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비인간화를 가져온다. 그 존재들은 당연히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존재의 요구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의 시선을 보내거나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거리를 둔다.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은 무상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배집단이 반세기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에 있었던 것이다.

-탈의식화

따라서 나는 '탈의식화'를 주장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탈의식화에 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권에서 흔히 의식화를 말하지만 거기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오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오류는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관철돼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긍정적 의미의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거친 다음에나 가능했다. 어쩌면 탈의식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탈의식화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가령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적 의식과 안목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은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의식을 반전시킨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지금도 관철되고 있음을 뜻하며 그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자나 농민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은 거의 계급적 존재에 따라 그러한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모두 탈의식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의 길

진보란 사회진보이며, 사회진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로 담보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토대의 성장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미 충분히 추동되고 있다. 모든 정치 사회 현상은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은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며, 한국사회의 진보는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진보를 전제한다.

운동은 왜 운동인가. 잘 알려졌듯이 모든 운동은 '조직' '학습' '선전'을 기본 축으로 이루어진다. 운동, 즉 움직임은 변화로서 조직을 요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해야 한다. '학습'은 나(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고, '선전'은 이웃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도 강조했듯이 사람은 한번 형성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조차 무지와 헤게모니 작동에 의해 고집한다. 진보가 느리고 어려운 까닭이 이 때문이며, 진보가 불편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바꾸는 만큼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리고 어려운 것이며, 고집하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실상 진보가 편하고 쉬운 것이라면 진보는 그 의미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진보의 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인간의 길'이다.

제9강

한국사회에서 생협리더의 역할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1. 나는 리더인가?

리더, 비전이란 말이 모든 조직의 화두가 된 시대

2. 우리 사회의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

1) 리더의 덕목

일반적으로 리더에게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가?

2) 여성 리더의 덕목

여성이 리더가 되어 본 역사가 매우 짧다

아직 여성 스스로에게조차 낯설은 실험과 모색의 영역

3) 생협 여성 리더의 덕목

우리가 가진 약간의 돈, 시간, 지혜, 노동을 어떻게 모으고 나눌 것인가?

민주시민학교로서의 생협 - 실험의 장, 누구나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의 기관을 스스로 만든다.

우리가 만들어 낸 제도를 지키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참고> 2005 아시아 자매회의, 우리들의 협동조합의 8원칙

- * 협동조합의 7원칙 + 대안적 사회 창출을 추가
- * 우리 조합원들은 자기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창조합니다. 먹거리, 성평등, 환경, 지역, 복지 등 생활 제반 영역을 정부나 자본시장에 내맡기지 않고 조화와 협동,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뜻을 모으고 행동하며 실천합니다.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생활재를 생산자와 함께 만들고 구매력을 결집하고 예약공동구입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의 구조를 유지 발전시키는 대안 경제를 구축합니다.

3. 생협 리더로서의 나에게 묻는 몇 가지 질문

- 1) 나는 우리 생협의 정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2) 이사회는 우리 생협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3) 이 사회의 주된 역할은 사무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 4) 나는 연합회의 2006년도 사업기조를 잘 알고 있다.
- 5) 나는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6)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사회협약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 7) 아시아의 가난한 농부들과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농산물 수입도 가능하다
- 8) 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
- 9) 2010년의 변화된 나의 모습과 우리 생협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4. 생협 리더의 비전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레이드로우 보고서)

- 식량문제에의 도전과 기아의 극복
- 인간적이고 의미있는 일자리의 마련
- 탈농비사회를 향한 협동구조의 재구축
-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

5. 협동조합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이 부분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번역되어 나온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1980 ICA 모스크바 총회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여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협동조합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래의 발전을 인도할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협동조합은 고용된 전문직원과 함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비전문가 지도자가 반드시 요구된다. 지난 20년동안 전문직원의 채용과 훈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조합원 지도자의 선출과 훈련은 경시되어 왔다. 조합원 지도자들이 제 위치에 설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열어 주어야 한다.

단지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합원 지도자 집단(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당면하는 긴급과제는 전문가나 기술자만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조합원의 관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질은 최상급의 지도자가 지도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급 지도자는 반드시 초인일 필요는 없으며 그룹이나 팀에서 다른 사람들과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도자를 말한다. 1급 지도자는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1급의 인물들을 끌어 모을 수 있지만, 2급의 지도자 주위에는 지시에 따라 일하는 3급의 인물들만이 모이게 된다

2. 협동조합은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조직은 ABC에 의존하고 있다.

Administrators(관리자), Businessmen(사업가), Communicators(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협동조합사업 시스템의 내부기관지는 이상하게 조합원에게도 정보전달수단으로서의 효과

가 없다.

단지 기업들을 이기거나 그들과 경쟁하는데 불과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는 장래 협동조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책이 될 수 없다.

3. 교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협동조합이 사업조직인 동시에 교육조직이 되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잠재적 역할은 대부분 상실되고 말 것이다. 조합의 이사회가 교육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육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교육이 완전히 무시되는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된다.

4. 정부의 고유한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재정지원을 할지라도 결코 지배하거나 혹은 스스로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의 너무 긴밀한 관계는 협동조합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구입할 것인가?

탄탄한 저축 신용제도의 확립은 국민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1단계 조치는 아니라고 할 지라도 모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반이다.

이익금으로 자본을 축적하기 보다는 사업운동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협동조합이 장래 대단히 유리해 질 것이다.

6. 특별한 종류의 경영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자본주의적 대기업의 경영자는 소유자보다 훨씬 많은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영자는 조합원을 소유자로서 존중하고 조합원이 선출한 지도자와 관리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리더십은 대개 팀워크의 문제이다. 장래의 경영에서는 직장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7. 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여성의 재능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장래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은 여성의 영향력과 지도력 하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8. 제3세계의 협동조합은 누가 지원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원조 프로그램은 충분히 장기간에 걸친 조정과 집중이 결여되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되고 안정된 협동조합운동을 정착시키려면 정부 대 정부 방식의 원조는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식인 것 같다. 필요한 것은 국민대 국민 방식의 민간차원의 원조를 더욱 늘리는 일이다.

9. ICA의 장래 역할은 무엇인가?

장래에 전세계 협동조합 운동은 지구촌의 각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정과 정보센터를 계속 필요로 할 것이다.

10. 협동조합은 미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현대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는 거대기업과 거대정부라는 두 개의 가장 강력한 조직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시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은 그들 자신의 집단, 특히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이다. 인생에 있어서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성이 군중 속에 함몰되어 말살되어 가는 것을 막고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장래에 생존을 위하여 중요한 생활단위는 지역사회라는 그룹일 것이다.

6. 맺으며

누구나 그 일이 필요하다고 믿을 때는 이미 늦었다.

리더는 단지 몇 사람만이라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감지한 때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자.

제10강

일본생협운동사, 그리고 세계의 생협

김형미

(한국생협연합회 국제팀장)

목차

■일본생협운동사

1. 일본 생활협동운동의 출발(1879년-1945년)
2. 전후 생활협동조합의 재건과 전개(1945년-1970년)
3. 생협운동의 발전과 동경ICA대회(1970년-1992년)
4. 시대 변화와 자기혁신에의 요청(1993년-현재)
5. 최근의 주요한 변화(2010년 비전과 생협법 개정)

■세계의 생협

1. 유럽의 생협
2. 북아메리카의 생협
3. 아시아의 생협

■ 맺으면서

■ 일본생협운동사

1.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출발(1879년-1945년)

(1) 일본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

1879년 영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에 영향을 받아서 설립된 共立商社. 발기인은 모두 저명인사로 오피니언 리더로서 영향력을 지닌 인물 중심. 한편, 일본의 노동조합 원조인 노동조합期成會[#]의 지도 하에 1898년 설립된 共働店은 12개 조합, 조합원 1,350명이 가입한 생협으로 운동적 차원에서는 共働店이 생협 운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생협으로 1898년 도시샤(同志社)대학 생협이 최초의 사례이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의 발전 모델로 비스마르크식의 통일독일을 모범으로 삼았다. 당시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들을 구제하기 위해 1900년 산업조합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신용, 판매, 구매, 생산의 4영역으로 나누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면에서 우대하였다.

[#] 노동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 코민테른 상임위원이 되기도 한 카다야마 켄(片山巖人)의 지도 하에 결성됨.

(2) 신흥소비조합운동의 대두 -시민형 구매조합의 탄생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 시대(1914년-1925년)는 유럽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일본이 급격하게 공업화를 추진하던 시대. 노동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서양의 영향을 받아 노동운동, 인텔리겐차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운동조직이 급속히 늘어났다. 1919년에 요시노 사쿠조(古野作造)가 발기인이 되어 동경가정구매조합[#]이 설립되었다. 이 조합은 YMCA회원과 저명인이 중심이 되었는데 1920년에는 조합원 1,000명, 1922년은 조합원배가운동 결과 1,60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음해 '10년 동안 조합원 10만 명'을 목표로 삼아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당시로는 참신한 조합 스토어를 개설하였다. (1층은 신선식품 매장, 2층은 의류, 조리대가 있는 요리실과 집회실) 요시노는 '조합원 중심주의'를 강조하여 조합 내에 부인회를 발족시키고 가정학교, 청년학교, 산업조합학교 등 교육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생협운동사에 길이 남는 것은 카가와 토요히코(賀川豊彦)가 설립한 고베소비조합일 것이다. 1차 세계대전 후 물가상승과 소매상의 폭리에 생활이 곤궁한 고베시 카와사키조선소 노동자들이 구매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카가와 토요히코는 노동자만의 구매조합이 아니라 '폭넓게 고베시민을 포함하여 사회사업으로서 생협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득하여 즉시 1,300여 명의 찬동자를 얻었다. 이리하여 1924년 4월 고베소비조합이 탄생하였다. 조합의 설립선언에는 '공동의 힘으로 확실하고 저렴한 일용품...조합원의 수요에 따라서 분배하여 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조합원 상호의 융화와 단결에 근거해 상호부조의 정신을 키우고 발전을 꾀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강령으로 내세운 것은 ①실질 본위의 일상제품의 염가공급 ②이익을 둘로 나누어 적립금과 구매배당금으로 사용한다 ③실질 본위의 물품 제조와 조합원의 상호부조였다. 이는 생협의 이념과 원칙을 명기한 획기적 내용이었다. 조합원 구성은 노동자 30%, 회사원 등 급여성일자 33%, 상공업자15%, 의사 등 자유업 13%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근처의 스미요시마을에서도 카가와와 영향을 받아 나니와(難) 구매조합이 탄생하였다. 이 두 생협이 합병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단협인 코프 고베^{##}가 태어났다.

이런 시민형 생협은 1927년 조합 수 106, 조합원수는 74,985명 정도로 확산되었다.

(3)노동자 생협의 발흥

1919년에는 노동조합 운동가들의 지도로 동경츠키시마(月島)구매조합이 탄생하였다. 이어 1920년에는 共働社^{###}라는 제한적인 구매조합도 생겨났는데 1926년까지 10곳의 공동사가 설립되어 노동 정의시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1932년에는 동경의 서민동네 미카

당시는 생활협동조합이란 명칭은 없었고 구매조합, 혹은 소비조합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다.

2004년 현재 조합원수1,234,511명, 공급고 2,806억 엔, PB 품목 수는 2,463개. 1962년 나니와고베생협으로 통합할 당시는 조합원 4만5천여 명.

노동운동가 平澤計七가 대표적 인물. 平澤는 철도노동자이자 작가. 노동연극, 노동자생협, 노동금고를 주창, 설립하기도 한 선구자였으나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사회주의자 대량 학살의 과정에서 경찰서에 갇혀 살해되었다. 당시 34세.

일본인쇄주식회사 노동조합의 59일 파업, 노다간장(野田醬油)의 9개월 투쟁시 병참기지 역할. 대부분 노동쟁의가 패배하고 그 패배는 생협의 경영을 직격하여 해산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산당과 노동운동에선 노동자구매조합의 이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와시마(三河島)에서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쌀을 내놔라'며 경찰서에 진입한 궤기가 있었다. 세계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운데다 흉작이 이어져 동북지방에서는 처녀를 수도권의 유흥업소에 팔아넘길 정도였다. 당시 38市153町177村에서 이 쟁의는 계속되었다. 이 때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게 반회(班會)이었다.

일본에서 반회가 최초로 탄생한 것은 1926년 동경 서부지역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西郊共働社에서이다. 이 때 '조합원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에 대해 상담하는 모임으로 조합 활동의 기초'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최초의 시도이다. 그러나 반회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널리 확산된 것은 노동자 구매조합을 중심으로 '쌀을 내놔라' 투쟁을 통해서이었다. 5명, 10명 단위의 반회를 통해 홍보하고 행동을 조직하고 투쟁결과 불하받은 쌀을 배급하였다. 교토구매조합에서는 '반은 같은 직장동료나 이웃동지의 모임으로 기본적 조직, 반 운영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장소는 돌아가면서 열며, 내용은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운영하자'고 하였다.

의료생협도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1919년 시마네현의 신용구매조합에서 최초로 탄생했는데 법적 허가를 받을 길이 없어서 '의사가 없는 마을에선 진료소는 병원이 아니라 생산 시설'이라고 억지를 부려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의료생협은 1931년 5월, 카가와와의 지도를 받아 설립된 동경의료이용조합이다. 이 조합은 '질병 치료는 빈부, 고하, 지역 구분 없이 향수해야한다'는 이상을 내걸고 보건의학, 예방 증시의 조직적인 보건 운동을 펼쳤다. 당시도 일본외사회랑 동경외사회는 설립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 1932년엔 인가를 받았다.

(4)군국주의 전쟁과 생협의 고투

생협의 상부상조정신이 진가를 발휘하던 때는 1995년 고베대지진, 2004년 니이가타대지진과 같이 커다란 재해를 당했을 때인데 그 원조를 거슬러 가면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의 생협의 원조활동을 들 수 있다. 1923년 9월1일 일어난 대지진으로 사망자 10만, 행방 불명자 4만여 명이 발생, 생협들 역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 소식을 들은 카가와는 즉시 상경하여 대학생협 및 대학의 협력을 받아 구제활동을 펼쳤다. 집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복지관(settlement)[#]을 설치하고 진료소, 법률상담소, 아동학교, 탁아소와 소비조합 매점을 개설하였다. 또한 지진 피해자들의 탁아소 급식으로 영양식 배급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가내수공업,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도 환영을 받아 급속히 확대되었다. 4개 사업소에서 배식한 수는 1일 최대 2만 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자 생협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지도자들은 사상범^{##} 등으로 체포되고 사회주의조직이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을 받았다. 사업은 1942년 식량관리법 실시 이후 쌀 배급권을 상실, 실질적으로 사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1945년 대 공습 후엔 대부분 시설 파괴와 조합원 대피가 이어졌다.

settlement movement는 원래 1870년대 영국의 경제, 역사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노동자빈곤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거점으로 주창하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여성운동가들이 적극 실천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이 시기 대학생협을 중심으로 세틀먼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지역복지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생협의 상부상조정신은 사회주의 사상, 인류의 복지 주장은 반전사상으로 찍혀 카가와도 반전활동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공산당이 비합법화되면서 그 영향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대다수 노동자생협지도자들이 구속되고 학살당하기도 했다.

이를 피한 조합은 후쿠시마소비조합, 교토구매조합 등 극소수였으며 망연자실 속에 패전을 맞이하였다.

한편, 어려운 시대에는 적과 동지가 뚜렷하게 구별되기도 한다.

군국주의로 치달았던 1930년대 어용구매조합*은 수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조합중앙회로 결집하였다. 한편, 이에 저항한 노동자생협과 시민형 생협들이 1931년에는 전국소비조합 협회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메이데이기념집회, '쌀을 내나라'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

•카가와 토요히코(賀川豊彦1888-1960)

크리스찬, 메이지대학, 고베신학교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에 유학, 귀국 후 23세 무렵 고베 빈민가에 살면서 빈민구제전도를 시작, 1920년 오사카에 共益社, 1921년엔 고베소비조합 설립, 1923년 관동대지진 다음날 상경하여 구조 활동에 돌입, 1924년 동경에 이주하여 동경학생소비조합 설립, 1927년 江東소비조합, 1928년 中の郷質庫信用組合, 1931년 동경의료어용조합 설립, 1941년부터 민간 평화사절로 4개월 300여 차례에 걸쳐 일본과 미국의 평화를 호소했으며 반전운동 혐의로 일본에선 구속당하기도 했다. 1951년 일생협연합회 창립과 함께 초대 회장 취임, 평생 크리스찬으로서 평화, 노동, 농민, 어민조합, 협동조합 등 폭넓은 활동 전개, 우애와 봉사, 협동과 상호부조에 의한 사회를 주창, 전후 ICA중앙위원, 60년 안보투쟁의 와중에 서거, 그를 기념하여 일생협은 카가와 기념 전국생협교육기급협회를 설립(1981년)하고 생협 연구자, 생협운동을 지향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지급, 연구비 지급함.

•요시노 사쿠조(古野作造 1878-1933)

미야기현(宮城縣) 출생, 동경대 교수, 정치사, 정치학을 가르침,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정치의 민중화를 주창, 다이쇼데모크라시의 기수가 되었다. 무산자계급 교육에 열심, 무산정당 결성도 시도했다. 1919년 동경가정구매조합을 창립하여 이사장을 맡음,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는 '미국 선교사에 의한 부화뇌동', '독립은 조선인의 망상에 지나지 않다'는 등의 보도일색이었으나 요시노는 동경대 서클인 黎明會 주최 집회를 열어 재일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강연회를 열었다. 일본의 대한정책을 비판하는 문필활동을 펼침, 조선병합, 동화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2. 전후 생활협동조합의 재건과 전개(1945년-1970년)

(1) 패전 직후의 생활과 생협의 재건

일본은 군국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사망자 300만 명,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연합군의 점령사령부(GHQ) 지배를 받게 되었다. 식량부족은 전시 하보다 더 심각하고 인플레이와 암시장이 극성을 부리던 상황이었다. 1947-48년 전후로 전국에서 생협 설립 붐이 일어났다. 당국의 탄압과 공습으로 소멸 직전의 생협이 1947년에는 6,503조합**이나 생겼다. 이는 집단적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사의 노력으로 전쟁 전 조합들 재건하거나 새로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전쟁 전 전국소비조합협회의 흐름을 계승한 이들은 합동으로 1945년 11월에 일본협동조합동맹을 발족하여 국민적 과제로 식량획득투쟁을 벌여 채소, 선어, 절임류, 된장, 간장, 의복, 연료 등의 배급권을 획득했다. 이 활동을 더욱

* 이시지마철강노조, 미츠이조선노조 등 군수공장 노동조합의 복리후생시설로 탄생한 구매조합이 급증하였다.

** 1939년에는 220조합, 조합원 33만 8천여 명이었는데, 1947년에는 지역생협 2,044, 직장생협 4,459개였다. 이 통계에는 전시체제 하에 부락회, 산업보국회, 농업회 등의 주민동원체제가 전후 식량난 속에서 식량 획득의 수단으로서 구매조합으로 전환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었다. 당시는 법이 없었으므로 모두 임의단체인 셈이다.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47년에는 전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나 사업실패로 1년 만에 해체하기도 했다.

한편 GHQ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어업협동조합법의 제정을직임을 안 생협진영은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라도 법제정 운동을 벌여 '100만 인 서명, 1인1엔 기금 모집'이라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과는 생협진영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규제투성이의 법[#]이 제정되었으나 조합원의 광범위한 참가를 호소했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생협법 제정을 둘러싼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 당시 생협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1945년 12월 16일, 과거 동경의 가정구매조합이 활성화되었던 동경서부지역에서 '전쟁 전의 소비조합이랑 명칭으로는 대자본에 저항하는 조직으론 약한 데다 소비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의 협동이란 점에서 생활협동조합이란 명칭이 좋지 않은가'하는 논의 속에서 동경서부생활협동조합연합회라는, 생협명칭을 단 조합이 탄생하였다.

(2)일본협동조합연맹 결성과 일본생협연합회 창립

전후 혼란 속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세 흐름이 하나로 뭉치기로 하였다.

카가와계열의 시민형 생협, 가정구매조합 및 노동자 생협 등의 흐름 속에 있었던 야마모토^{##} 계열, 농협, 농민조합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생협을 재건하고자 하던 스프키계열 등의 흐름이 모여 1945년 11월 18일 일본협동조합연맹(일협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는 당시의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이 극심하게 분열되어 대립하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며 전쟁 전 운동에서 보이던 분열적, 독선적인 경향을 배제하고 모든 생협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던 의지의 승리였다.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해 분열하지 않고 조직의 통일을 견지해 온 이 전통은 현재까지 62년 이상 일본 생협운동의 사상적 기점이 되고 있다.

일협동맹은 식량난 타개운동의 선봉에 섰다. 민주적 배급기구 결성을 요구하고 1946년에는 동경에서 해산물의 암시장 율출반출을 막기 위해 생산자 출하단체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直結(직거래)'를 시작했다. 원초적 직거래의 형태이다.

일생협 강령

1. 본 연합회는 생활협동조합 상호 우호를 심화하여 조직의 전국적 통일강화를 목표로 한다.
2. 본 연합회는 착취 없는 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근로대중의 생활 향상을 꾀한다
- 3.본 연합회는 국제협동조합동맹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의 확립을 꾀한다.

일협동맹은 1951년 3월 20일 일본생협연합회^{###}로 재창립되었고 1952년에는 ICA에 가맹하였다.

생협의 사업권은 매매하고 신용사업을 불인정, 비과세 원칙 폐지, 원외 이용 금지, 지역 생협의 사업연합 금지, 의의는 생협만의 단독법이란 점, 운영면에서 로치데일 원칙이 살아 있다는 점. 이후 일생협의 생협법 개정 요구는 계속되었다. 생협법 제정 이후 생협법에 근거한 생협 수는 540조합(지역438, 직장102조합)이었다.

山本秋(야마모토 오사무). 1904년 돗토리현(鳥取県) 출생. 대학시절 관동대지진 당시 동경대학 세틀먼트 운동 주도. 일본무산자소비조합연맹(전국소비조합협회로 발전적 해체) 서기장을 역임. 1941년 검거. 일생협연합회 싱크탱크인 (재)생협총합연구소의 전신인 생활문제연구소가 발족한 1967년부터 관여. 생협운동의 이론정립에 기여. 1983년 [일본생활협동조합운동사] 발간. 1989년 사망.

설립당시 동의 조합수는 74(이중 연합회는 9조직), 이후 일생협으로 줄여 쓴다.

일생협 창립선언

...평화와 보다 나은 생활이야말로 생활협동조합의 이상이며, 그 이상의 관철이야말로 현 단계에 있어 우리에게 부여된 최대의 사명이다...전국의 힘을 결집하여 통일연합회로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운동사 상 일대 시대를 긋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이다. 소비생활협동조합법은 결함투성이이고, 금융의 길은 폐쇄되고, 현 자본주의 경제기구는 우리의 성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 시국의 발전은 재통제의 징표를 보이면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할 직전이다...우리들은 일본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고투의 역사를 바르게 계승함과 함께 보다 더 큰 단결의 힘을 통해 조국의 위기에 대처하고 우리들의 앞에 있는 장애를 타파하고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의 자유와 근로대중의 생활 옹호를 위해 싸울 것을 맹세한다.

(3)점령정책의 전환과 생협운동의 위기

동서 냉전이 시작되자 GHQ의 정책은 '일본의 비군사화, 민주화'에서 '경제자립화, 반공의 요새 구축'으로 전환하였다. 1949년 디트로이트 은행장인 돗지가 방일하여 초군형예산, 환율의 강제적 고정(1달러=360엔, 증세, 공공사업비 삭감, 보조금제도 축소 등, 기업합리화와 정리해고, 경쟁력없는 공장의 축소, 폐쇄란 처방#을 내렸다. 갑작스런 경제정책의 전환은 곧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1949년부터 1년 간 기업도산건수는 10,546건, 공무원은 24만 명의 정원 축소, 통제경제는 급격하게 폐지되었다. 대부분 생협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생협은 최전성기인 47년 9월 6,503개 조합에서 50년 10월엔 인가조합수가 1,130개, 1/6정도로 줄어들었다. 일협동맹 역시 사무국직원이 100명에서 6명으로 줄고 기관지인 [일본협동조합신문]은 50년 4월27일자 107호로 폐간되었다.

위기 타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협동맹은 생협이 경영파탄뿐만 아니라 기본노선을 실종했다고 판단하였다. 전후 민주적 운동의 고양과 통제경제라는 외적 조건에 의해 좌지우지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인식과 함께 생협 스스로가 대중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확실히 조직, 경영기반을 지닌 운동=사업체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성이 싹텄다. 일협동맹은, 단위조합의 말단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단위조합은 조합원을 5인, 10인의 소그룹을 조직하고 이들이 집합하여 하나의 조합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상호 협동하는 발판이자 조합원의 협력동원조직이기도 해야 한다.' 즉, 반회, 가정회의 확립과 출자증강 및 경영기술 향상에 의한 자기자본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뚫고 나가려 했다. 시즈오카(静岡)민주생협에선 리어카에 상품을 싣고 조합원 댁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노동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출자 저금통을 만들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다.

(4)50년대의 격변 속에서 -지역근로자 생협의 전진과 평화운동

1950년대는 현대 일본의 기초가 형성된 격변의 시대이다.

간략하게 50년대를 개괄하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일미단독) 체결, 일미안전보장조약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점령기간은 끝.

그러나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군 점령 하였고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1972년

이를 돗지 라인이라 부른다. 돗지 라인은 1997년 한국의 통화 위기 당시 IMF의 처방과 놀랍게도 흡사하다. 돗지 라인을 추진한 결과 일본의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의 복리후생시설로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던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1953년 반생협의 움직임 시마네현 요네코시(米子市)에서 위장생협조직 설립,

일본상공회의소가 생협 규제 요구를 결의, 정부에 로비활동 전개

1955년 좌우사회당 통합, 보수정당인 자유당, 민주당 합동으로 자유민주당 탄생.

일본의 55년 체제가 성립.

세계원자수소폭탄 금지대회 히로시마 개최

1956년 경제상공계의 반생협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대하는 과정에서 주부 연학회, 총평 등이 모여 소비자단체연학회#를 결성. 매일 주부가 국회청원,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소비자 운동의 모습.

1956년 경제백서 '전후는 지났다' 발행. 자동화 기술혁신, 석유화학공업 진흥,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 유입, 가전3종의 神器(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대량소비 시대 돌입.

1959년 일미안보조약 개정반대 운동. 안보개정에 반대하는 국민회의는 4월부터 통일행동 전개(노동, 평화, 시민, 부인, 학생 조직 참가),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

● 지역근로자생협의 전개와 노동금고의 설립

뚝지 라인에 의해 기업3원칙###이 생겨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불가능했다. 이에 노동운동진영은 노동조합복지대책중앙협의회(일교조, 탄광노조, 사철, 전산, 전국섬유노조, 국철노조 등 기간산업노조가 참가)하여 노조의 상조공제기능을 활성화하고 주택 대책 등을 해결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리하여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 속에 지역근로자생협(직장생협)이 발전하였다. 또한 1951년 후쿠시마현의 노동금고###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것을 계기로 1952년, 53년 전국에 노동금고 설립운동이 확산되었다. 니이가타현에서는 근로자복지대책협의회가 화재공제사업을 창설하여 1951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10월 1일 니이가타 대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때 협의회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공제급부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하고 노동금고에서 1천만 엔을 빌려 전액 지불하였다. (공제급부금은 1,268만 엔이나 되는데 사업시작 직후여서 준비금은 260만 엔뿐이었다)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가입은 일거에 증대하여 7만인에 이르렀다. 이러한 직장생협이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생협으로 확대, 발전한 경우가 니이가타 소고생협이다. 공제조합들은 전국 조직의 필요성을 실감, 1957년에 전국노동자공제조합(약칭-전노제)을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평화운동의 고양과 핵무기실험 금지운동, 안보투쟁

1954년 3월 시즈오카현의 제5福龍丸가 남태평양 비키니섬 근해에서 참다랑이 어획 중 미국의 수폭실험에 피폭당했다. 이에 큰 충격을 입은 동경의 스기나미구(杉並區) 주부들이 시작한 서명 운동이 시민들에게 깊은 감명과 인상을 주어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원수폭금지서명전국협의회가 결성된다. 1954년 9월, 피폭된 선원 쿠보야마씨가 사망하자 서명자수는 급속히 늘어 1955년 8월에는 3천 만 명을 넘어섰다. 일생협은 1952년 ICA 가입이후 적극적으로 국제연대에 참가해왔는데 헬싱키세계평화집회에서는 일생협의 주장으로 8월 6일을 원수폭금지 기념일로 정해 세계 각국이 일제히 행동을 전개하자는

이 단체는 현재도 소비자단체연락기구로서 동경 주부회관에 있다.

임금인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긴급용자 불가, 임금인상으로 인한 적자 보전을 위한 용자는 불가,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의 임금인상은 불허용이란 내용이었다.

노동은행, 근로자신용조합이라고도 한다. 현재도 노동금고로 생활자 대출 업무를 수행.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의 원수폭금지운동은 세계의 평화운동과 연결되어 195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최초로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내외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일생협은 전국적으로 이 집회를 주도하고 원수폭 금지 운동이 분열된[#] 후에도 현재까지도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평화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59년 미일간에 안보교섭이 재개되자 정당, 사회단체, 대학을 망라한 전국적인 투쟁이 일어났다. 안보개정반대운동은 일본의 대중운동사상 최대 규모로 전국에서 640만 명이 참가했다. 생협 중에 조직적으로 투쟁참가를 결의한 곳은 군마현 노동자생협, 츠루오카생협, 대학생협 등인데 이들은 매일같이 국회청원과 조합원을 조직하여 데모에 참가하였다. 생협 관련 유통업자가 폐점 파업하는 투쟁방법도 있었다. 일생협은 59년 총회 때는 안보개정교섭에 반대결의를 표명하고 1960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자 대학생협연합회의 제안대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안보조약 비준의 선택여부를 묻는 것을 요구하고 생협의 말단조직까지 이를 침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일본의 시민생협을 일군 제1세대는 주로 이 당시 안보투쟁이 운동의 원점이 된다.

●황변미반대운동과 10엔우유운동, ‘신문대금 지불반대 100만인 운동’

쌀 배급제 하에 1952년 버마에서 수입된 누런 쌀의 독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수입 배급을 강행하였다. 이에 일생협, 총평(노동조합), 부인단체연합회 등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동경대학생협외 조합원인 농학부 직원이 황변미의 독성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운동은 한층 고양되었다.

당시 조합원 차원의 활동으로 널리 확대되었던 것은 10원 우유운동이었다. 낙농 진흥 정책에 따라 우유가 보급되었는데 낙농가가 4대 과점 기업으로 흡수 통합되자 우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흡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 때 생산자가 소비자와의 산지직결운동을 호소하여, 수도권 생협, 소비자단체에서 10엔 우유 공급을 추진하였다. ‘소비자의 단결로 싸고 좋은 우유를 마시자’, ‘농민에게 젖소를 팔게 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협은 우유 공급을 필수 사업으로 삼아 생협의 조직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주부층 사이에 공동구입이 확산되고 생협을 조직하게 되는 사례가 차례차례 생겼다.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낙농생산자와 연대하여 실현했다는 10엔 우유운동은 일본생협의 産直運動(직거래운동)의 원형이며 일생협에서 개발하는 코프우유의 원형이 되었다.

한편, 1959년 3월, 신문업계가 담합하여 일제히 신문대금을 인상하자, ‘신문대금 지불 반대 100만 인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에는 실제로 100만 인 이상 참가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일생협도 가입한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및 생협 주부들이었는데 소비자운동이 자각적인 대중적 저항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조직의 연대 사무국체제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 정치상황과 맞물리면서 신문업계의 정치공작, 반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불매운

[#]원수폭은 원자수소폭탄제조 실험 금지란 의미. 현재는 반핵평화운동으로 계승되고 있다. 1955년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原水協)이 결성되어 반핵평화운동을 주도해왔으나 1963년 중소대립을 계기로 중국의 핵무기개발에 반대하는 사회당계 그룹이 ‘부분적 핵무기실험 반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여 분열되었다. 이 당시 탈퇴한 그룹은 1965년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原水禁)을 결성하여 1979년까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각기 분리된 대회를 개최하였다. 1980년 일생협의 조정으로 통일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차 분열.

동을 소리높이 외쳤으나 실천은 안 되었다. 결국 신문협회 알선으로 타협이 성립하여 타협이 성립된 시점까지 대금 미지불은 인정하나 그 후로는 신문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구독하는 것으로 운동은 끝났다. 100만이나 자발적으로 참가한 운동이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자발적 운동에 끌려가는 식의 운동은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 후 반생협의 움직임은 거세지고 소비자운동도 주춤하였다.

●사업연합의 구상과 공동구매사업 전개

1954년 유럽생협을 시찰한 일생협 이사의 보고 및 ICA특사로 방일한 켈러박사의 조언을 받아 일생협은 사업연합회를 구상하였다. 유럽생협이 이 당시 사업연합을 통하여 사업을 재건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은 일생협은 1955년 전국생협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구매 및 물류를 추진하고 1958년에는 전일본사업생활협동조합연합회(사업련)를 설립하였다. 이 새로운 연합회를 설립하는 데는 당연히 내부논쟁이 뒤따랐다. 즉, 일생협 내부에 사업조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국이나 농협처럼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사업연합을 추진할 것인가? 만약 두 개의 전국조직을 건설하면 두 개의 지도조직을 만들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있었으나 일생협은 안전성을 중시하여 일생협은 별도의 조직(현명인 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대신 일생협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조직은 사업연합 가입자격이 없음을 정관에 명시하여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일생협의 구상은 일생협-현련-단협이란 일원적 계통조직을 확립하고 현련의 공동구매사업은 사업련으로 일체화하고 현련은 회비로 운영되는 지도연합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사업연합은 최초의 코프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적도 많았으나 운영상 많은 모순이 발생하여 결국 1965년에는 해체, 일생협으로 통합된다.

(5)1960년대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전개

1960년대는 후반에 유통혁명이 일어나 백화점보다 슈퍼마켓 체인이 소매업을 주도하고 지역근로자생협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이 늦어 부진하고 많은 지역이 생협이 없는 공백상태였다. 이에 일생협은 츠루오카생협의 선진적 사례에 착목하여 1962년 운동방침으로 반조직 강화를 제기하였다. 반을 기초로 상품사업은 대량 구매계획위원회, 단품집중방식이며 전국개발위원회-각 지역별 공동구매회의-상품개발위원회가 생협물품의 개발과 공동구매를 담당하였다.

● 선진적이었던 츠루오카(鶴岡) 생협의 조합원활동-가정반, 조합원이 주체로 물품개발

츠루오카생협[#]은 야마가타현의 노동자복지대책위 활동을 이어 1955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조합원은 1,403명. 차 모임 등을 통해 조합 활동을 홍보, 조합에 대해 질문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집회를 항상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했다. 이 모임은 농촌지역에서 정착해서 1961년에는 반조직률이 90%에 다다를 정도였다. 1961년 총회에서 '반은 생협의 기초조직'이라고 분명하게 의의를 설정하였는데 이런 츠루오카생협의 선진적인 사례가 전국의 생협으로 확대되어 '조합원에 의한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 참가'라는 일본 생협운동의 독자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 현재는 生協共立社 共立社連邦 이란 구상 안에 야마가타현에 있는 각 지역생협들을 통일적으로 묶었다. 2004년 현재 조합원수 11만여 명, 사업고는 203억 4천만 엔.

츠틀루오카생협은 이런 조직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 1969년에는 조합원이 11,20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67년에는 내셔널 브랜드인 키코망 간장의 가격인상에 반대하여 '생협간장'을 개발하였다. 이 때 눈가림테스트를 실시해보니 소비자의 입맛이 브랜드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천연양조보다는 인공적 감미료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검증되어 개발위원회의 테스트를 반복한 끝에 독자 개발에 성공, 발매 1개월 반 만에 1만 병을 돌파하였다. 높은 품질은 간장업계에서도 평가받아서 생협 물품의 신용을 높였고 이는 업계의 일방적 가격인상에 대한 주부들의 대안적 행동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공동구입방식의 탄생

당시 구매생협의 판매방식은 주로 '御用聞(방문하여 주문 상황 듣기)'와 점포판매였다. 御用聞의 곤란(자전거, 이동판매차 등으로 방문, 판매와 사전 주문, 예약을 받는 것으로 비효율적이며 인력의 한계가 뚜렷했다)때문에 많은 생협들이 점포를 지향하였다. 그런데 츠틀루오카생협에서 당번이 한달에 한번 반별 공동구입을 집계하여 전달하는 공동구입의 원형이 탄생하였다. 이를 보다 발전시킨 예약공동구입방식이 1966년 당시 千里山생협(오사카소재, 현 코프千里)에서 개발되었다. 즉, '마을지기(世話人)'를 두어 이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방식은,

예약공동구입뉴스와 주문용지를 마을지기에 전달->마을지기는 각 상품별로 양적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권장->조합원은 주문마감일 이전에 주문서를 마을지기에 건네줌, 또는 마을지기가 주문용지를 집계함->마을지기는 생협의 가정담당자직원에게 전달->가정담당자직원은 마을지기에 상품을 배송->조합원은 마을지기에 상품을 받으러 오, 또는 마을지기가 조합원에게 상품을 전해주는 사이클이었다.

1965년 동경 세타가야구(世田谷區)의 신흥주택단지에서 생활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생활클럽생협은 동경 최초로 점포를 가지지 않은 공동구입형 생협으로 반별 예약 공동구입을 정착시켜 이후에도 공동구입형 생협의 대명사가 되었다.

● 내셔널 브랜드 보이콧운동과 코프칼라텔레비 개발

이 당시 일생협의 주된 운동은 유통업자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업계의 독과점체제에 대항하는 운동이었다. 1970년, 71년 칼라 TV의 이종가격에 분개한 일생협은 소비자 5단체와 함께 칼라 TV안사기 운동을 전개하여 업계의 관리가격을 붕괴시켰다. 당시 20인치 칼라 TV는 20만 엔 정도에 팔리고 있었으나 수출가격은 아주쌔다. 그러자 일생협은 NEC랑 제휴하여 조합원가격 98,000엔의 20인치 칼라 TV개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타 업체에서 같은 규격 13만 엔의 칼라 TV가 개발되는 등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대두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소비자운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형 고도성장이 낳은 많은 문제들-미나마타(수은)병, 불량유해식품, 부당표시 범람, 과소과밀, 환경과 건강파괴 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운동영역이 확산되고 지역의 주부들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 차원의 소비자운동#으로 발전되었다.

(6)시민생협군의 탄생과 일생협의 성장중심노선

1960년대 후반은 대학생협의 세대교체기이기도 하였고 지역근로자생협의 부진과 한편으로 도시부에 신흥주택단지가 대거 건설되던 시기였다. 이 당시 일생협은 지역 생협의

일생협이 중심이 된 제1차 전국소비자대회가 열린 것은 1964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68년.

건설을 중점목표로 삼고 대학생협[#]의 모든 인적 역량을 지역생협 건설[#]에 투여하기로 하였다. 1968년 일생협 총회에서 [일생협 장기계획의 과제와 목표 설정]이 제기되었다. 경영활동의 강화와 생협의 확대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형생협을 적극적으로 설립',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거점생협'을 하루빨리 건설하는 게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구체적인 실천 방침은 '현연합회의 지도 하에 대학생협이 앞장서서' 라는 대담한 내용이었다.

일생협은 각 지역생협의 인재를 교류 배치하고 생협의 집배송센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유통업체를 시찰하였다. 구매통합부를 두어 공동구매와 생협 점포의 체인화를 실현하고 코프상품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자금대책은 노동금고, 농수협, 도시 중소기업금융에서 대출받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약 20개 지자체 현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탄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현 사이타마코프^{##}의 전신인 사이타마(埼玉) 시민생협과 코프도쿄^{###}의 전신인 東京생협이다. 사이타마 시민생협은 주공대규모 단지 입주 이전에 구획별로 공동구입반을 설정하고 출자금 5,000엔으로 했다. 주민자치회의 구획과 생협반을 일치시켜 반활동이 지역자치활동과 결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생협의 재정에 대해선 조합원이 책임진다는 발상이다. 발족 1년 후 화재로 본부 및 점포가 소실되나 조합원, 임직원, 또한 전국생협의 지원으로 재건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東京생협은 1969년 동경도생협연합회, 일생협이 전면에 나서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조합원은 1,053명이었다. 그러나 설립 1년 만에 적자 843만 엔의 적자로 전락하였다. 한편 홋카이도(北海道)에선 삿포로시민생협이 설립되었는데 임원진은 슈퍼마켓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여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점포 중심으로 단기간 성장형 생협을 추구하였다. 즉, 다점포화 노선으로 효율추구가 앞질러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적자점포는 폐쇄하여 그 날로 파트노동자를 해고하고 직원에겐 잘리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 노선이었다. 이 생협은 1970년까지는 고도성장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으나 71년부터 경영 파탄에 빠져 결국 일생협의 지원을 받아 노선을 재정비하여 위기를 타개하였다. 일생협의 전통 중에는 한 지역생협이 파탄나면 전국의 생협에서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건설자금을 융통하는 상호부조의 흐름이 있다.

(7)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일생협 후쿠시마(福島) 총회

1970년 후쿠시마에서 열린 일생협대의원총회는 東京생협과 구매통합부를 둘러싼 급속성장노선에 대한 비판과 총괄이 주요 논점이었다. 조합원 대중과 분리된 낙하산방식^{###}과 일생협이 책임을 지는 생협을 조직한다는 역발상으로 소비자 분포나 소득조사도 없이 체인방식으로 대형 점포를 연달아 개설, 과도한 투자를 초래한 점이 비판 내용이었

1967-69년 사이 각 대학생협 총회에서 지역생협 건설이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 당시 대학생협의 주류파는 공산당계가 많았고 비공산당계 대학생협은 메이지대학, 주오대학, 카나가와 대학, 칸사이대학, 규슈대학 등 극히 일부로 이들에 의해 설립된 생협들이 현재 팔시스템생협연합회, 코프千里, 그린코프생협연합회로 발전하였다.

2004년 조합원수 716,933명, 공급고 1,093억 엔. 코프네트사업연합의 주력 단협이며 코프 도쿄와 이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생협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합병하여 조합원 수 200만 규모의 단협을 실현하고자 함.

2004년 조합원수 1,070,026명, 공급고 1,422억 엔, 東京都民生협과 부진을 면치 못했던 東京생협이 1992년 합병하여 탄생. 도쿄지역에서 규모 제1의 생협

설립당시 東京생협의 조합원 이사는 1명뿐이었다.

다. 더욱이 임직원의 단결과 기개가 부족하고 경험과 능력이 없어 일상업무 활동은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저생산성, 저이익을 낳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총회를 마치면서 일생협은 후쿠시마결어(福島結語)라는, 70년대 일본생협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본노선을 천명하였다.

福島結語

- 생협운동은 조합원에 의거하여 민주적 운영을 관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주체적 역량을 기초로 상품정책, 점포정책을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
 - 조합원을 기초로 한 단협의 주체성 확보가 연대 강화로 이어진다.
- 즉, 조합원이 주인공이란 원칙이 다시 한번 실패 속에서 재확인된 것이다.

3. 생협운동의 발전과 동경ICA대회(1970년-1992년)

(1) 1970년대#- 거점생협 건설과 공동구입의 확산

1973년-77년 사이 일본 경제는 제1차 오일쇼크로 소비자물가는 광란 상태인데도 불황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다. 70년 당시 지역생협의 조합원은 약 80만 명이었으나 대학생협이 중심이 된 시민생협의 설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80년에는 지역생협 수는 292만 명, 공급고는 10년 전의 5배로 성장하였다. 또한 반모임 수는 1973년 4만 6천에서 1980년에는 19만 4천으로 확산되었다. 70년대를 거쳐 지역생협은 일본 생협운동을 대표하는 생협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일생협은 당시 시민생협이라 불리던 새로운 형태의 지역생협을 더욱 강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1976년 제1차 중기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거점생협 건설' 방침이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강력한 거점생협을 만들어 소규모 생협들을 합병, 일원화하고 유통업체랑 대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니도록 현연합회와 일생협이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전국에서 거점생협 건설을 위한 합병, 연대가 추진되었다. 도쿄에서는 3 생협이 합병하여 東京시민생협, 카나가와(神奈川) 현에서는 5생협이 합병하여 카나가와생협, 미야기(宮城) 현에서는 대학생협과 현민생협이 통합하여 미야기생협으로 재창립하는 식이었다.

이에 강한 위기감을 느낀 도쿄 및 수도권의 중소 지역생협 19개가 모여 수도권사업연합회##를 결성하여 일생협의 방침에 'NO'를 표명하고 독자노선을 걸었다. 후쿠오카(福岡) 지역에선 일생협의 방침에 반발한 규슈(九州)대학생협 등이 대학생협연합회에서 제명되고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등 진통도 컸다.

한편 반별 공동구입 형태는 육아중인 젊은 주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생협사업의 중요 축으로 정착하였다. 이 시기의 공동구입 발전을 리드한 곳은 생활클럽생협으로 단품 집중주의(단품별로 독립채산)를 채택하여 우유, 달걀, 쌀 3품목만으로도 전 공급고의 53%

70년대 생협의 발전에는 6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 약 10년 동안의 혁신지자체의 탄생이 기여한 바도 크다. 63년 요코하마, 오사카, 68년에는 동경에 혁신계가 지방행정의 수장이 되어 복지, 환경정책에 커다란 전환이 있었다.

현재 Pal System생협연합회. 연대주창자인 초대 이사장 시모야마(下山)씨는, 당시 대학생협이 지원 설립한 시민생협군은 정치적으로 공산당색이 농후하여서 일생협의 거점생협 방침은 공산당에 의한 전국 생협 일원 지배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임원이 공산당계열이 아닌 중소 생협을 일일이 찾아가 연대를 호소하였는데 이에 동참한 생협이 19개, 조합원 수는 총 37,550명이었다. 이 연대사업체는 법인격을 획득한 1990년까지 13년간 임의조직으로 생협 사업과 운동을 펼쳤다. 1990년 수도권코프사업연합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지역을 넘은 사업연합이 인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이며 곧이어 생활클럽생협연합회, 유코프사업연합 등이 줄줄이 인가를 받아 일생협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지역사업연합 결성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를 차지할 정도였다. 1979년 카나가와생협에서 OCR용지와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공동구입의 근대화가 차례차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당시 일생협은 생협총합정보시스템(COMOS)을 개발하여 전국 생협의 시스템 근대화를 추진하고 생협점포에선 1984년부터 POS시스템이 가동되었다.

1970년대를 거쳐 일본의 생협운동은 구매생협(지역생협), 의료, 주택, 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합원의 생활과 건강을 지키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 주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지역생협에선 공동구입과 반이 정착하여 민주적 기초조직과 사업이 긴밀히 결합한 일본형 생협의 모델이 이 시기에 성립하였다.

*생협노동조합의 쟁의가 많았던 시기가 70년대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나니와고베생협(현코프고베)의 민주화투쟁으로 노조가 사상 최초로 임금인상을 내걸고 파업. 동시에 이사회에 민주적 생협운동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합원은 36만 명, 직원은 정직원 5천, 계약·파트직 합쳐서 6,500여 명 정도였는데 이 투쟁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고 조합원활동부 설치, 공동구입방식을 정착시키는 등 조합원, 이사회, 직원 3자가 생협다운 생협을 건설하기 위한 동반자란 인식을 공유하여 이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한편, 1970년 대학의 전공투 이후 생협에 입사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좌파편향적인 쟁의도 있었는데, 생활클럽생협노조, 수도권코프 산하의 회원조합인 아케보노생협의 노조쟁의는 뼈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2)1980년대-생협운동의 비약적 발전*과 동경ICA대회

1985년 생협 조합원은 1천만 명을 돌파, 지역생협의 조직율은 1980년 8%에서 1990년에는 22%까지 신장하였다. 공동구입은 정보화시스템의 개발**로 자동화되어 하나의 업태로서 정비되었다. 공동구입 사업고가 점포 사업고를 웃돈 것은 1987년이였다. 생협의 활동도 식품안전문제와 환경문제, 복지문제, 상호부조(공제)와 평화운동(핵무기철폐운동 및 유니세프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생협의 産地直結(産直, 직거래)이 활발하게 모색되었다. 초기 産直은 중간유통을 배제한 시장의 유통이란 측면이 컸다. 특히 시민생협군은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들어 주로 농수축협과 직접 거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방식을 産直이라 하였고 츠루오카생협처럼 농수축협과 물품거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 교육활동의 연대까지 産直이라 여기고 이를 실천한 경우도 있다. 반면, 수도권코프사업연합은 농협에 반발하여 따로 조직을 꾸린 지역의 영농조직,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여 동지적 관계로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産直의 중심****에 놓았다.

80년대의 활동에 대해선, [어리석은 나라의 부드러운 시민] 등, 생활클럽생협 활동가의 책을 참조할 것,

OCR용지를 통한 주문, 집계시스템, 이용대금 자동이체, 세트센터의 Picking Director, 신선식품의 Process Center, 물품 카달로그의 컬러화.

유니세프운동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1979년 세계 아동의 해에 ICA여성위원회의 제안-한 동이의 물을 어린이에게 보내자-는 캠페인. 일본 내에선 181개 생협이 참가, 1,894만 엔을 모금하여 전달. 이후 세계의 어린이를 위한 활동으로 80년대를 거쳐 정착되었다.

아마가타현의 소규모 양돈농가를 아마가타코프돈산직협의회로 조직하여 독자기준으로 사육한 돼지고기를 정육처리, 가공하는 사업체를 사업연합 인가를 받기 훨씬 전인 1983년 설립, 당시 정부와 농협의 減反정책에 반대한 저항형 농협인 사사오카농협(현JA사사카미)랑 교류, 저농약 짚 직거래 사업을 실시하는 등, 생산-가공-유통-공급의 사이클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거래를 전진시킨 것이 오늘날 '환경과 직거래의 생협'이란 Pal System을 낳았다. 이런 시도도 당시에는 생협이 직접 가공사업을 하느냐고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한편 80년대 초반은 일본 경제 불황으로 유통업계는 적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생협, 규제심화란 움직임이 중소상인단체 및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985년 이들은 생협, 농협도 대형점포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생협이 근대적인 점포를 출점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민당은 대규모 생협 과세안[#]을 상정하였다. 일생협은 조합원운동으로 생협규제에 반대하는 대중 활동,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여론화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또한 새로운 규제에도 버틸 수 있는 경영체질을 강화하여 80년대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생협운동은 당시 정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유럽협동조합운동과는 대조적으로 부각되어 ICA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반 활동과 평화활동은 유럽의 생협운동이 하지 않았던 독자적 운동으로 협동조합의 가치가 살아있는 운동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1992년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ICA동경대회가 열렸으며 83개 국 약 3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일생협은 참가경비를 거출하기 힘든 아시아 12개 국, 28명의 대표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3)코프상품의 탄생과 역사

이 글에서는 일생협이 전국의 생협에게 공급하는 코프브랜드 물품들이 어떤 콘셉트로 개발되고 그 시대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물품은 이념의 덩어리는 아니다. 한국의 생협활동가들은 종종 이 점을 간과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각 물품에는 그 물품의 품격이나 완결성이 갖추어지기까지 종합적 요소가 제대로 구비되어야 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필요하다.

●제 1호 코프상품-[CO-OP생협버터]

1961년 탄생. 처음에는 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랑 직거래로 가격을 낮추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발. 처음엔 합성보존료를 배제할 수 없었으나 1970년 냉장 냉동유통경로가 정비되고 각 집에 냉장고가 보급되자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 배제에 성공.

●글통조림

1961년 개발. 인공감미료(치그로, 사카린)을 넣지 않고 설탕으로만 쥘 글 통조림. 당시는 설탕가격이 비싸서 안전성 평가없이 인공조미료를 쓰던 시대. 이 물품은 선구적으로 안전성에 신경을 쓴 개발품으로 1969년 후생성은 치그로를 식품첨가물리스트에서 배제하여 업계에서 사용금지.

●세제개발-ABS추방과 '보다 안전한 세제 개발'이란 콘셉트

1966년 일반적이었던 ABS(분기형 알킬벤젠술포산나트륨)세제 독성검사를 실시. 독성이 적은 LAS계를 주성분으로 한 [CO-OP소프트]세제 개발. 그러나 LAS계는 생분해성이 나쁘기 때문에 1969년에는 LAS계대신 비LAS계 고급알콜계세제인 [세프타]를 개발. 1972년 인산, 형광표백제를 빼는 등 개선을 거듭해왔다. 일생협은 비누세제도 개발하여 보급했으나 비누세제는 세탁효과가 적고 사용이 불편해서^{##} 비누세제의 사용자는 극히 일부였다. 일생협은 차선택으로 비누세제 대신 시중의 합성세제를 쓰는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대안으로 '보다 나은 세제'라는 콘셉트로 복합세제나 세프타를 개발, 제공했다. 그러나 생활클럽생협, 수도권코프 등은 오로지 비누운동을 전개, 합성, 복합세제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 50만 명 이상, 매출액 1천만 엔 이상의 지역생협 법인세율은 30%라는 것으로 국회 승인.

전자동세탁기에는 무척 불편하다고 한다. 이에 비누세제를 쓰기 위해 전자동세탁기를 이조식 수동식으로 바꾸는 활동가들도 있었다고 한다.

로 노선을 달리했다.

•GMO식품에 대한 입장도 일생협은 배제대신 정확한 표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구입판단은 소비자 몫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가 장기적인 검사체제를 확립하여 안전성 검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나 생활클럽생협, 수도권코프, 그린코프 등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발포제를 땀 치약 개발

1969년 개발. 발포제 성분의 불확실성과 함께 거품으로 인해 실제 이를 닦는 효과가 적을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발상. 1985년에는 발암성 의심물질인 사카린을 땀 치약 개발.

●화장품

1972년부터 개발. 시중에는 조악하고 불순물을 많이 포함한 상품이 많았으나 불필요한 성분을 빼고 심플하고 순수한 성분을 넣은 화장품. 화장품의 거품가격도 제거.

●무심화장실 휴지

1983년 코프도쿄에서 개발. 특허신청. 심이 없는 만큼 자원절약. 이후 이 발상은 업계가 채택. 점차 보급됨.

● Mix Carrot 당근쥬스

1979년 국제아동의 해, 아이들에게 녹색채소를 먹이고 싶다는 어머니의 바람에서 개발 착수. 2년간에 걸친 개발실험 후 1981년 데뷔. 당시 음료시장에는 당근쥬스란 개념은 없었다. 따라서 생협에서 개발한 믹스 캐럿 160g 캔이 전국 최초의 당근쥬스였다. 개발 테마는 당근의 맛과 향을 없애지 않을 것, 색이 고울 것, 마시기 편할 것. 이 세 가지 였다. 그러나 이 조건을 다 맞추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서 개발에 걸린 시간은 2년이였다. 당근이외에 5가지 과일을 배합했는데 맛을 결정하는 것은 의외로 바나나. 주원료인 당근 및 4가지 과일은 국내 주산지에서 조달하나 바나나랑 레몬은 수입산. 수입산은 PHF. 이 배합은 영양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된다. 일본에서 최대로 소비되는 코프상품. (2000년 연간 약 1.3억 개 공급)

●스파게티-이탈리아생협연합회와 제휴한 상품

1979년 [CO-OP이탈리아스파게티] 개발. 이탈리아 생협에서 취급하는 그대로(듀람세모리나 밀가루를 이탈리아 전국에서 이탈리아가공업체가 일괄 생산)를 1개월 동안 선박으로 수입, 조합원에게 공급하였다. 처음에는 운송도중 포장재 파손이 많았으나 이탈리아 생협 측은 '스파게티는 삶아서 먹으므로 포장지가 뜯어져도 품질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무시했다고 한다. 이를 일생협이 끈질기게 품질관리를 요구해, 검증을 강화하여 운송하게 되었다. 훗카이도산 국산스파게티를 개발한 것은 1995년.

●코프 칼라 텔레비 20인치

10쪽 참조. 내셔널 브랜드의 관리가격에 대한 대안이자 투쟁. 1971년 개발.

그 외 수산가공물은 첨가물(표백제) 배제, 국내산 농산물 가공제품으로 [일본시리즈]전개, 건조식품 역시 일본의 소재를 살리는 시리즈, 유제품은 안전성과 위생관리, 영양가, 수입품은 직거래를 이용한 상품(영국산 위스키, 덴마크산 햄 등) 등, 각각 중점이 다른 상품군을 개발. 현재 일생협의 코프상품은 약 5400품목, 각 지역생협, 사업연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을 합치면 약 1만 품목 이상, 공급고는 추정 5천억 엔 이상이다. (2000년)

1976년 총회에서 의결된 상품정책 중	1987년 [코프상품 정책안]
[코프상품의 의의] 상표주의, 관리가격 타파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저가격 실현 우량 품질, 적정사양에 의한 상품가치의 개혁 유해물질 배제와 부당표시 시정 [코프상품의 역할]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 향상 소비자의 상품에 관한 요구 실현 생협운동의 대중적 발전 소비자의 연대와 협동사상의 촉진.	1)코프상품의 기본점(강화 심화해야 할 관점) :안전안심/저렴한 가격/품질/사용자의 입장/사회적 시점, 운동발전의 관점 2)새롭게 추구해야 할 점(확대발전시켜야 할 관점): 상품기능/생활/협동 3)새로운 코프상품 이미지 확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뢰, 합리성, 창조, 신선, 협동

●2리스트운동-안심, 안전의 기준을 리드함

1985년부터 94년에 걸쳐 학자, 전문가를 결집하여 정부가 허가하고 있는 합성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연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제1차 리스트를 94년에 발표하였다. 일생협은 독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17품목의 첨가물 리스트(2리스트)를 자주적으로 추방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그동안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천연첨가물연구회를 발족시켜 천연첨가물의 과학적인 안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외 영향을 받은 정부는 199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천연첨가물도 표시의무로 하였다. 또한 1994년 4월부터 3년 6개월에 걸쳐 만든 [간류농약데이터집]은 총 검사 항목 수 291,554에 대한 기록과 기준이 있어 생산, 가공, 유통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2년 일생협에 상품시험실이 탄생, 현재의 품검사센터로 발전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ISO9001인증을 취득, 2001년에는 ISO14001를 취득하였다.

4 시대 변화와 자기혁신의 요청(1993년-현재)

1991년 겨울부터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을 맞이하였다. 주가와 지가가 폭락하고 90년대 후반에는 공적 투자를 통해서도 부실채권정리가 안되어 660억 엔의 재정적자, 특히 지방경제는 침체일로로 걸었다. 일본 생협은 1994년 처음으로 전년대 성장을 밀돌았다. 일생협은 각 단협의 조직, 사업의 강화와 경영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불황기를 넘으려고 했으나 생협의 신뢰를 상실케 하는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홋카이도 3생협(쿠시로, 道央시민생협, 코프삿포로)의 경영위기 1997년 오사카이즈미생협 부이사장의 생협 사유화와 내부고발자 해고사건, 1998년 아키타(秋田)현 유리(由利)생협 파산으로 조합원 출자금 9천만 엔 손실과 같은 사건이다. 경영부실, 도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점포사업의 적자였다. 점포 경영이 미숙한 가운데 자기 능력을 넘는 과대 투자가 많았다. 또한 1995년-97년 사이 대의원총회에서 분란이 일어나 임원이 불신임 받거나 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줄줄이 일어났다. 생협이 주력을 기울인 직거래 개발품의 식품표시 위장, 원료위장 사건도 빈번이 발생하였다.

일생협은 각 단협의 Top Management의 강화, 민주적 기관운영 매뉴얼, 생협회계기준

코프카나가와, 코프시가, 코프오이타, 코프후쿠시마 등

등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전국의 생협에 호소하여 생협경영지원기구·연대기금 창설을 창설하였다.(1997년, 67생협 참가, 105억 엔 기금조성)

이 시기에 생협의 신뢰상실의 위기, 불황기 위기 극복을 위해 이루어진 흐름이 종래의 지역을 뛰어넘은 사업연합의 추진과 COMO JAPAN(일본생협점포근대화기구)이다.

● 새로운 지역연대의 모색-사업연합 건설

80년대까지 지역생협의 구도는 일생협(내셔널 섹터)-현연합회(지역섹터)-단협이란 조직 체계였다. 그러나 1976년 일생협이 거점생협 건설을 방침으로 추진한 때부터 독자노선을 걸었던 생활클럽생협, 수도권코프사업연합, 유코프# 사업연합이 사업공란을 타개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를 넘은 사업연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일생협으로선 반가운 사안은 아니었으나 새로운 사업연합에 가입한 생협은 모두 현연합회 및 일생협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후생성과 절충하게 된다. 1990년 2월 수도권코프사업연합이 최초로 광역지자체를 넘은 사업연합으로서 후생성인가를 받아 3월에는 생활클럽생협, 유코프사업연합이 인가를 받고 코프네트사업연합(92년), 그린코프사업연합(93년), 동해코프사업연합(93년) 등 차례차례로 설립되었다.

● 수도권코프사업연합##의 도전-연대의 20년 역사

①1970-1977년: 회원생협의 탄생과 연대의 시작

구사회당계열, 안보투쟁에 참가했던 학생 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일생협의 거점생협 건설 방침에 반발하여 연대를 모색, 상근자는 오직 1인, 치바(千葉)현에선 현연합회 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자본상태가 부실하여 일생협의 코프상품을 받을 수도 없었던 약자들의 집합체라 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던 상태

②1978년-1984년: 고난, 고투, 비약에의 시련

일생협의 지도에 따른 거점생협은 OCR용지, 정보화시스템 도입으로 성장을 계속하는 반면 이혜택을 못 본 상황에서 사업의 실패, 노동쟁의, 회원생협의 경영위기, 노선논쟁의 일상화(규모를 추구해선 안 된다, 정보화는 조합원과 거리를 낳는다, 연합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사업연합 분리독립의 움직임 등), 그러나 이 시기 조합원들은 '합성세제추방운동'과 '쌀 수입반대운동'으로 결집, 선물용으로 받은 합성세제를 트럭 2대에 실어서 일본비누세제공업회에 산적하고 불태우는 등 합성세제 제조반대, 비누사용운동을 펼침. 한편, 1984년 減反(쌀재배면적의 축소)정책, 흉작에 따른 한국쌀 수입에 반대하여 일본농업을 지키자는 직거태운동이 열정적으로 펼쳐짐.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가장 태디컬하게 투쟁했던 시기.

③1985년-1989년: 과거를 탈피, 근대화에 돌입

시모야마제언(약소생협에서 탈피하자, 사업연합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운동은 본권화)를 계기로 과거 체질에서 탈피, 근대화에 돌입, 직거태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사업체(현재 Pal Meat)를 설립, 성장에의 스텝을 밟음.

④1990년- : 법인화, 일체화, 비약의 시대로

당시의 공동구입시스템과는 달리 타마(多摩) 지역에서 신업태개발프로젝트 착수, 개인별 공급형태를 개발, 6년 만에 0에서 250억 엔의 사업규모로 성장시킴. 90년대 후반 반별 공동구입과 점포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개인별 공급을 주로 하는 무점포시스템을 확립하여 탄탄한 성장을 이룸.

● COMO JAPAN (일본생협점포근대화기구) 설립

일생협의 유럽생협 시찰 후 지역거점생협을 중심으로 생협 경영 근대화를 목표로 삼고 1990년 11월 설립되었다. 코프삿포로, 미야기코프, 사이타마코프, 都民生협, 유코프사업연

시즈오카생협, 코프카나가와가 주도, 나중에 아바나시현의 생협도 참가함.

자세한 내용은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합, 교토생협, 오사카이즈미생협, 나니와고베생협, 에프코프, 메이킨생협 등 10단협 1사업 연합이 참가하였다. 당시 이들의 생협 점포 수는 약 800, 점포공급고는 약 7천 5백억 엔 규모였다. 점포 개발지원, 공동구매, 인재육성, 정보시스템, 연구교류회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출점가이드를 작성하여 생협이 주력으로 전개할 점포 표준으로 450평형 식생활 완결형 슈퍼마켓, 또는 700평 규모의 일상생활 대응형 슈퍼마켓을 결정. 1992년에는 코프고베에 점포운영 연수제도를 두어 전국생협에서 유학생을 고베에 결집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협의 점포사업은 계속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다. 생협 점포보다는 이온그룹, 이토요카도그룹 등 일반 유통업체의 약진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이다. 일생협은 COMO JAPAN에 거액의 자금투자, 인원을 투여하였으나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은 현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한신대지진과 협동의 정신

1995년 1월 17일, 효고(兵庫) 현에서 진도7.2 대지진이 발생하여 6,281명, 부상34,900명, 피해자 42만 세대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115만 세대를 조직하고 있던 코프고베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부상자 구출과 생활물자 공급활동을 펼쳤고 전국의 생협이 모금활동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모여들어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코프고베는 고베(神戸)시랑 '긴급사태발생시 생활물자 확보를 위한 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생협 시설이 파괴된 속에서도 지역 전체에 생활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고베에 생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피해지에는 생협이 있다'고까지 평가를 받았다.

5. 최근의 주요한 변화

● 2010년 일생협연합회 비전 작성-2005년

전후 60년 동안의 성과와 현주소를 정리하고 2010년을 목표로 한 기본방침을 설정함.

일본의 생협이 추구하는 바를 '지역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전국 2천2백만 조합원의 소비자조직으로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제안,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표명.

①생협의 21세기이념(1997년) : 자립한 시민의 협동의 힘으로 인간다운 생활 창조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②생협의 사회적 활동

식품안전 활동	코프물품의 개발과 보급, 식품안전법 제정과 식품위생법의 전면적 개정에 공헌, 국회청원서명 1,370만 명
소비자정책 수립	소비자기본법성립에 공헌, 소비생활조례개선운동(29개 지자체)
환경보전활동	ISO14001인증 취득(79개 생협), CO2삭감을 위한 자주적 행동계획 책정(52개 생협, 사업액대비 79%), 친환경물품 보급(연간 124억 엔)
복지, 육아지원활동	개호보험 적용 복지사업(44지자체, 483곳), 생협의 품앗이생활지원네트워크(くらしの助け合いの会)는 전국 75개 생협, 3만5천 명이 활동. 자유참가 육아살롱운영은 183곳, 5만8천 명이 참가.
농업정책, 먹을거리 교육 실천	직거래사업을 통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이 도농교류 참가, 일본농어 재생을 위한 농업정책 제언, 생협판 먹을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책정
자연재해 부흥지원	한신대지진 피해복구활동, 니이가타대지진 지원활동(전국에서 300대의 생협배송트럭, 1400명의 지원인력, 지원모금 4.6억 엔) 재해협정을 체결(301곳의 지자체랑)
평화와 국제지원 활동	전국에서 핵반대 평화집회 개최(800곳, 20만 명참가) 유니세프 모금 총액 50억 엔 달성(1983년-2004년)
지자체와 협력촉진	식품안전정책과 소비자정책 면에서

③생협 사업 :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한다.

조합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생활 속에서 안심을 창조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구매사업, 공제사업,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사회공헌하기 위해서 사업과 경영구조개혁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채산성을 개선한다.

구매사업	무점포사업-무점포사업의 정보화도입을 추진하여 조합원의 편리성을 향상시킴 점포사업-업무역량을 개선하고 조합원이 지지할만한 지역밀착형 식품점포를 정착
공제사업	여성과 어린이의 생활상의 안심을 보장한다.
복지사업	품앗이생활지원네트워크의 가사보조활동, 식사모임을 추진하고 개호보험사업을 확대한다.

==>중요한 수단이 생협법 개정과 지역 사업연합의 설립, 강화

● 생협법 개정 움직임

일본의 생협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전면적 개정 없이 60년간 유지되어왔다. 일생협연합회는 소비자를 증시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구축, 소자녀고령화지역사회, 극심한 지구적 차원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생협법 개정에 나섰고 2007년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 일본생협법과 타 협동조합법 비교

생협법	협동조합법
이사회 전원이 생협을 대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
조합원 감사에 의한 감사규정	대규모조합및 연합회에 대한 연합회,중앙회 감사제도
공제사업의 계약자 보호,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불충분	농협법은 2004년 법 개정
사업권역은 광역지자체로 규제되어 있음	사업권역에 대한 규제 없음
행정관청의 허가 없는 원외이용 금지	조합원 이용의 20% 범위 내에서 원외이용 인정
대출/ 신용제공에 대한 규정 없음	대부, 예금사업도 가능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 이사회제도를 명기, 사외이사 규정 추가, 대규모 생협의 외부감사제도 도입, 임원의 책임 명기, 조합원의 직접청구권 인정(대의원 이외의 조합원의 직접청구권, 대표소송제 도입)

②공제사업 개선을 위해 : 공제 사업의 계약자 보호와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대출/신용제공 사업이 가능토록 명기.

③사업능력 개선을 위해 : 사업 권역 제한 철폐

④ 경쟁력 확보를 위해 : 원외이용을 타 협동조합 수준으로 조정.

● 2005년 일본생협의 현황

항목	2005년 현황		
	수치	단위	전년대비(%)
전체생협 수	629	생협	100.5
구매생협 수 (그 중 지역생협)	500(161)	생협	100
의료생협	116	생협	100
공제/주택생협	9	생협	90
조합원 수	23,409	천 명	102.6
구매생협 가입자 수 (그 중 지역생협)	20,183 (16,521)	천 명	103 (103.5)
의료생협	2,379	천 명	99.8
공제/주택	847	천 명	102
총 사업액	3,317,061	백만 엔	101.3
구매생협 사업액	3,044,259	백만 엔	101.3
1인당 월 이용액	12,754	엔	98.5
의료생협 사업액	265,313	백만 엔	101.8
공제/주택 사업액	7,489	백만 엔	82.3
조합원 출자금	656,660	백만 엔	104.6
1인당 출자금	28,052	엔	101.9
조합원 차입금	68,678	백만 엔	87.9
점포 수	1,175	점	98.1
매장면적	1,255,246	평방미터	99.7
정규임직원 수	51,828	명	99.2
일생협연합회 공급액	345,896	백만 엔	110.4
소매시장 점유율	2.91	%	

=====

■ 세계의 생협#

1. 유럽의 생협

유럽의 생협은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노동은 노동자조합을 통해서, 정치는 노동자정당을 통해서, 소비는 생협을 통해서) 속에 있었으나 70년대 이후 유통혁명기에 시민형으로 전환하지 못한 프랑스, 독일의 생협은 기업에 팔리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반면, 전통적인 생협(산업혁명과 공업혁명시기의 구매생협)에서 개방된 시민사회에 발맞추어 자기 혁신을 이룬 나라의 생협은 70년대, 80년대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일생협 국제부장이었던 야마우치(山内) 씨가 2005년 출간한 [유럽의 생협-구조개혁을 이룬 3개의 요인]이란 책에서는 성공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루고 약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스페인의 생협을 두고

①직면한 상황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공유함

②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전략의 명료화

③생협의 이념을 재확인하고 일상 업무 속에서 구체화하여 실천함

이 세 가지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사업연대를 이루는 목적인 critical mass의 창출과 운영경비의 삭감을 철저하게 실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생협

90년대 근본적 개혁을 이루어 현재의 최대의 생협 Co-operative Group그룹이 탄생하였다. 이 그룹은 1840년 시작한 오래된 생협인데 대담한 개혁을 실시, 1993년에는 전국 생협물품 구매조직인 CRTG(Co-operative Retail Trading Group)를 설립하여 유통업체의 전국 체인화에 지지 않도록 물품의 공동구매, 코프 물품 개발 등을 통일적으로 전개하였다. 2003년 10년 만에 이를 완성, 편의점인 Welcome, Alldays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점포를 운영, 대규모 점포는 부진하나 소규모 편의점은 약진하고 있다. 공정무역에 힘을 쏟아 영국의 소매업계에서 공정무역상품을 가장 많이 취급한다. 점포 이용자는 개인조합원으로 취급하여 2004년에는 Co-op Divi## 제도를 부활시켰다. 여행, 장례, 보험, 자동차판매, 약국체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획득하고 있다.

-><http://www.co-op.co.uk>

●이탈리아생협

		단위(천유로)
1	조합원을 위해서(대의제 및 참가경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비, 홍보경비)	246,154
2	소비자를 위해서(품질과 안전, 교육연수, 정보조사, 환경보호 경비)	24,123
3	인재 육성(전문교육 및 협동조합 교육)	16,098
4	시민사회(사회적 시민적 연대, 지역문화발전, 개도국지원)	9,815
5	1-4까지의 소계	296,190
6	협동조합운동(내부 유보금, 협동조합개발기금)	170,845
7	총계	467,035

70년대 경영

위기, 80년대 프랑스, 독일 생협의 붕괴, 90년대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

세계의 생협들은 대부분 점포를 통한 사업을 펼치며 무점포, 공동구입방식을 펼치고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뿐이다. 또한 일본 생협처럼 여성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조합 활동에 참가하여 운동을 이끌어 온 사례도 좀처럼 찾을 수 없다.

1844년 탄생한 제도. 연2회 조합원 구매액에 따른 할당금으로 80년대에는 거의 유명무실.

하고 부활하였다. 단협과 지역연합, 전국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전국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합의 형성(consensus)의 원칙,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을 기초로 삼았다. 2000년 이후 조합원 500만 명 돌파, 전국의 9개 대형 생협 조합원이 490만 명으로 전국 생협의 90% 이상을 차지, 수퍼마켓, 하이퍼마켓에서 약진, 저가격 실현(전국 평균 소매가보다 1.3%), 코프상품의 고품질, 공정무역 취급이 3대 경쟁력이다. 이탈리아 코프 물품의 6대 컨셉은 안전, 저렴, 환경에 부하가 적은 물품, 조합원이 선택한 물품, 윤리, 맛이다. 각 시리즈별로 물품을 순차 개발한다. 예를 들어 유기재배 시리즈, 공정무역 시리즈, 저환경부하제품 시리즈 등등. 이탈리아생협은 유럽의 생협 중에는 특이하게 조합원의 존재를 중시하는 생협으로 꼽힌다. social balance seet(사회적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생협의 이념을 실제로 얼마나 구현했는가를 금액으로 점검하고 있다. 다음은 2003년 social balance seet의 예,

-> <http://www.coop.it>

●스페인의 생협-에로스키생협

에로스키 생협은 몬드라곤생협그룹에서 1969년 탄생. 초기엔 스페인 북부지역에서, 지금은 스페인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원은 34만 명, 사업고는 약 52억 유로(7조 원). 1978년부터 생협 PB물품을 개발, 1983년엔 소비자단체로 인가받았다. 2000년 에로스키생협재단을 설립하여 소비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몬드라곤그룹인 만큼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 대표가 대등하게 이사회에 참가한다. 신규고용인 경우에도 파트너 회사를 인수할 때 매장근무자를 모두 정규 채용하는 등 일하는 자의 노동권 준수와 사회적 활동 강화에 앞장서 스페인에서 최초로 SA8000인증#을 받았다. (평가내용은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 소비자와 직원, 거래처, 지역사회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경영)

에로스키생협의 가치는 ①조합원의 만족을 얻을 것 ②노동자의 기업참가 모델이 될 것 ③업계에서 Top Leading company가 될 것 ④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 ⑤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것. 에로스키생협재단은 유엔의 사회개발활동을 스페인의 소비자에게 적극 제기, 홍보한 활동으로 2001년부터 3년 연속 표창을 받기도 했다. 사업 분야는 식료품 수퍼체인 및 여행대리점, 가솔린대리점, 화장품점 등. -><http://www.grupoeroski.es/>

*몬드라곤 그룹의 조직도

협동조합회의

이사회

금융그룹(노동금융)

산업그룹

유통그룹(에로스키생협그룹)

●북유럽의 생협-강력한 사업연합 코프 노르덴

2002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생협연합회가 출자하여 3국의 생협 점포사업을 통괄하는 코프노르덴(주식회사)를 설립. 3국의 조합원 규모는 500만 명, 각 나라의 216 단협이 소유한 953세 점포의 공동구매, 관리, 상품개발 등을 담당, 운영. 핀란드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고 단독으로 2대 대형 생협 그룹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유럽의 생협은 사회 자체가 환경, 복지, 제3세계 지원이 정착되어 있는 만큼 각 나라 생협에서는 아프리카 환경

Social Accountability인증. 아동노동의 철폐, 차별철폐,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노동시간관리, 경영관리 시스템 등에 걸친 국제규격으로 1997년 탄생.

복구 등 장기플랜에 투자하고 있다.

2. 북아메리카의 생협

●캘거리생협(북아메리카 최대의 생협)

캐나다는 협동조합이 시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농어협, 삼림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 보건, 보육 등 서비스 제공협동조합이 곳곳에 있어 시민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그 중 캘거리생협은 1956년 설립하여 지금은 지역 소매업계에서 40%의 셰어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원 39만 명, 직원 3,600명, 18군데의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친다. 지역에 공헌하는 것을 강조하여 2003년엔 약 160만 달러(10억 엔)를 캘거리지역의 비영리시민단체, 심장병 기금, 간연구소에 기부했다. 단지 사업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기부를 정착시켰다. 즉,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면 3센트를 지급하는데 이 금액을 지역 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다. 캘거리 생협의 캐치프레이즈는 Locally owned, Locally operated! CO-OP

-><http://www.calgarycoop.com/>

●미국의 Co-op America

미국의 생협은 보통 Food Co-op라고 한다. 소매업의 한 형태로 약 325개의 푸드코프, Buying Club이라는 공동구입형도 있다. 1937년 설립된 버클리대학생협이 유명했으나 80년대 도산하였고 많은 구매생협도 기업인수를 당하는 등 미국 사회에서 푸드 코프는 별 매력이 없다고도 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푸드코프와는 전혀 다른 코프아메리카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Co-op America는 1992년 NPO조직 501단체가 모여 설립 되었다. 비영리조직으로 가입단체는 소비자, 사업가, 자산 운용가, 비영리지역단체 등 다양하다. 이 사회는 이들 단체에서 선출되며 코프아메리카의 운영과 사업은 Workers Co-op(노동자협동조합)가 맡는다. 노동자협동조합의 대표도 이사회 멤버이다.

이들의 캐치프레이즈는 '공정한 지구를 위한 경제적 행동(economic action for a just planet)', 사명은 '사회정의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to create a socially just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를 만들어 갈 것, 행동방침은 '우리는 문제만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다.(We find solutions -not just problems)'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체, 비영리조직, 방법,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전국에 배포, 송신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 투자를 실천한다. 주요 행사로 Green Festival이라는 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토요타 자동차가 청정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협력 전시할 만큼 파급력이 인정된다. 웹사이트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실려 있다. 예를 들면 의류를 재활용하여 동물의 보호 쿠션으로 사용하자는 캠페인, Green Wedding 등. 2005년 연차보고서에는 1억 달러를 혜택 받지 못한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고, 400여 단체(교회, 학교, 직장, 공동체), 약 20만 명이 공정무역을 추진하도록 하였다고 쓰여 있다. 여러 단체, 개인이 모인 비영리단체인데 왜 co-op란 명칭을 붙여 쓰고 있는가? 미국사회에서는 어쩌면 또 하나의 대안일지도 모른다. -> <http://www.coopamerica.org/>

3. 아시아의 생협-국가로부터의 독립

아시아의 협동조합은 반관반민의 성격이 강하고 대부분 국가로부터 규제 지원을 받거

나 보호를 받는 상태였다. 따라서 아시아협동조합의 제1의 과제는 정부로부터의 자립과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겠다. 또한 협동조합 자체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협동조합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 ICA 는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국(ICA ROAP)#을 설치하여 두 가지 차원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생협은 싱가포르의 Fair Price 생협이나 베트남의 사이공코프처럼 점포근대화를 이루고 시장점유율을 높인 곳도 있다. 인도,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에 생협이 있다. 일생협은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점포근대화를 주제로 매니저연수를 실시, 아시아 각 국에서 생협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 몇으면서-자기혁신과 다양성의 공존을 DNA로 삼을 수 있는가?

1. 협동조합원칙의 변화과정

●국제협동조합원칙으로서 로치데일원칙(1937-1966)

1. 공개의 원칙(가입, 탈퇴의 자유) Open membership
2. 민주적 운영의 원칙(1인 1표) Democratic control; one person, one vote.
3. 이용고 비율 할당의 원칙 Distribution of surplus in proportion to trade
4. 출자금 이자제한의 원칙 Payment of limited interest on capital
5.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 원칙 Political and religious neutrality
6. 현금거래의 원칙 Cash trading
7. 교육활동 촉진의 원칙 Promotion of education

●ICA의 협동조합원칙(1996-1995)

1. 공개의 원칙
2. 민주적 운영의 원칙
3. 출자금 이자제한의 원칙
4. 잉여금 배분의 원칙
5. 교육활동촉진의 원칙
6. 협동조합 협동의 원칙

●ICA 의 새로운 협동조합원칙(1995-현재)

1. 자발적이며 열린 조합원제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3.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자치와 자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5. 교육, 훈련 및 홍보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협동조합 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커뮤니티에의 관여 Concern for Community

시대적 상황에 맞게 협동조합이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고 거기에 맞게 원칙은 변화하였다. 더 많은 공감대, 참가자를 얻기 위한 변화,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Definition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2004년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2개국, 50조직이 가맹.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사업체란 수단을 통해 목적을 실현하는 자치 단체인 것이다.

Values

Co-operatives are based on th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In the tradition of their founders, co-operative members believe in the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2. 일본생협운동의 과제

일본사회는 7,80년대의 '1억 중류'라는 중산층 사회가 90년대 장기 불황을 거쳐 해체되고 강력한 미일동맹과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고이즈미 개혁으로 격차사회, 사회안전망의 붕괴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 유통업체와의 대결과 경쟁력을 내걸며 경영개혁과 체질 개선을 주창해 온 일생협은 2000년 들어서도 2010년 비전을 내걸고 유럽 생협의 부활에서 보이는 전국 규모의 강력한 사업연대, 자원의 집중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업연합 중 가장 규모가 큰 코프네트사업연합과 일생협은 물품개발, 정보시스템, 물류를 통일하여 시스템 투자비용의 중복, 비효율을 제거하여 그 만큼 물품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연봉 300만 엔 이하의 생활자가 점점 늘어가는 격차사회 속에서 생협이 실현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생협법의 규제-지역제한-을 해제하여 광역지자체를 넘어서도 단협 조직이 가능하도록 생협법 개정에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거대자본과 같은 씨름판에서 경쟁하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생협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생협은 사람의 조직이며 다양한 의사와 의식을 사업과 모습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지역 사회에서 협동과 민주적인 네트워크와 사업을 정착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시도도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일본사회는 정부, 기업, 노동조합, 생협, 농협 할 것 없이 조직사회의 피로가 만연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형해화 하고 정부의 부정을 규탄하는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의 복지연금을 횡령하고 농협이 앞장서서 값싼 해외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개혁대상이라고 남 탓하는 가운데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지역 사회는 기존의 공동체 기능을 잃고 고립과 무관심으로 치달았다. 이 때, 각 지역사회를 지탱한 사람들은 조직의 논리가 아니라 자유롭고 주체적인 자발성에 기초하여 대안을 만들어 온 개인과 그룹들이었다. 생협 속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활동(워커즈 콜렉티브, 워커즈 코프, NPO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특정한 목적을 지닌 생협(환경생협, 고령자생협, 생활자신용생협 등)들이 펼쳐졌다.

과거 소비자운동을 주도해 왔던 일본의 생협의 현 시대적 과제는 사업역량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회개혁형 생협으로 거듭나는 것,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결합하여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 과소, 쇠퇴하는 지역사회의 재생에 역량을 투여하는 것이

2006년 2월, 일본협동조합경영연구소(CRI) 심포지움 [시장주의 경제와 협동조합의 역할]에서, Pal System생협연합회 와카모리(若森) 전무의 발언 중에서.

일본의 재정적자는 지방채, 국채 합쳐서 800조 엔을 넘었으며 이를 1만 엔짜리 화폐로 짤는다고 치면 후지산을 2,153개나 짤 수 있는, 우주적인 액수이다.

아닐까?

3. 지금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 Innovation과 다양성의 공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 협동조합, 공제조합, 또는 association 및 NPO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 1989년 EU위원회 DG23국 기업국(Enterprise)에 사회적 경제과(Social Economy Unit)가 설치됨. 2000년 위원회 개편에 따라 DG Enterprise Unit B3(Crafts, Small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Muturals)로 통합됨.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 : 또는 제3섹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 미 내국세 입법 501항에 따라 세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조직을 일컬어 비영리섹터로 칭했다. 이를 1999년 존스 홉킨스대학의 국제세미나에서 일반화했다.

그런데 EU에선 가맹국 15개의 학자들로 구성된 EMES NETWORK(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란 연구그룹을 만들어 1996년-99년 사이 '사회적 기업,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도구'란 연구 테마를 집대성하여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란 책을 발행했다. (Defourny 편집, 2001년) 이 연구프로젝트는 'from the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s'라 하여 사회적 기업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종래의 협동조합, 공제조합이나 시민단체를 넘어서 목적과 과정은 사회성을 강조하되 기업의 이노베이션 활동(슈페터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목적을 실현하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특히 유럽에선 쇠퇴하는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재생시키고 있는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장애인, 알콜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실천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국, 프랑스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유럽의 15개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의 공통된 정의는 ①재화, 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위한 지속적 활동 ②고도의 자율성 ③높은 경제적 리스크 ④최소량의 유상노동 ⑤커뮤니티에 공헌한다는 명확한 목적 ⑥시민그룹이 설립한 조직 ⑦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 ⑧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이 참가 ⑨이윤분배 제한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비영리섹터 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업이란 영역이 등장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이는 전통적인 협동조합(생협도 포함)은 기업의 부단한 혁신정신을, 기업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We find solutions -not just problems! 이게 가능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면서도 이 시대와 자신의 상황에 걸 맞는 해결방법을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협동조합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現代日本生協運動史, 상/하, 일생협, 2002년

もっと生協らしくもっと労組らしく生協労連30年の歩み, 전국생협노동조합연합회, 1998년
連帯と共同のに二十年, 수도권코프사업연합, 1997년

社會的企業研究會資料集, 2005년 11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1992년부터 ISTR(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arch)라는 국제세미나를 격년으로 개최, Voluntas라는 잡지를 통해 시민사회 연구활동과 동향을 소개함.

世界に架ける虹の橋, 일생협, 2004년
코프商品物語, 일생협, 2000년
ヨーロッパの生協, 山内明子, 코프出版, 2005년
日本生協連合會ホームページ, <http://jccu.coop/>

*인용문에는 일일이 출처를 밝혀야 하나 출판원고가 아니라 강연 원고이므로
읽기 편하게 출처를 생략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사실 내용은 위 참고자료에서 거의 인용
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김형미)